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 1부

###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07
제2장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3

## 2부

### 2022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22년도 나라살림 종합	39
1. 재정운용 여건	41
2. 세입 규모	42
3. 지출 규모	48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52
제2장 재정운용 방향	57
1. 자원배분 방향	59
2. 중점 추진과제	65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153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55
1. 보건·복지·고용 분야	157
2. 교육 분야	182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89
4. R&D 분야	201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09
6. SOC 분야	219





7. 농림·수산·식품 분야	230
8. 환경 분야	242
9. 국방 분야	251
10. 외교·통일 분야	256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63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273

### 3부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b>제1장 2022년도 예산</b>	<b>283</b>
1. 2022년도 예산총칙	285
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290
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Special Accounts)	324
4.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326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328
6.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329
<b>제2장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b>	<b>331</b>
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333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335
3. 기금수입 (Fund Revenues)	336
4. 기금지출 (Fund Expenditures)	340
<b>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b>	<b>345</b>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347

#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 제1장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 ▶ 제2장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제 1 장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 대통령 시정연설



# 2022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텃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 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 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열 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 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키며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 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멍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

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 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대통령 **문 재 인**

# 제 2 장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 2022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한경제, 민생 버팀목”이 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 대응과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한 재정운용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초연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적 포용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를 향한 징검다리도  
놓았습니다.

또한 BIG3 산업육성, 제2벤처붐 조성 등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의 동력을  
높였으며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대외적 위협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을 통해 우리  
공급망을 더욱 튼튼히 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초유의 위기를 맞았으나, 정부는 6차례에  
걸친 117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21년 8.9% 증가한 확장예산 등 재정역량을 총동원하여  
방역지원 강화, 코로나 피해 및 경기회복 지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미래투자 등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도 G7 수준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등 위기에 강한 경제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최단기간(299일) 내 수출 1조불 달성, 2년 연속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 발행 등 국제적 위상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며 또 다른 도전이 첩첩히 쌓여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백신 접종률이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하며이번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남긴 新양극화 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사회활동과 내수가 살아나는 일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위기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한 데 그치지 않고 성장경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고, 전세기적인 디지털·저탄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경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에 위기극복 정부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담아, 다음 정부와 미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예산’의 의미를 담아,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 하였으며,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2022년 예산의 전체모습과 3대 지향점]

먼저 내년 예산안의 전체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8.3% 늘어난 604.4조원입니다.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초 5년 연속으로 지출증가율이

정상성장률을 상회하도록 편성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 정상성장률—총지출 격차(%p): ('18)△2.6, ('19)△5.1, ('20)△5.3, ('21)△4.1, ('22)△4.1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내년 총수입은 548.8조(+6.7%)까지 확대되면서, 재정수지는 GDP대비 △4.4%(△90조 3천억원, '21년 2차추경)에서 내년에는 35조 7천억원 줄어든 △2.6%(△55조 6천억원)로 큰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기극복의 힘,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의 연결고리는 재정순환 구조의 작동입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역할—경기회복—세수증대—건전회복”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를 통해 중기적으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는 등 위기극복과 건전재정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체 모습하에 내년 예산편성의 지향점은 다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회복·상생·도약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백신·방역 소요는 재정을 아끼지 않고 보강하면서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민생을 뒷받침 하였으며, 부문별 격차 축소를 위한 예산도 확실하게 담았습니다.

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부 출범시 수립한 100대 국정과제를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한 투자소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국가치매책임제 완성, 공적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등을 뒷받침 하였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선언 등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에도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끝으로,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의 토대 구축에 노력한 예산”입니다.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적극 수행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늘어난 한시지출의 단계적 정상화, 보조·출연금 재정비, 공공부문 4대 경상경비 절감 등뼈를 짚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 [2022년 예산의 핵심 투자방향]

다음으로 내년 예산안의 핵심 투자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당면한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도약'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❶백신·방역 및 ❷소상공인의 회복·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❶우선 방역 전주기 지원을 위해 5.8조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mRNA 백신 8천만회분, 국산개발백신 1천만회분 등 총 9천만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하는 것을 포함, 전국민 백신접종에 총 3조 5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금년 백신 이월분까지 포함시 내년 백신 총 확보물량은 1억 7천만회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치료제·백신의 자주권 확보가 중요한만큼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등에도 5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의료체계 보완에 1조 8천억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치료병상 1만개 확보와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환자들의 중증·사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경구용 치료제의 신속·충분한 확보와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②한편, 세계 최고수준 방역 유지에 적극 협력·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충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금년 3분기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금년 2차 추경 1조원에 1조 4천억원의 추가 재정보강으로 총 2조 4천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11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도 소상공인 피해극복·재도약 지원 예산 6.5조원을 담았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소요 1조 8천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일상회복 및 방역단계 변화에 따라 실제 소요가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등 10만명에게 3조 6천억원 규모의 저리융자를 공급하고, 경영위기 업체에 대한 2천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화자금 2천만원 등 맞춤형으로 위기극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③탄소중립, ④한국판 뉴딜 2.0 등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

③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도전적 과제이며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누구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2030년 40% 감축,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그 실질적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 12조원 규모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계획입니다.

'22년 23.6만대의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여 누적목표 50만대 보급을 달성하는 등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의4대 부문 대전환을 통한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 3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산업·지역의 특정부문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는만큼, 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공정한 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2조 5천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도 시범 시행하는 등 새로운 재정지원체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경제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❶ 한편,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 사업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25년까지 160조원의 국비를 포함하여 총 220조원의 투자계획 하에 내년에는 금년대비 12조 7천억원이 늘어난 33조 7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것입니다.

D.N.A 생태계 강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9조 3천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그린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에 13조 3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 한 단계 진화된 휴먼뉴딜에는 청년 자산·주거지원, 교육·돌봄 등 격차완화를 중심으로 11조 1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2022년 예산 4대 중점투자 분야]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핵심 투자방향 하에서 올해 정부가 과감한 예산투입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4대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❶ 첫 번째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입니다.

우선, 일자리의 조기 회복을 위해 31조 3천억원으로 211만개 일자리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5만개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지원, 청년 14만명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등 총 106만개의 민간일자리 취업 기회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달부터 숙박, 영화, 외식 등 소비쿠폰이 재개되었으며 10월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액이 3천억원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 내수활성화에 1조 2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스마트관광도시를 6개소 조성하는 등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저소득 예술인 2.1만명에 대한 창작준비금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도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K-반도체 전략 실현, 미래차 조기전환,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우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3조 8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구현 예산도 7천억원을 담았으며 '26년까지 2조 2천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❶ 두 번째 투자 중점은 “포용회복 지원 등 新양극화 대응”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심화된 新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에 18조 8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기준중위소득(5.02%) 인상 등에 따라 생계·의료 등 7대 급여에 16조 4천억원을 확대 지급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63만명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뒷받침을 위해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 1천명, 임시·일용직 42만 9천명, 가사근로자 3천명 등에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며 벌어진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격차의 완화를 위해 총 41조 3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명실공히 실현되도록 국가장학금 지원도 획기적을 확대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월20만원의 월세 한시특별지원을 도입하겠습니다.

한편,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로 345개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어가 소득안정·농어촌 활력제고에 6조 3천억원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지역공간·지역산업·지역환경과 초광역권 시범협력 등 소위 3+1 분야에 13조 1천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2단계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하였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4.3%p 인상, '22~'23년간 총 6조 7천억원 수준의 재원이 지방전환 되도록 하고 내년 예산안에 이에 상응한 연간 소요가 차질없이 계상되도록 하였습니다.

⑨세 번째 투자중점은 “디지털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입니다.

디지털 전면전환(All Digital)에 7조원을 투자하여 닥터앤서 2.0 단계 고도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 국민생활 쏠분야에서 체감도를 높ی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R&D, 미개척 분야 프론티어형 R&D 등 전략적 연구개발에는 6조 2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PIM) 등 디지털·그린 분야 한국판 뉴딜 R&D 투자를 금년 대비 48% 늘어난 3조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누리호 발사에 이은 한국형 발사체 최종 성공을 위해 우주개발 예산을 약 40% 확대하는 등 우주, 양자, 6G와 같은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는 프론티어형 전략기술개발에도 7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혁신을 이끌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미래 경제구조를 이끌 인재 양성에 2.0조원을 투입하여 AI, 첨단소재, 수소, 바이오헬스 등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16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⑩마지막 투자 중점은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입니다.

국방력 강화 관련, 무기구입 및 국방 R&D 등 방위력 개선비 17조 3천억원, 병봉급 인상(병장 60.9 → 67.6만원), 병사급식비 1만 1천원 인상반영 등의 전력운영비 37조 9천억원 등 총 55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다자외교를 통한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원, COVAX AMC 1억불 공여 등 외교역량 강화 및 전략적 ODA 확대 등에도 6조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소위 3대 재난안전 관련 예산으로 21조 8천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그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7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2년부터 8세 미만으로 넓혀 지원하고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시행을 위한 예산도 4조 1천억원을 담았습니다.

###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년은 우리나라가 비상(非常)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비상(飛上)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이 새로운 비상(飛上)의 도약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경제·사회에 꼭 필요한 소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정책현장에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정 기한 내 통과가 무엇보다 절실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에서 확정해주신 예산에 대해 금년 중 예산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철저한 집행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2022년도 나라살림

- ▶ 제1장  
2022년도  
나라살림 종합
- ▶ 제2장  
재정운용 방향
- ▶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제 1 장

## 2022년도 나라살림 종합

01. 재정운용 여건
02. 세입 규모
03. 지출 규모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2022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01 재정운용 여건



2022년 글로벌 경제는 예상치 못한 신종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으로 코로나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일상회복 조치의 점진적 도입을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 주요국 경기부양 노력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각국의 코로나 사태 전개양상에 따라 하방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 양적 긴축 등 또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표 1-1] 세계경제 성장을 추이와 전망

(단위 : 연간 %)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2021년	5.9	5.2	6.0	5.0	2.4	6.4	8.0	5.2	4.7
2022년	4.9	4.5	5.2	4.3	3.2	5.1	5.6	1.5	2.9

자료 : IMF(2022. 10.)

금년 우리 경제는 작년에 이어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 상황에서의 대외여건 개선, 정부의 적극적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회복 흐름이 기대된다.

내수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는 신성장·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수요 확대가 전망되며, 주택착공·SOC예산 확대에 의한 건설투자 증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수출은 양호한 글로벌 경기·교역 여건 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구감소·산업구조 변화 등 기존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시급하다.

[표 1-2] 2022년 경제 전망

(단위 : 연간 %)

	2020년	2021년 <sup>e</sup>	2022년 <sup>e</sup>
경제성장률(%)	△0.9	4.0	3.1
소비자물가(%)	0.5	2.4	2.2

자료 : 2021~2022년 경제전망('22년 전망)

## 02 세입 규모



### 2-1 총수입 : 2021년 추경 대비 7.6% 증가한 553.6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1년 추경보다 7.6% 증가한 553.6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21년 추경(343.6조원) 대비 7.5% 증가한 369.5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21년 추경 대비 9.3% 증가한 343.4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44.9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4.5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등에 따라 2021년 추경 대비 7.7% 증가한 184.1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1] 2022년 총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1년		2022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총 수입	482.6	514.6	553.6	14.7	7.6
■ 예산	311.6	343.6	369.5	18.6	7.5
(국 세)	(282.7)	(314.3)	(343.4)	21.5	9.3
• 일반회계	286.9	318.3	344.9	20.2	8.4
• 특별회계	24.7	25.2	24.5	△0.8	△2.8
■ 기 금	171.0	171.0	184.1	7.7	7.7
(사회보장성기금) <sup>1)</sup>	99.5	99.5	104.8	5.3	5.3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참고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5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 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text{총수입} = \text{일반회계수입} + \text{특별회계수입} + \text{기금수입} - \text{내부거래} - \text{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 2-2 예산 수입 : 2021년 추경 대비 7.5% 증가한 369.5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일반회계 세입 : 2021년 추경 대비 8.4% 증가한 344.9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1년 추경(304.6조원) 대비 9.3% 증가한 333.0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1년 추경(13.7조원) 대비 △13.1% 감소한 11.9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1년 추경 대비 9.3% 증가한 333.0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1년 추경 대비 9.6% 증가한 296.1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정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21년 추경 대비 △13.1% 감소한 11.9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2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1년		2022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합 계(I+II)	286.9	318.3	344.9	20.2	8.4
■ 국세(I)	274.0	304.6	333.0	21.5	9.3
• 내국세 <sup>1)</sup>	239.6	270.2	296.1	23.6	9.6
• 관세	8.3	8.3	8.7	4.8	4.8
• 교통·에너지·환경세	15.7	15.7	15.4	△1.9	△1.9
• 교육세	5.3	5.3	5.3	—	—
• 종합부동산세	5.1	5.1	7.4	45.1	45.1
■ 세외수입(II)	12.9	13.7	11.9	△7.8	△13.1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 ⚙️ 특별회계 세입 : 2021년 추경 대비 △2.8% 감소한 24.5조원

2022년 특별회계 세입은 2021년 추경(25.2조원) 대비 △2.8% 감소한 24.5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융자회수·부담금 등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2022년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는 2021년 추경(9.6조원) 대비 8.3% 증가한 10.4조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은 2021년 추경(15.6조원) 대비 △9.6% 감소한 14.1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2022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1년		2022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합 계(I+II)	24.7	25.2	24.5	△0.8	△2.8
■ 국세(I) <sup>1)</sup>	8.7	9.6	10.4	19.5	8.3
■ 자체수입(II) <sup>2)</sup>	16.0	15.6	14.1	△11.9	△9.6

1) 주세·농어촌특별세 / 2)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융자회수, 수수료 등

## 2-3 ▶ 기금 수입 : 2021년 대비 7.7% 증가한 184.1조원

2022년 기금 수입은 2021년 대비 7.7% 증가한 184.1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4.8% 증가한 80.7조원, 융자원금 회수는 16.4% 증가한 30.5조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7.5% 증가한 72.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융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2021년 대비 4.8% 증가한 80.7조원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에 회수하는 융자원금 회수규모는 2021년 대비 16.4%

증가한 30.5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자산운용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2021년 대비 7.5% 증가한 72.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2022년 기금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률
합 계(Ⅰ+Ⅱ+Ⅲ)	171.0	184.1	7.7
• 사회보장기여금(Ⅰ)	77.0	80.7	4.8
• 융자원금 회수(Ⅱ)	26.2	30.5	16.4
• 이자수입 등 기타(Ⅲ)	67.8	72.9	7.5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만기도래 융자원금회수 증가 및 주택도시기금의 재산수입 증가 등으로 2021년 대비 7.8% 증가한 49.7조원,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증가로 6.5% 증가한 124.7조원, 계정성 기금은 복권기금의 복권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24.7% 증가한 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5] 2022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률
합 계(59개)	171.0	184.1	7.7
• 사업성 기금(49개)	46.1	49.7	7.8
• 사회보험성 기금(6개) <sup>1)</sup>	117.1	124.7	6.5
• 계정성 기금(4개) <sup>2)</sup>	7.7	9.6	24.7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2)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로 앞서 설명한 기금 수입 184.1조원은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기금 수입으로서, 국회에서 확정된 68개 전체 기금의 수입(기금운용규모) 756.3조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회계·기금 등 정부 내부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자체수입만을 반영한다.

둘째,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한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통합재정 관점에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의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59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포함한다.

## 03 지출 규모



### 3-1 총지출 규모 : 2021년 예산 대비 8.9% 증가한 607.7조원

2022년도 총지출은 607.7조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9% 증가한 규모이다.

2022년 총지출은 2021년 예산 대비 8.9% 증가한 607.7조원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경제회복 및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13.0조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 10.1%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 증가한 350.2조원, 특별회계는 4.3% 증가한 62.8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1년 계획 대비 6.4% 증가한 194.6조원이다.

[표 3-1] 2021년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21년		2022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총 지 출	558.0	604.9	607.7	8.9	0.5
■ 예 산	375.0	409.7	413.0	10.1	0.8
• 일반회계	314.8	348.8	350.2	11.2	0.4
• 특별회계	60.2	60.9	62.8	4.3	3.1
■ 기 금	182.9	195.2	194.6	6.4	△0.3



## 참고 총지출 규모란?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text{통합재정규모} = \text{경상지출} + \text{자본지출} + \text{순융자}(\text{융자지출} - \text{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 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제도단위 :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 3-2 예산지출 규모 : 2021년 예산 대비 10.1% 증가한 413.0조원

2022년 예산 지출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 413.0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2% 증가한 350.2조원, 특별회계는 4.3% 증가한 62.8조원이다.

일반회계는 포용적 회복·탄소중립 및 한국판 뉴딜2.0·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2021년 예산 대비 11.2% 증가한 350.2조원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5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예산 대비 4.3% 증가한 62.8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간 및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2021년 예산 대비 지출증가율은 9.2%이다.

[표 3-2] 2022년 예산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21년		2022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 예산지출	375.0	409.7	413.0	10.1	0.8
• 일반회계	314.8	348.8	350.2	11.2	0.4
• 특별회계	60.2	60.9	62.8	4.3	3.1
■ 예산순계	417.4	464.1	455.8	9.2	△1.8

### 3-3 기금지출 규모 : 2021년 대비 6.4% 증가한 194.6조원

2022년 기금지출 규모는 2021년 대비 6.4% 증가한 194.6조원으로 이 중 사회보장지출은 3.9% 증가한 64.8조원이다.

기금 사업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상공인지원용자 확대 등으로 2021년 대비 6.7% 증가한 174.9조원이고, 이 중 사회보험성 기금사업비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2021년 대비 4.3% 증가한 89.5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2021년 대비 3.7% 증가한 1.9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21년 대비 4.1% 증가한 17.9조원이다.

[표 3-3] 2021년 기금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21년		2022년 (C)	증감률	
	당초(A)	수정(B)		C/A	C/B
합 계(59개) (사회보장지출 <sup>1)</sup> )	182.9 (62.3)	209.0 (65.9)	194.6 (64.8)	6.4 (3.9)	△6.9 (△1.8)
■ 사업비	164.0	191.3	174.9	6.7	△8.6
• 사업성 기금(49개)	72.0	95.2	80.7	12.1	△15.2
• 사회보험성 기금(6개) <sup>2</sup>	85.8	89.5	89.5	4.3	0.0
• 계정성 기금(4개) <sup>3</sup>	6.1	6.6	4.7	△24.1	△28.9
■ 기금운영비	1.8	1.8	1.9	3.7	0.7
■ 차입금이자상환	17.2	15.9	17.9	4.1	12.7

1)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지출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3)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4-1 재정수지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54.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1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5% 수준(△54.1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4%(△94.1조원) 적자로 예상되어, 2021년 통합재정수지 △3.7%(△75.4조원) 및 관리재정수지 △5.6%(△112.5조원)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 대응을 통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기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성 관리노력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2021~2025년 계획기간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2025년 GDP 대비 △2% 중반~△3%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표 4-1] 재정수지

(단위 : 조원)

구 분	2021년		2022년 (C)	증감	
	본예산(A)	추경(B)		(C-A)	(C-B)
■ 통합재정수지(Ⅰ)	△75.4	△90.3	△54.1	21.3	36.2
(GDP 대비, %, %p)	(△3.7)	(△4.4)	(△2.5)	(1.2)	(1.9)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Ⅱ)	37.1	36.2	40.0	2.9	3.8
■ 관리재정수지(Ⅰ-Ⅱ)	△112.5	△126.6	△94.1	18.4	32.5
(GDP 대비, %, %p)	(△5.6)	(△6.2)	(△4.4)	(1.2)	(1.8)

### 참고 관리재정수지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시행 초기단계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증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 4-2 ▶ 국가채무

2022년 국가채무는 1,064.4조원(GDP 대비 50.0%)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76.2조원) 등에 기인한다.

2022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1,064.4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1% 수준인 682.1조원이며, 나머지 35.9% 수준인 382.3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구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주택도시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2] 국가채무\*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결산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 국가채무	846.9	956.0	1,064.4
(GDP대비, %)	(43.8)	(47.3)	(50.0)
① 적자성 채무	513.0	603.8	682.1
• 일반회계 적자보전	437.5	532.2	612.6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75.5	71.6	69.5
② 금융성 채무	333.9	352.2	382.3
• 외환시장 안정용	256.4	264.2	270.6
• 서민주거 안정용 등	77.5	87.9	111.7

\* 2021년, 2022년 본예산 국회 확정 기준

2022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0%이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2025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제 2 장

## 재정운용 방향

01. 자원배분 방향
02. 중점 추진과제
0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 2022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01 자원배분 방향



현재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를 맞고 있다. '20년 본격적 발생 이후에도 팬데믹은 아직 현재 진행중이다. 우리경제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방역조치로 인한 거리두기가 강화 조치가 이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도전요인을 감안하여, 2022년도 예산은 국가재정이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며 편성했다.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1)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2)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 (3)포용적 회복·지역균형발전을 통한 新양극화대응, (4)디지털·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5)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 1-1 ▶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2022년도 예산의 핵심과제는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이다. 정부는 2021년 3월 및 7월에 각각 14.9조원 및 34.9조원 규모의 1차·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 피해의 회복과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였다. 그간에 노력에 더해, '22년 예산에서는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본격적인 도약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방역 부문에 총 7.2조원을 편성하였다. 전국민 백신접종을 위해 mRNA 백신 8천만회분과 국산백신 1천만회분을 더해 도합 9천만회분 백신 신규 구입을 지원하며,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응하여 위중증률·치명률 감소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4만명분 도입을 지원한다. 중증환자 병상 1.4만개 확보(1.1조원)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보건의료인력 2만명 대상 감염관리수당 지급(0.1조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확대(378억원) 등 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서는 단계별 지원에 2021년 4.2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7.5조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로 2022년 2.2조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약 210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1.0% 저금리로 총 35조원 수준의 긴급자금 공급, 관광·체육·문화 업종 맞춤형 지원 등 금융지원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소요도 확충하였다.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경제 선도 예산과 한국판 뉴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22년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인 점을 감안하여 11.4조원의 재정지원을 단행하였으며, 이 중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의 저탄소화 대전환에 7.9조원이 편성되었다. 친환경차 보급은 '21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3.6만대를 지원하여 '22년 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33.1조원을 투자한다.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뉴딜에 9.0조원, 그린뉴딜 사업에 12.7조원을 투자하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 새롭게 추가된 휴먼뉴딜에는 11.4조원이 투자된다.

## 1-2 ▶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

2022년 예산은 2021년의 강한 경제회복세를 이어나가 글로벌 강국 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일자리, 문화·관광, 창업·벤처, SOC 등 경제 전방위에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우선 일자리의 조기 회복을 위해 총 31.1조원을 편성하여 212만개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84.5만개, 장애인 일자리 2.8만개 등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제공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지원, 청년 14만명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등 민간일자리 106만개에 대한 지원 역시 포함되어 있다.

대면활동 감소 등으로 위축된 내수 부문에는 문화·관광·의료 등 서비스 중심으로 활성화를 위해 총 1.2조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관광도시 6개소 등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 예술인 2.1만명 창작준비금 지원, 콘텐츠 분야 2천억원 규모 모험펀드 조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창출할 계획이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글로벌화 및 청년·지역창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1.4조원이 편성되었다. 비대면·BIG3·그린 등 유망분야 스케일업 0.2조원 지원, 2,7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펀드 조성 등 청년·비수도권의 창업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K-반도체 전략 실현, 미래차 조기전환,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8조원을 투자하며, '21년 7월에 발표한 K-글로벌 백신 허브 비전을 차질없이 구현하기 위해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펀드 신규 조성('22~'23년)도 지원한다.

SOC 투자는 국가교통망·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침단화에 3.6조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GTX A·B·C 본격 추진을 위해 0.6조원을 투자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11개)의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업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 1-3 ▶ 포용적 회복·지역균형발전을 통한 新양극화대응

경제회복세를 이어나가는 것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포용적 회복을 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2022년 예산은 소득·고용안전망을 중층적으로 보강하며, 국민생활 5대부분의 격차 완화, 지역균형 발전 등 사회 전방위의 포용적·상생적 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18.8조원을 투자하여 소득·고용안전망을 중층적으로 보강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인 5.02% 인상하고,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00% 현실화 등 7대 급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도 아르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6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20.1만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에도 41.0조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저소득층 초중고생 31만명 대상 年10만원 학습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하며, 주거분야에서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신규 공급하고(‘18~’22년 100만호 수준) 저소득 청년 月20만원의 월세 한시특별지원 및 무이자 월세대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어가 소득안정 및 농어촌 활력 제고에는 6.4조원을 투자한다.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65 → 60세로 완화하고, 여성·외국국적 농업인 4만명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신규 지원한다. 특히 0.6조원 규모의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를 통해 345개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하였고, 지방소비세 약 1조원 순증 등,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자주재원을 확충하였다. 한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교육·생활 등 인프라 패키지를 2.7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지역균형뉴딜도 주민 체감 제고를 위해 ’22년 13.1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 1-4 ▶ 디지털 ·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2022년도 예산에서는 탄소중립 · 한국판 뉴딜 외에도 디지털 전면전환, 미래산업 전략 R&D, 혁신형 인재양성 등 미래혁신을 위한 투자를 충분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속 분야에서의 체감도 높은 디지털 전면전환, 소위 All Digital을 위해서 6.9조원을 투자한다. AI 의사 ‘닥터앤서’를 2.0 단계로 고도화하며(199억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방역에 1,266억원을 투자하여 ‘예방 · 탐지 · 복구’ 전주기로 지원하여 기업 · 국민의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보장한다.

미래산업 전략 R&D에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이산화탄소 포집 · 활용(CCUS) 기술개발 등 디지털 · 그린 분야 한국판 뉴딜 R&D 투자를 총 3.5조원(전년대비 +47.0%)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약 · 의료기기 개발, 세계최초 Lv4. 자율차 상용화 등 미래 주력산업인 BIG3 분야의 선도자 도약(First Mover)에도 2.7조원을 투자한다.

미래 경제구조를 선도할 혁신형 인재 양성에는 2.0조원을 편성했다. AI, 첨단소재, 수소, 바이오헬스 등 20대 신기술 분야의 전문 · 융합인력을 포함한 총 16만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산업수요에 맞춘 산학 연계 고도화를 위해 LINC 3.0 재설계에도 0.4조원을 투자하여 기업이 참여 · 주도하는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1-5 ▶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코로나 오미크론 변종의 유행, 코로나 블루와 같이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산사태 등 자연재해부터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위험까지 많은 위협요인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2022년도 예산은 이러한 위협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였다.

우선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를 확립을 위해 54.6조원의 국방비를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6.7조원으로, 민군기술협력, 미래전 대비 국방R&D를 확대 등 전력 강화를 지원한다. 전력운영비는 37.9조원으로 확대하여, 병장기준 병 봉급 1인당 67.6만원, 급식비 1인당 1.1만원으로 상향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6.0조원을 지원하여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의 3대 재난안전 대응체계 개선에 21.8조원이 편성되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자연재해를 충실히 대비하면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청년 1.5만명 마음건강 바우처 제공 등 새롭게 등장한 사회위험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를 개량 및 스마트 상수관망 구축에 7천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도 조성에도 충분한 지원을 했다.

학대아동 재정지원체계는 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36개로 확대하여 아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여성에 대해서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연령 상향, 경력단절여성 인턴·취업 지원강화 등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갖출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가족·육아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에 6.6조원을 편성하였다. 현재 7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총 아동 273만명을 지원한다. 또한 月30만원의 0-1세 영아수당 등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시행을 위한 예산도 4.1조원이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임신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 지원금액·기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 지원금도 추가 지급하는 등 출산·육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 02 중점 추진과제



### 1.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1-1 ▶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

##### 1) 일자리 지원 확대

2022년 일자리 예산은 코로나 위기대응 중심에서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등 미래대비로 전환한다.(30.1 → 31.3조원) 이에 2021년 대폭 확대됐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산을 감축(1.4 → 0.6조원)하고, 유급휴가 훈련 등 노동전환 지원예산, 특고 종사자 구직급여(+0.2조원), 혁신창업자금(+0.4조원)을 확대한다.

[표 1-1] 일자리 예산 주요 변동내역

부문	'21년	'22년	주요내용
고용장려금·직접일자리	11.2조원	11.1조원	고용유지지원금 △0.8조원(1.4 → 0.6조원)
직업훈련·고용서비스	4.0조원	4.5조원	유급휴가 훈련 등 노동전환 지원 등
실업소득 안정(고용안전망)	12.5조원	12.7조원	특고 종사자 구직급여 +0.2조원 등
창업지원	2.4조원	2.8조원	혁신창업자금 +0.4조원 등
합 계	30.1조원	31.1조원	

##### 2) 공공일자리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106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5만개 확대하여 7만개 지원하고, 민간 등에서 제안한 우수 일자리 모델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모델 발굴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지원인원을 확대 (5.8 → 6.6만명)하고, 지자체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6만개)을 통해 청년 대상 일자리를 지원한다.

### 3) 민간일자리

민간일자리 확보를 위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신기술 인재양성, 노동전환 지원 등 총 106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약청년을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14만명 대상으로 지원(0.5조원)하고,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 7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K-Digital Training 지원인원을 확대(1.7 → 2.9만명)하고, 캠퍼스 SW 아카데미(550명, 77억원)를 신설하여 SW인력 5.9만명 양성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일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경험·직무교육 등 청년 친화형 기업ESG프로그램 제공시 비용을 지원한다.(0.4만명, 170억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을 확대(1.2 → 2.8만명)한다. 최근 3년 평균 고령자 고용률을 초과하는 고령자 신규 채용 시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장려금을 신설(0.6만명, 54억원)한다. 노동전환에 대비하여, 유급휴가훈련(1만명),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과정(2.5만명)을 통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전환 훈련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중장년층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사업을 신설한다.(5천명, 50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총 60만명(청년 25만명)에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은 지원인원을 40 →

50만명으로 확대(청년 10 → 17만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에서는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중위소득 120%이상 청년 등 10만명 대상으로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서비스를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2.5만명을 대상으로 체험형(0.65만명) 및 인턴형(1.85만명)으로 일 경험을 지원한다.

[표 1-2] 민간일자리 지원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비 고
구직급여	113,486	115,339	특고 종사자 구직급여 신규 지원(0.2조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2,101	14,965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40 → 50만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8,103	10,466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보험료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13,152	14,422	일자리 지원 80 → 84.5만개 확대
내일배움카드	10,150	12,319	K-Digital Training 확대(0.2조원)

## 1-2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

### 1) 관광

안전한 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 촉진을 위해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DMZ평화관광 사업은 총 524km의 동서 횡단노선 조성을 완료하고 완주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한, 폐군사시설·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10개 거점센터 조성하는 등 DMZ평화관광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역민과 함께 현지인처럼 체류하며 색다른 삶의 방식을 체험하는 ‘살아보기형’ 생활관광을 확대(2개 → 12개 지원)한다. 지역의 유희시설(폐교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을 확대 지원한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50선 선정,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등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신규지원한다. 또한, 야간관광 100선 선정,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5개소) '야행주간'운영 등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 2) 문화예술

문화예술 소비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가들의 창·제작, 교육·교류, 시연·유통, 창업·창직 등 예술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트컬처랩'을 신규로 조성한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대상을 1.5만명에서 2.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은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실버마이크를 통해 공연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드라마·영화 등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신규 또는 확대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전용 콘텐츠 제작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드라마 펀드 조성(400억원), 인력양성(특화대학 1개소), 제작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문화 가속화, MZ세대를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우리 문화를 확산하고 콘텐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168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 3) 헬스케어

### 스마트병원 확대

ICT 등 첨단 신기술을 의료서비스 제공에 활용하여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병원 모델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2021년까지는 민간 병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스마트병원 모델 적용을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는 지방의료원 3개소에 국비 10억원씩을 지원하여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적용한다.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환자실 통합관리 및 비대면 협진, AI 기반 감염병 환자 관리 및 동선 추적, 의료물품의 보관·이송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 ⚙️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관리 강화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를 표준화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속 지원한다.

2022년에는 병원과 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7개 컨소시엄에 각 10억원씩 지원하고, 그 중 성과가 우수한 2개 컨소시엄에는 5억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암 진료·치료·예방 등 연구에 제공하는 플랫폼인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109억원을 투자한다.

### ⚙️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60개 보건소마다 코디네이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로 이루어진 5인 팀을 구성하여 만성질환 등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성인 총 21,000명에게 24주간 개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 지역상권

###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발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 지원한다. 2022년에는 사업추진 필요성 및 단계적 정상화 취지 등을 감안하여 15조원 발행물량에 대해 할인판매비용의 4%를 지원하고, 발행비용(약 0.7% 수준)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2021년 1조 522억원 → 2022년 6,053억원)

## ⚙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이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3.5조원을 발행(2021년 3조원 → 2022년 3.5조원)하여 전통시장·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발행분 중 1.5조원은 카드·모바일로 발행할 계획이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본예산 기준) : ('17) 0.8조원 → ('18) 1조원 → ('19) 2조원 → ('20) 2.5조원 → ('21) 3조원 → ('22) 3.5조원

## ⚙ 전통시장 新마케팅 지원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전통시장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테마형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8곳 신규 지원한다.(2021년 누적 20곳 → 2022년 28곳)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상권 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힐링(지역문화·예술)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34개 전통시장의 온라인 주문·배송 인프라를 구축(시장당 2억원, 국비 50%)하는 등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 1-3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1) 스케일업

제2벤처붐 지속 확산을 위해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비대면, BIG 3 등 혁신 분야의 유망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2021년 1,050억원 → 2022년 1,361억원)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아기유니콘 100개사를 발굴하여 최대 3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2021년 60개사, 180억원 → 2022년 100개사, 300억원).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3년 이내의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펀드'를 2,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성장 단계에 돌입한 혁신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도 조성한다.

## 2) 글로벌化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벤처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해외실증 등 전방위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 펀드’를 2,700억원 이상 조성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우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기업의 현지진출 지원과 동시에 국내 사업화도 복합지원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60개사, 109억원), 해외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에게 현지 진출 컨설팅, 현지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120개사, 99억원)을 운영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현지화하여 해외진출을 돕는 해외실증(PoC) 지원을 추진한다(20개사, 24억원).

## 3) 청년·지역

청년 및 지역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또한 2022년에는 청년 재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100명, 62억원).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기술혁신 대표 창업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스케일업 자금을 신규 지원(28억원)하고, 400억원을 신규 재정출자하여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등에 투자한다.

## 1-4 ▶ **수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 ⚙️ **수 산업 혁신**

K-반도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전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을 확대한다(3.8조원).

전략산업인 반도체, 미래차, 조선산업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K-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0.3조원), 부품업계 친환경차 전환 투자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0.2조원). 조선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와 생산기술 인력 3천명을 양성한다(158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對일본 100대 품목, 미래선도 65개 품목에 대한 공급을 안정화하고 품목을 개발하는데 2.3조원을 투자하고, 수출 비대면화를 위한 전자상 거래를 5,807개社에 지원한다(367억원).

10대 스마트 그린산단의 물류·관제·에너지 인프라 고도화(0.16조원)과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달성 및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0.3조원)을 지원한다.

### ⚙️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K-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2022년 0.7조원을 투자하고, 2026년까지 2.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022~2023년간 매년 국비 500억원을 출자하여 약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백신기업 지원을 통해 단기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mRNA 백신 개발 지원 및 국산백신 선구매(1,920억원) 등을 통해 백신개발을 촉진한다. 이에 더하여 의과학자 육성을 확대하는 등 백신 허브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769 → 1,904억원), 백신 관련 글로벌 공동협력도 강화(8 → 42억원)한다.

## 1-5 ▶ **SOC 고도화·첨단화**

SOC 분야는 GTX A·B·C 본격 추진 등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지방 광역교통망 등을 중심으로 국가교통망 확충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핵심 SOC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대비와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물류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구축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1년 2.7조원 → 2022년 3.6조원)

## 1) 국가교통망 확충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지방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교통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SOC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거리·대량통행이 특징인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혼잡을 완화한다.

GTX-A는 적기완공을 위한 공사비 소요(2021년 1,233억원 → 2022년 3,309억원)를 차질없이 반영하고, GTX-B(2021년 30억원 → 2022년 803억원)·C(2021년 425억원 → 2022년 1,100억원)는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광역경제권은 지방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교통망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11개)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업 절차를 개시한다. 이 밖에도 다사-왜관, 조야-동명 등 광역도로와 안심-하양, 충청권 1단계 광역철도 등 지역 광역도로·철도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2021년 867억원 → 2022년 1,473억원). 아울러 선로용량 적기확보와 수해지역 확대를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2) SOC 첨단화

AI·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핵심 SOC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도입·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주요 인프라의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SOC 분야 투자 효율성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향후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를 중점 추진한다. 2022년까지 도심항공교통 주요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3년부터는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실증 및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고이력관리, 항공안전관리체계 디지털화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철도 부문은 설비 유지보수,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따라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나간다. 특히, 2022년부터는 노후화된 외산 이날로그 신호설비를 국산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는데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 운행의 안전성·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차의 차질없는 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국도 4,520km에 ITS를 구축하고, C-ITS 도입을 위한 통신기술 연구를 추진하는 등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량 및 비탈면 IoT 시스템 구축, 터널 원격제어 체계 구축 등 도로상의 주요 구조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상시관측을 통해 위험을 자동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 3) 스마트 시티 · 물류

세계선도형 K-City 구현과 고효율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물류센터 등 투자를 지속한다.

국가시범도시 조성, 기술개발·실증 지원을 위한 스마트챌린지 등스마트시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682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시범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2021년 12월 첫 입주한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단지의 안착과 민관SPC 설립·투자를 지원하고, AI 데이터허브 등 도시내 인프라 투자를 지속한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개발과 보급 강화를 위해 2022년에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전년대비 342억원(+41.0%) 증가한 1,176억원을 투자하여 도시문제 해결형 스마트 인프라·서비스 구축과 대·중소도시별 스마트시티 기술 실증·확산에

주력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2개소를 신규 구축하여 도시 운영 데이터를 축적·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 물류장비·시설·시스템 도입 등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 인증제」를 시행하고,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에게 인증 등급에 따라 이자비용(최대 2%p)을 지원한다.(2021년 108억원 → 2022년 127억원).

또한 신규 도시의 디지털 물류체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 실증(2021년 4개소, 40억원 → 2022년 5개소, 50억원)으로 기존 도시의 물류문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 2-1 소득 · 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 1)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예산 규모는 2021년 15조원에서 2022년 16.4조원으로 확대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대상 기준 및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에 영향을 주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5.02% 인상된다. 5.02%의 증가율은 2015년 개별급여 전환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수급가구의 대부분인 1인 가구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에 따라 6.4%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46.3만원에서 153.6만원으로 늘어난다.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구 분		'21년	'22년	증가율	비 고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4,876,290	5,121,080	+5.02%	
(1인 가구)		(1,827,831)	(1,944,812)	(+6.40%)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1,462,887	1,536,234	+5.02%	선정기준 = 월 최대급여액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1,950,516	2,048,432	+5.0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2,194,331	2,355,697	+7.35%	기준임대료 4인 (1급지): 48 → 50.6만원/월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2,438,145	2,560,540	+5.02%	고교생 교육 활동지원비: 44.8 → 55.4만원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되어 사각지대가 더욱 축소될 예정이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2022년에 5.3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급여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약 11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된다. 그리고 기준임대료는 100% 현실화되어 1급지 기준 4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48만원에서 50.6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21.1% 인상된다.

자활근로는 지원인원이 5.8만명에서 6.6만명으로 확대되고 급여 단가는 3% 인상된다.

## 2) 전국민 고용보험 및 고용안정

202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20.1만명), 임시·일용직(42.9만명), 가사근로자(0.3만명) 및 그 사업주가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특고 종사자(8만명) 대상으로 구직급여를 신규 지원(0.2조원)하고, 예술인(0.4 → 0.5만명) 대상 구직급여를 확대(+225억원)해 실업시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 3) 고용안정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253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0.4조원) 이를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 및 최저임금 인상(8,720 → 9,160원)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 한다.

## 4) 위기가구 지원 강화

위기가구의 빈곤층 추락 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업무 외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110억원을 반영되어 263만명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22만명에게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SW인력, 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자를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특고 종사자 적용제외 사유도 축소하는 등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긴급복지 사업은 재산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다 축소한다. 대도시 지역의 일반재산 기준은 1.88억원에서 2.41억원으로, 농어촌지역은 1.01억원에서 1.3억원으로 완화한다. 금융재산 요건도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높인다.

## 2-2 ▶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 1) 교육

#### ⚙️ 저소득 초중고생 학습지원 및 직업계고생 취업지원 강화

저소득 초중고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 및 학습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10만원 상당의 교육목적 바우처를 우선 '22년에 한해 신규 지급하고, ('22년 101억원) 저소득 및 농산 어촌 초중고생 인재를 지원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수혜 인원을 확대(516명 → 600명)한다.

직업계고생이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1인당 500만원), 채용연계형 직무교육(1,050명)을 신규 운영한다.

#### ⚙️ 대학생 장학지원 확대를 통한 반값등록금 완성

저소득(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 및 기준중위소득 200% 이내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서민·중산층 5~8구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또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재학중 대출이자 면제를 신규로 지원한다.

### ⚙️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보노력 지속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소득계층별 교육격차를 완화가기 위해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대폭확대(15,000명 → 30,000명)하고, 학습자가 맞춤형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공 받고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온국민 평생배움터 시스템 구축 사업(35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 2) 주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 (2021년) 33조 5,184억원 → (2022년) 35조 8263억원 (6.9% 증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21만호 공급하여 2018~2022년 5년간 총 100만호 수준 공급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21년 19.7조원에서 2022년 22.9조원(전년대비 약 3.2조원 확대, +16.3%)으로 대폭 확대한다. 동시에, 임대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건설형 단가 5% 인상을 추진하고 '질 좋은 평생주택' 6.2천호를 공급하여 3~4인 가구가 최장 30년동안 중형 임대주택(60~85㎡)에 거주할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무주택 서민의 자가 취득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450호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기반시설 지원, 주거재생특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963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주거여건이 악화된 청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월 20만원(12개월)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하여 82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월 20만원의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저리(1.2%) 임차보증금 대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등 주택임차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기금 융자 예산 9.5조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저리의 정책자금이 공급되도록 이차보전 예산도 0.4조원 확보하였다.

수혜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에게는 도심내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 5.4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등 임대주택 총 6.2만호를 공급하고, 대출한도 상향,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융자상품을 계속 지원한다. 고령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은 맞춤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총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1-3] 주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335,184	358,263	6.9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99,000	95,300	△3.7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64,089	91,560	42.9	3.7 → 5.3만호
전세임대 융자	43,663	45,328	3.8	4.1 → 4.15만호
통합공공임대 출·융자	1,813	18,231	905.3	0.4 → 6.76만호

### 3) 의료

#### ⚙️ 재난적의료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재난적의료비 예산에 437억원(일반회계 37억원 + 복권기금 400억원)을 반영하였다.

### ⚙️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확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우울)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온국민 마음건강 회복지원을 위해 ❶정신건강위기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❷관련 인프라 고도화, ❸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8개소를 설치하고, 아동·청년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다. 상담 등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인프라를 고도화 하고, 탈병원·탈시설 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자살고위험군 사후관리기관 확대, 자살예방전화 상담인력도 57명 → 80명으로 대폭 확충하였다.

## 4) 돌봄

아동에 대한 돌봄은 시간대별 돌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출·퇴근 시간대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30개소, 신규)을 실시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청소년·조손가족의 아이돌보비 자부담을 △5%p 경감하여 국가에서 돌봄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게 된다.

노인 대상 스마트 돌봄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돌봄시간을 확대하는 등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을 강화한다. AI스피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의 돌봄을 지원하는 스마트 돌봄을 확대(28 → 43만명)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시간을 25% 확대하고,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에 대한 중증 장애아 돌봄을 신규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시설의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평균 3.4%)하여 돌봄의 질적 제고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복지부)'대비 기존 87.3%에서 91.3%까지 4%p 수준을 상향한다.

## 5) 문화

### 문화바우처 확대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의 3대 문화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만6세 이상의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연간 10만원까지 사용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인원을 2021년 177만명에서 2022년 263만명으로 86만명 확대한다. 사회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인원, 월 지원단가, 지원기간을 모두 확대한다. 2022년은 지원대상(8.6만명)이 스포츠 강좌시설을 이용할 경우 10개월간 월 8.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 연 1.2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북토큰은 수혜대상을 교육복지 우선대상 전원(27.6만명)으로 확대한다.

## 2-3.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지원

### 1) 소외계층

#### 노인·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속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80 → 84.5만개)하는 등 노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4.5 → 7만개)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강화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고용 연계 시범사업을 신규로 지원하여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직접일자리를 확대(2.5 → 2.8만명)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돌봄·소득·편의 등 생활 전반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 한부모·다문화

2022년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를 인상(월 10 → 20만원)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선정(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시 근로소득공제 30%를 새롭게 도입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신설하여 돌봄, 교육, 직업훈련,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 자녀 대상 '취학 前-취학 後-전 연령' 학습지도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37억원)하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 2) 보훈

###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5.0% 인상

2022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을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5.0% 인상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34만원에서 35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40~42만원에서 41~43만원으로, 4.19혁명공로수당을 35.1만원에서 36.1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 판정자)와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생계지원금(월 10만원)을 지원한다.

### ⚙️ 위탁병원 약제비 등 고령 국가유공자의 근접 의료지원 강화

고령 국가유공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640개소까지 확대하며, '22년 4분기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시 약제비를 지원한다.

### ⚙️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등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강화

'22년 9월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시내버스,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보철용차량으로 전기(수소)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9천원 한도)를 지원한다.

###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대폭 인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중기복무자는 월 25 → 50만원, 장기복무자는 월 50 → 7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 3) 교통약자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수단 접근성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대수를 늘리고(2021년 1,515대 → 2022년 2,269대), 장애인 콜택시 도입 지원도 확대한다.(2021년 515대 → 2022년 995대)

## 4) 디지털 접근성

### ⚙️ 고령층 등 디지털 활용 제고를 위해 디지털배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디지털 경제·사회 전반에 무인·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여 디지털 배움터 900개소를 운영할 계획(628억원)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강사와 서포터즈 3,600명 이상을 채용하여 지역 기반의 디지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지자체마다 교육용 키오스크를 배치(4.5억)하여 실습형 교육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2022년에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버스 등 전국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한다. 또한, 차세대 기술인 WiFi 6E를 공공 와이파이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버스정류장과 같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10G 인터넷 등 초고속 와이파이를 시범구축하여 체감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와이파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슈에 상시 대응 가능하도록 했다.

### ⚙️ 농어촌 인터넷망 구축

도서·산간벽지와 같은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2년 농어촌 마을 482곳에 인터넷망 구축 비용의 20%인 25억원을 지원하고, 구축망 품질관리 및 구축망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 2-4 ▶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 제고

### 1) 농어가 소득안정

#### ⚙️ 임업직불제 신규 도입 및 농업·수산직불제 안착 지원

2022년에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업·수산 부문에 이어 임업부문에 직불제를 도입한다. 2022년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임업인은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농업 부문 공익기능증진직불제도(2020년 도입) 및 수산 부문 수산공익직불제(2021년 도입) 안착을 지속 지원하여 농·림·어가 소득안정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공익기능증진직불(농업부문) : (2021년) 23,610억원 → (2022년) 23,610억원  
 수산공익직불제(수산부문) : (2021년) 515억원 → (2022년) 559억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부문) : (2022년 신규) 512억원

### ⚙️ 고령농 생계안정 지원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2021년) 65세 → (2022년) 60세로 완화하고, 연금지급액도 (2021년) 1,809억원 → (2022년) 2,10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농지자산을 유동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 ⚙️ 여성·외국국적 농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근골격계 질환 등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 농업인 9천명, 어업인 1.5천명 등 약 1.1만여명의 여성 농어업인이 건강검진비의 90%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어업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28%를 국가가 지원한다. 2019년 7월부터 외국인도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임의가입에서 의무로 변경된 점, 내국인 농어업인은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28% 수준 지원하는데 반해 외국국적 농어업인은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국적 농업인 2.3만 세대, 외국국적 어업인 0.6만 세대 등 약 2.9만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표 2-1]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지원내용
합 계	27,742	29,166	
❶ 직불제 지원	25,933	26,923	
• 공익기능증진직불	23,610	23,610	· '20년 신규도입, 제도 안착 지속지원
• 수산공익직불제	515	559	· '21년 신규도입, 제도 안착 지속지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	512	· '22년 신규도입, '22.101일 법률 시행
❷ 고령농 생계안정	1,809	2,106	
• 농지연금(용자)	1,809	2,106	·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65 → 60세)
❸ 여성·외국국적 농어업인 지원	—	137	
• 여성농어업인특화건강검진	—	24	· '22년 신규, 농업인(9천), 어업인(1.5천명)
• 외국국적 농어업인 건보료 지원	—	113	· '22년 신규, 농업인(2.3만), 어업인(0.6만 세대)

## 2) 재해예방 및 피해지원

### ⚙ 농어업 재해 예방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국지성 집중호우·고수온 등 이상기후 발생 및 농어업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사전적 재해예방을 위한 농어업 기반시설(SOC)을 확충한다. 양수장·수원공 등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2021년) 6,365억원 → (2022년) 6,822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수개선 사업 기본조사 면적을 (2021년) 5,000ha → (2022년) 6,000ha로, 예산도 (2021년) 3,245억원 → (2022년) 3,75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치수능력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고수온대응시설 확충에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2-2] 배수개선 사업 신규 기본조사 지구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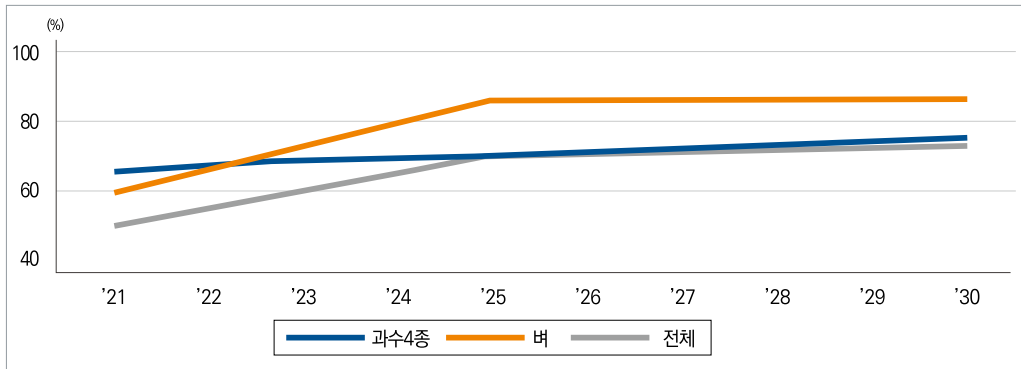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신규지구(개소)	36	34	50	63
면적(ha)	3,600	3,400	5,000	6,000

### ⚙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강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및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가입률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한다.

[표 2-3] 농업재해보험 예산 및 연도별 가입률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농업재해보험예산(억원)	3,260	4,794	4,755	6,857
가입률(% , 면적기준)	38.9	45.2	49.5	54.5



\* 2022년 이후 가입률은 최근 가입률 증가추세를 고려한 전망치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증가로 재해복구비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농업부문 재해대책비 예산을 (2021년) 1,000억원 → (2022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어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를 위한 농업안전재해보험 등도 지속 지원한다.

[표 2-4] 재해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지원내용
합 계	18,330	22,372	
❶ 재해예방	9,650	10,618	
• 수리시설 개보수	6,365	6,822	• 양수장·수원공 등 시설확충
• 배수개선	3,245	3,756	• 기본조사 면적 5,000 → 6,000ha
• 고수온대응	40	40	• 고수온 대응시설 확충
❷ 피해지원	8,680	11,754	
• 농업재해보험	4,755	6,857	• 가입률 전망 49.5 → 54.5%
• 양식어업재해보험	283	253	• 가입실적 고려 조정
• 어선원및어선재해보험	1,189	1,163	• 가입실적 고려 조정
• 재해대책비(보조/융자, 농업)	1,285	2,285	• 재해발생 증가 고려 지원 확대
• 양식등재해대책비	80	80	• 지원실적 고려
• 재해등긴급경영안정자금	200	200	• 지원실적 고려
• 농업안전재해보험	870	899	• 지원실적 고려
• 어업인 안전보험	18	17	• 지원실적 고려



### 3) 농어촌 활력제고

#### ⚙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

농어촌공간의 농어촌다움을 보전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마을정비 및 공장·축사 이전 등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를 (2021년) 5개소 → (2022년) 45개소(신규 40개소), 어촌뉴딜300을 (2021년) 250개소 → (2022년) 300개소(신규 5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345개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RE100 실증사업을 4개소 신규 지원하며,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교육·훈련비용도 5개소 신규 지원한다.

[표 2-5]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 기대효과(어촌뉴딜 300 사례)

	현재	기대효과
① 주민소득 증대	수산물 원물 위주 대량 판매	24개 수산물 직매장, 식당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수산물 직판장 등	직판장 노후화, 직거래매장 無	6개 어부장터 등 수산물 직판장 신축 및 보수
• 기타 소득시설	카페, 특산물 식당 등 편의시설 無	18개 카페, 먹거리 매장 등 신축 및 운영
② 어촌관광객 증가	어촌 관광시설 부족	146개의 어촌·해양 레저 관광시설 설치
• 레저관광시설 설치	협소한 도로 및 사고 빈발, 복합공간 無	130개 여가복합공간, 트레킹코스 등 레저관광시설
• 관광편익시설 조성	어촌체험마을 위주의 어촌관광, 재방문을 저조	16개 오토캠핑장, 낚시 체험장, 숙박시설 등 조성
③ 어촌계 개방	폐쇄적인 어촌계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 가속화	청년층이 유입되는 포용적 어촌공동체로 발전

#### ⚙ 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

농어촌 지역에 청년 농어업인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이 불안정한 초기 청년농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을

(2021년) 1,800명 → (2022년) 2,000명으로, 어촌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을 (2021년) 200명 → (2022년) 22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표 2-6]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후 농업소득·영농면적 변화

구 분	선정전	선정후	증감 (%)
총 농업 매출액(천원)	23,044	39,473	71.3
농업 소득액(천원)	8,908	15,407	73.0
영농면적(m <sup>2</sup> )	6,417	12,491	94.7

\*'18~'19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552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또한, 초기 농지매입 자금 등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 등 농지임대를 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5~10년간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투자를 (2021년) 6,944억원 → (2022년) 7,32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청년유입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표 2-7] 농어촌 활력제고 주요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지원내용
합 계	12,545	13,320	
❶ 농어촌활력증진패키지	5,250	5,591	
•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31	327	• 5 → 45개소, 신규 40개소
• 어촌뉴딜 300	5,219	5,236	• 250 → 300개소, 신규 50개소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	18	• 신규 4개 마을 실증지원
• 농촌사회적경제서비스공급	—	10	• 신규 5개 마을 실증지원
❷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	7,295	7,729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335	389	• 1,800 → 2,000명 지원
• 청년어촌정착지원	16	17	• 1,800 → 2,000명 지원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6,944	7,323	• 농지매입단가 248 → 388백만원/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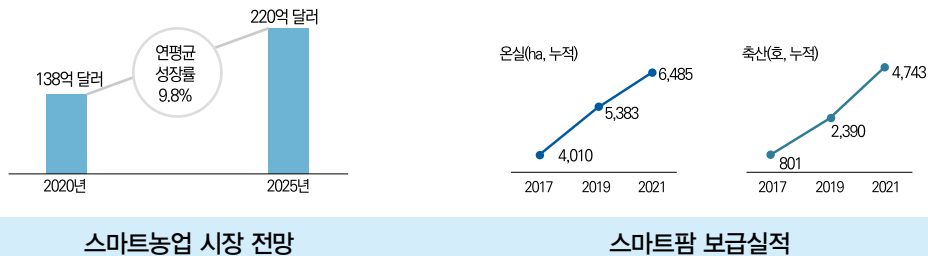
## 4) 농어업 디지털화

### ⚙️ 농어업 스마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은 농어업 선진국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농어업 디지털 전환은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친화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을 (2021년) 2개소 → (2022년) 6개소(신규 4개소)로 확대하고,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기존 농업인이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을 2개소 신규 조성하며, 어업부문에서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1년) 5개소 → (2022년) 6개소(신규 1개소)로 확대한다.

[표 2-8] 스마트농업 시장 전망 및 국내 스마트팜 보급 실적



\* 출처: Markets and Markets, Smart Agriculture Market, 2020

또한,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생태계조성 및 확산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식품부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모델 23종을 신규 구축·보급할 계획이다.

### ⚙️ ICT 기반 유통체계 구축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가격안정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대면·도매시장 위주의 기존 농수산물 유통체계에서 벗어나 비대면·온라인 시장 유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결제자금 3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기존 농산물생산유통시설(APC)을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유통시설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ISP 예산 5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표 2-9] 온라인 시장 유통비용 절감 사례('20년 양파 시범사업)

〈 대형마트, 도매시장 〉		유통 비용 12% 절감	〈 대형마트, 온라인거래 〉	
소비자가격	2,069원/kg		↓ 소비자가 △62원	
유통마진	(소매) + 727원/kg		소비자가격	2,007원/kg
	(도매) + 461원/kg		유통마진	+ 1,049원/kg
농가수취가격	881원/kg		농가수취가격	958원/kg
			↑ 출하자수취가 +77원	

[표 2-10] 농어업 디지털화 주요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지원내용
합 계	404	1,129	
❶ 농어업 스마트 인프라 구축	333	732	
•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	126	330	• 지역특화 임대팜 신규 4개소
• 기존농업인용임대형스마트팜	—	80	• 기존농업인 임대팜 신규 2개소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173	221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신규 1개소
• 내수면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25	10	• 시범단지 조성 지속지원
• 낚시어선 스마트관리체계구축	5	3	• 스마트 어업 인프라 구축 지원
• 스마트어항유지관리체계구축	4	16	• 스마트 어업 인프라 구축 지원
•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확산지원	—	62	• 23개 데이터모델 신규보급
•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생태계 조성	—	10	• SI 경진대회 신규지원
❷ ICT 기반 유통체계 구축	71	397	
• 농산물 온라인거래활성화	—	300	• 온라인결제자금 신규지원
• 농식품글로벌 비대면마케팅지원	62	83	• 온라인 마케팅 40 → 48회
• 온라인 구매 시스템 확충(수산)	9	9	• 시스템 확충 예산 지속지원
• 스마트 APC 구축 ISP	—	5	• ISP 예산 신규지원

## 2-5 ▶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 1) 위기극복

####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손실보상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개시될 예정인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분부터는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손실보상 대상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시설에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시설에까지 확대하여 더욱 폭넓은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500만원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이다.

#### ⚙️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

상환기간·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약 210만명을 대상으로 35조원 수준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최저 1.0%의 초저금리 대출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희망대출 플러스+’(10조원)를 공급한다. 숙박,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및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에게는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일상회복 특별융자’(약 2조원)를 공급한다. 그 외에도 청년·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2~3%대의 정책자금을 약 2조원 지원하고,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는 2~3%대 지신보보증 21조원을 공급하면서, 보증료 0.2%p를 1년간 감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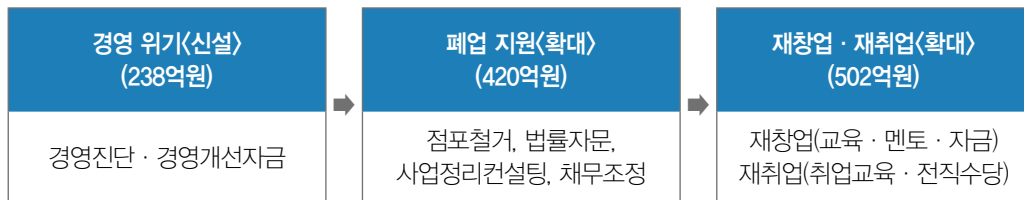
### 2) 폐업·재기

#### ⚙️ ‘위기-폐업-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재기 지원체계 구축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이 경영위기에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성공적인 재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폐업

이전에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238억원)를 신설하여 ‘위기-폐업-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재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 '22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계획 〉



또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7등급)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20~50%, 36억원)함으로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 3) 창업

#### ⚙️ 소상공인 창업생태계 기반 마련

소상공인 분야의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의 발굴과 창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거점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기존 15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창업교육 · 점포기획(실습) · 사업화자금 · 보육공간’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준비된 혁신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만 39세 이하의 직업계고 · 일반 대학생 등의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청년 혁신아이디어 도전트랙’을 신설(15억원)하여 사업화 가능성 검증 및 모험적 창업의 도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축적된 기술 ·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주체들과의 협력 ·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29억원)한다. 오디션 방식을 통해 선정된 팀에게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의·식·주 기반의 성장형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지원’의 대상이 아닌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성공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강한소상공인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소상공이 쇼케이스대회를 개최하여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의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크라우드펀딩, 친환경 인증, 정책자금 연계 등의 후속 성장을 지원하여 기업이나 거점형 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4) 성장

##### 온라인 판로 진출

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확대(2021년 726억원 → 2022년 905억원)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핵심역량(정보, 상품, 콘텐츠)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전문가를 1:1로 매칭하여 온라인 시장 진출을 일괄 지원하며,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등 온라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한다.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민간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대상을 6만개로 확대하고, 구독경제를 신설하여 520개사를 지원한다.(2021년 시범운영 15억원 → 2022년 52억원)

##### 디지털 스마트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상점 0.6만개, 스마트공방 0.1만개를 보급한다. VR·AR 등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과 함께,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특히 스마트상점 보급사업은 2022년부터는 상점가나 협·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별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지원

###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을 선언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회귀하였다.

연말연초 대목을 맞은 소상공인은 예기치 못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320만개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3.2조원)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고, 그 외 일반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 ⚙️ 방역물품(현물) 지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역패스 대상 전체 114.5만개를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물품 구입 후 영수증을 증빙하면 사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항목은 QR 단말기,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폭 넓게 인정하여 소상공인의 방역활동을 뒷받침한다.



## 2-6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지원

### 1)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율을 4.3%p(2022년 +2.7%p, 2023년 +1.6%p) 인상하여, 국가기능 이양분을 넘어서는 1조원 규모의 지방 자주재원을 매년 추가로 순확충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하여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을 소멸위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거점에 핵심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한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3조원(2021년 51.8조원 → 2022년 65.1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1.8조원(2021년 53.2조원 → 2022년 65.1조원) 증가한다.

### 2)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 투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약 11.8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32.9조원 규모의 생활 SOC 3개년 계획, 메가시티 기반 조성 등 3대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 전철화 공사 착공 등 18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21년 0.4조원에서 '22년 0.9조원으로 확대 하는 등 가속화하고,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북 상용차산업혁신성장,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등 5개 특화·전략산업에 0.4조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육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린다는 비전하에 지역간 생활 SOC 서비스 격차를 완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추진 중이며 '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여가·돌봄분야 시설에 국비 30조원 수준 투자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1년 10.9조원, '21년 11.0조원에 이어 '22년 11.0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당초 목표인 30조원을 2.9조원 초과 달성한 32.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22.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사업 등에 대한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메가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철도·도로 확충 등 13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21년 867억원에서 '22년 1,473억원으로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 3) 지역균형뉴딜 가속화

한국판 뉴딜 성과의 지역 확산 및 주민체감 제고 등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21년 10.8조원에서 '22년 13.1조원으로 국비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지역공간·지역산업·지역환경·초광역시범협력 등 3+1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지역공간 분야에 '22년 7.4조원, '25년까지 34.5조원을 투자한다. 국가시범 2곳 등 전국 44곳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스마트하수도 사업도 6곳에서 13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역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등 지역산업 분야에 '22년 4.6조원, '25년까지 22.7조원을 투자한다. 무인자동화농업단지 사업 투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국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1년 236억원에서 '22년 840억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

지역 고유의 생태관광자원을 복원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지역환경 분야에 '22년 1.0조원, '25년까지 5.0조원을 투자한다. 도시생태축 사업을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역특화숙박시설 지원사업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한다.

지자체 간 협력으로 뉴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초광역 시범협력 분야에 '22년 223억원, '25년까지 1,322억원을 투자한다. 대전~세종~충남을 연결하는 BRT 자율주행 실증, 부·울·경 협력 수소선박 개발·실증 등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표 2-11] 지역균형뉴딜 투자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총규모(~'25)	'21년	'22년	증가율
뉴딜 2.0	62.2	10.8	13.1	20.8
• 지역공간	34.5	5.5	7.4	34.7
• 지역산업	22.7	4.4	4.6	3.5
• 지역환경	5.0	0.9	1.0	19.5
• 초광역시범협력	1,322억원	—	223억원	신규

#### 4) 지방소멸 대응

'20년 사상 최초 국가 총인구 감소('20년) 및 수도권 인구 50% 초과('19년) 등 인구감소·불균형 심화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 10월에 인구감소지역(89개)을 지정하였고,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주도 활력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소멸대응기금(10년간 총 10조원)을 조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국고보조사업중 지역활력효과가 큰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모 가점 부여·사업량 할당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2.4조원 → 2022년 2.6조원) 구체적으로 ①지역별 맞춤형 청년일자리 확충,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마중물 지원, ②청년 자립형 마을, 귀농·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입주·정착지원 강화, ③지역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확대, 지역주도형 문제해결 프로그램 지원 등 공동체 활력제고사업을 통한 기존 거주주민과 신규 유입주민의 소통 강화, ④도시재생·어촌뉴딜, 접경·섬지역 LPG인프라 확충,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강화, 문화취약지역 순회공연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문화, 정주·생활여건 개선, ⑤지자체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수립의 성공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혁신도시 2.0 사업 신규 추진(771억원), 지자체-대학-기업 협업 혁신인재양성사업(RIS) 권역 확대(4 → 6개소) 등 지역성장거점 조성 및 지역혁신인재양성 등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중점 지원한다.

## 청년 대책

### ⚙️ 청년 일자리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취약계층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年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 14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일몰 예정인 지역주도형 청년일job 자리를 개편하여 재추진한다.(2.6만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10 → 17만명)하고, 대학일자리센터·청년센터를 통해 밀착형 구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 경험 등 다양한 유형의 청년친화적 ESG 프로그램 신설·확대 시 수반되는 비용을 신규 지원하여, 청년 친화적인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고용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Digital Training(1.7 → 2.9만)·K-Digital Credit(4 → 5.5만)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SW기업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훈련과 채용과정을 연계할수 있도록 지원한다.(550명, 78억원)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 규모를 확대 (1,600 → 2,100억원)하고,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 조성(1,000억원 규모) 및 폐업청년 재도전 지원 사업(62억원)을 신설한다.

### ⚙️ 청년 자산형성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 특성에 맞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1.7 → 2.0조원) 구체적으로, 첫째, 청년들의 소득 구간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를 마련하여 지원한다.

[표 청년대책-1] 맞춤형 청년자산형성 패키지

가입대상	지원혜택	만기수령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3년후) 720~1,440만원 수령 (청년 360 + 정부 360~1,080)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저축장려금 최대 4%p수준 (1년 2% → 2년 4%) 지급	(2년후) 1,200만원+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3년후) 1,800만원+펀드수익 + 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 청년 대책

둘째, 2021년 말 종료예정이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2022년 한시 연장(2만명)하고, 신규 채용자 7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장병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최대 750만원)에 장병3:정부1 비율로 매칭하여, 사회복귀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복귀 준비금을 신설한다.

### ⚙️ 청년 주거지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취득 지원을 확대한다. (5.9 → 6.3조원) 먼저,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月 20만원, 12개월)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月 20만원) 지원을 신설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도 2023년까지 연장한다.

주택취득 지원을 위해 첫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일몰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소득요건을 3 → 3.6천만원으로 완화한다. 둘째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을 시범적으로 공급한다.

### ⚙️ 교육 · 복지 · 문화

청년들의 교육 · 복지 · 문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9.8조원을 지원한다. 청년 교육의 경우, 국가장학금 기초 · 차상위 및 5~8구간 단가 인상('21년 67.5~520만 → '22년 350~700만원) 등을 통해 반값 등록금 달성한다(+0.7조원). 또한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을 확대(+2.9만명)하고 상환부담도 완화(0.2만명)한다. 아울러,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도 140억원 확대한다.

청년 복지의 경우,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하고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설(+57억) 및 청년층 대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17개 시 · 도로 확대(291억원)하여 심리건강 보호를 지원한다. 또한 병 봉급 인상(11.1%) 및 급식단가 인상(25.1%), 장병 자기개발지원 확대(+153억) 및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4.7 → 6.2만원) 등을 통해 장병들의 복지 및 자기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문화의 경우,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문화활동비를 지원 (220억원)하고,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규모를 1.5 → 2.1만명으로 확대한다.

##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 ⚙️ 공백없는 돌봄 지원

공백없는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2.4 → 2.7조원). 특히,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확대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6세 미만 의심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의사 및 상담사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동발달 재활서비스의 지원인원을 확대(6.5 → 6.9만명)한다. 또한, 중증장애아 돌보미 지원 사업의 제공시간을 최대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기존 미지원으로 사각지대였던 중위소득 120% 초과 중증장애아 가족까지 중증장애아 돌보미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위해 제공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 월 제공시간을 확대(월 100 → 125시간)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미, 여가, 직업탐구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 강화를 돕는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가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3 → 4천명), 단가를 인상(시간당 1.5 → 2천원)하여 활동지원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기피 현상을 방지한다.

### ⚙️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소득·고용 지원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소득·고용 지원을 강화한다(1.7 → 1.9조원). 근로능력이 낮거나 없는 경우, 장애인 연금을 지속 지원하고, 장애인 직접일자리를 확대(2.5 → 2.8만개)한다. 고용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재활 연계 지원도 확대(21억원, 신규)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IT맞춤훈련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특화 직업훈련과정도 확대(6 → 19개소)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3천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진로설계 컨설팅을 확대(5 → 7천명), 중증장애인 취업연계 현장훈련 대상자를 확대(5 → 6천명)하는 등 취업지원도 확대한다.

##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 ⚙️ 일상속 편의증진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의 일상속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0.1 → 0.2조원).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180 → 220개소)하고, 수화통역을 돕는 등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확대(8 → 12개소)한다.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를 확대(2,030 → 3,264대)하고 BF인증 등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200명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규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탈시설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 ⚙️ 문화 향유권 향상 및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 지원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향상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0.11 → 0.12조원). 점자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창작과 향유 거점 공간인 장애예술공연장 신규 개관을 지원한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고, 장애인 VR스포츠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등 생활체육 참여를 제고한다.

### 3. 탄소중립 ·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 1-1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 1)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 ⚙ 배경

파리협정(16년 발효) 이후 2050 탄소중립 의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소국경세, 플라스틱세 신설,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등 글로벌 규제 강화 및 경영활동 변화가 예상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며,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高탄소 집약적 국내 주력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 등 우려가 있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기업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 2050탄소중립 목표 수립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등 그린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대응에서 새로운 경제 · 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능동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新 경제 · 사회구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 ⚙ 3대 분야 추진전략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3+1 실행전략을 통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목표를 추진한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산업구조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선도적 대응  
→ ‘탄소중립 + 경제성장 + 삶의 질 향상’ 동시 실현

비전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대응”으로

## 3+1 전략 추진

3대  
정책  
방향

적용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기획

新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10대  
과제

1. 에너지 전환 가속화
2.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3. 미래 모빌리티 전환
4. 도시·국토 저탄소화

1. 新 유망 산업 육성
2.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3. 순환경제 활성화

1. 취약 산업·계층 보호
2.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3.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재정 ■녹색금융 ■R&D ■국제 협력  
➡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 탄소중립 분야 투자 확대 기반 구축

## ⚙ 재정투자계획

2022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예산을 11.4조원 반영하였고, 기후변화대응기금 설치, 온실가스 감축 인지에산제도 운영 등 제도 기반을 강화해 향후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에 본격 투자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큰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위한 10대 대표과제(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실현, 국민인식 제고)에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 경제 선도]

(‘22년 예산)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1.4조원 수준 과감한 재정투입, 새로운 재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

경제구조 저탄소화 (7.9조원)	저탄소 생태계 (0.8조원)	공정한 전환 (0.5조원)	제도적 기반 (2.2조원)
에너지·모빌리티 전환	유망·혁신기업 육성	취약산업·계층 지원	녹색금융·R&D
산업구조·국토 대전환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적응지원	제도기반·국제 협력

### 기후대응기금 신설(2.4조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22년 시범)

#### (10대 대표과제)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위한 대표과제에 투자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전환 가속화</li> <li>고탄소 산업구조 혁신</li> <li>미래 모빌리티 전환</li> <li>도시·국토 저탄소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유망 산업 육성</li> <li>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li> <li>순환경제 활성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 산업·계층 보호</li> <li>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li> <li>국민인식 제고</li> </ol>

## 1-2 ▶ 부문별 세부내용

### 1) 경제구조 저탄소화

####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세계 에너지 시장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가속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 설비·발전 금융지원을 (2021년)0.5조원 → (2022년)0.7조원으로 확대·지원한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 병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0.3조원)을 추진한다.

####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 下 산업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 실현 및 제조 강국의 위상 유지를 위해서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특히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多배출 산업 공정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 공정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 신규 지원(147억원)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2021년)222억원 → 2022년)879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화를 위한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를 신규(55억원) 지원하며, 금속·화학제품제조업 등 오염물질 多배출 중소사업장 대상 공정진단을 통해 맞춤형 공정개선·설비보급 등 지원(개소 당 최대 10억)을 확대 (30개소 → 60개소)한다.

#### ⚙ 미래모빌리티 전환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22년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위해 (2021년) +11.6만대에서 (2022년) +23.6만대로 2배 이상 보급 확대 실시한다.

[표 1-1] 전기·수소차 보급계획

구 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2025년
전기차(누적)	23.9만대	44.6만대	(+20.8만)	113만대
수소차(누적)	2.6만대	5.4만대	(+2.8만)	20만대
전기차 충전기(누적)	9.9만기	13.7만기	(+3.8만)	51.2만기
수소차 충전소(누적)	180기	310기	(+130)	450기

내연기관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의 생산·보급과 동시에 거주지 중심의 전기차 충전기, 도심 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환경개선효과가 큰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를 집중적으로 전환한다.

### ⚙ 도시·국토 저탄소화

건물 노후화와 도시 낙후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며,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국토 차원의 거시적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2021년) 2,276억원 → (2022년) 2,245억원) 및 탄소배출량 순생애주기 관리와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통해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한다.

산림, 갯벌 등 농림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해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을 확대((2021년) 2,338억원 → (2022년) 2,688억원) 조성한다. 탄소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산림(79억원), 국립공원(35억원), 갯벌(30억원) 등 생태 복원 사업에 144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 2)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 ⚙ 新유망산업 육성

무공해차 주행거리 향상, 배터리 성능 강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3세대 자동차산업 기술개발을 확대((2021년) 474억원 → (2022년) 591억원)반영하고,

해수이차전지 대용량화(26억원),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해양그린수소 개발(31억원, 신규) 등 해수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발전 및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한 후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재사용하는 기술(CCUS)을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을 신규 반영(66억원)한다. 또한,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36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114억원)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 기반 확보를 지원한다.

### ⚙️ 혁신생태계 기반구축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견인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녹색융합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녹색 융합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환경산업 분야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2021년)396억원 → (2022년)442억원)한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 과정을 신설(150억원)하여 국가 탄소중립2050 실현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신규로 지원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육성하고, 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 등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유망한 친환경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35개사 → 50개사)하며,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R&D) 등 친환경 중소기업체 보편화를 위해 연구개발비(108억원)를 신규 반영한다.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세먼지저감 관련 부품·장비 등을 국내업체의 부품개발, 실증, 사업화까지 연계·융합하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 순환경제 활성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에너지 용·복합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재자원화·재제조 기술 개발을 통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특히,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4개소) 설치를 신규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 및 화학적 재활용을 확대하여 경제적·환경적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모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재활용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2021년) 30억원 → (2022년) 360억원)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Post-플라스틱 등 재활용 산업의 집중 육성 및 실증화 연구, R&D, 교육·홍보를 통해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재활용 산업의 효율화 및 집적화를 지원한다.

##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 ⚙️ 취약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석탄발전 등 산업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15만명)의 대체·유망분야로의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을 뒷받침한다.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 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구조 대응을 위한 ‘내일배움카드’특화훈련 과정(2.5만명, 신규)과 중장년층 경력재설계를 위한 ‘새출발 크레딧’을 지원(0.5만명, 신규)하고, 재직 중 신산업 기술 습득을 위한 중장기 유급휴가훈련(1만명), 전직직원 서비스 제공 기업에 노동전환 지원금(인당 220만원)을 지원(0.2만명)한다.

신산업진출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등 사업재편지원 기반구축을 위해 융자·펀드, 맞춤형 컨설팅, 재편분야 핵심기술 R&D 등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업 전환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 지역중심탄소중립실현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와 지원기반 구축 지자체 탄소중립 목표를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수립 등을 지원,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의 건물 제로 에너지화·친환경차 보급목표 할당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방식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를 확대(25 → 50개소)한다. 기초 지자체(90개, 신규)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17개)에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19억원) 선정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 국민인식 제고

국민 입장에서 탄소중립이 일상과 밀접한 것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인식공유와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 전반의 변화 실천을 유도한다.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 경로 등을 통해 전 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사회,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양성과정에 기후변화 등 환경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9억원, 신규)한다.

RE100 캠페인 사례 등 저탄소 경영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확산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 운영(55억원) 및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신설(37억원) 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로 탄소중립 전 과정에서 직접 실천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 4)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강화

### ⚙️ 녹색금융 활성화 및 R&D 확충 등

7.5조원 규모의 녹색금융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양적 질적 확충을 도모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을 뒷받침한다.

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CCUS) 및 에너지효율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에 분야별로 맞춤형 투자를 실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개발(R&D)과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위한 융자, 펀드 등 녹색금융을 통해 녹색전환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여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제고한다.

### ⚙️ 新기후체제 대응 및 재정 운영기반 구축

미국과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세 등에 국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영향산정방법 개발(49억원) 등을 통한 新국제질서 대응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대응기금(2.4조)을 신설해 탄소가격 신호 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매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한다.

#### 기후대응기금 신설 (2.4조원)

▣ (목적) 기후위기 적극 대응 + 脫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 효율적 추진

▣ (기금구조)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탄소 배출권 매각수입 등(수입) + 탄소 감축 목적 사업(지출)으로 구성

세 입	①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수입	0.7조원
	②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7%)	1.1조원
	③ 타 회계·기금 전입	0.7조원



세 출	① 온실가스 감축	0.9조원
	②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0.7조원
	③ 취약 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	0.2조원
	④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	0.6조원

※ 세입·세출간 차액은 여유자금으로 활용



## 1-3 ▶ 3+1 투자계획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1.4조원 수준 과감한 재정투입, 새로운 재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

## 1. 경제구조 저탄소화

('21) 5.0 ▶ ('22) 7.9조원

##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설비 발전 금융지원(0.7조원), 축사 산단 지붕 등 친환경적 지역 보급(0.3조원) 확대

- 가정용 스마트전력계량기 133.4만호 보급 추진(282 → 1,267억원)
- 지역 융복합 설치지원 및 지자체 지원
- 그린수소 생산기지 3개소 지원(50억원, 신규)

## ▶ 철강·시멘트 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147억원) 및 산업계 온실가스 저감 설비지원

- 중소기업 저탄소화에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 지원(55억원, 신규)
- 탄소저감형 석유계 원료대체 화학공정기술개발(57억원, 신규)
-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감축설비 지원(222 → 879억원)
- 산단 열 공급업체 연료전환 설비(유연탄 → 바이오매스) 지원(100억원, 신규)

## ▶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22년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위해('21) +11.6만대 → ('22) +23.6만대로 2배 이상 보급 확대 (1.6 → 2.8조원)

구 분	'21년	'22년	(전년대비)	'25년
전기차(누적)	23.9만대	44.6만대	(+20.8만)	113만대
수소차(누적)	2.6만대	5.4만대	(+2.8만)	20만대
전기차 충전기(누적)	9.9만기	13.7만기	(+3.8만)	51.2만기
수소차 충전소(누적)	180기	310기	(+130)	450기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탄소 흡수원도 확충

- 도시 열섬완화에도 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숲(34 → 108개소), 미세먼지 차단 숲(156 → 193ha) 등 도시 숲 대폭 확대(2,338 → 2,688억원)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연장
- 추가 감축수단으로 국립공원 육상 탄소 흡수원 확충
-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지원

## 2. 신유망 · 저탄소 생태계

(‘21) 0.6조원 ➡ (‘22) 0.8조원

- ▶ **그린수소 생산 · 저장 화이트바이오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 기반 확보**
  -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3세대 자동차 기술개발(474 → 591억원)
  - 기술수준이 높고 시장 확보가 용이한 CCU실증 및 상용화(신규, 66억원)
  -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신규, 36억원)
- ▶ **탄소저감 등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유망기업 사업화 등 지원**
  - 탄소중립 관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 과정 신설(신규, 150억원)
  - 중소 유망기업(100개)의 사업화 자금 지원(477 → 612억원)
- ▶ **재자원화 · 재제조 기술 개발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 구축(신규, 43억원)
  - 폐플라스틱 · 폐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 본격 조성(30 → 360억원)

## 3. 취약계층 · 산업 · 지역의 공정한 전환

(‘21) 0.3조원 ➡ (‘22) 0.5조원

- ▶ **내연차 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뒷받침**
  - 재직 중 신산업 기술습득을 위한 중장기 유급휴가훈련(1만명)내일배움카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과정 신규지원(2.5만명)
  - 중장년층 경력재설계를 위한 ‘새출발 크레딧’ 신규지원(0.5만명)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노동전환지원금(인당 220만원) 지원(0.2만명)
  - K-digital Credit(5.5만명),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100만명) 확대
- ▶ **사업전환 · 재편기업을 위해 융자 · 펀드 0.4조원, 맞춤형 컨설팅(740개사), 재편분야 핵심기술 R&D(180억원) 등 선제 지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설비 투자 일부 지원(240억원, 신규)
- ▶ **지역 민간 주도 방식 실현을 위해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17억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인센티브(37억원) 등 신규 지원**
  - 지역주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17개 광역지자체, 신규), 90개 기초 지자체 탄소중립 전략 수립 지원(63억원, 신규)
  -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등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도입(37억원, 신규)학교 교육에서 탄소중립 교육 강화(9억원, 신규)

## 4. 제도적 기반 강화

('21) 1.5조원 ➡ ('22) 2.2조원

- ▶ 녹색금융 7.5조원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
  - 기술보증기금(450억원, 신규), 신용보증기금(450억원, 신규)에 탄소중립 보증 신설
  - 탄소중립전환 저탄소 설비 융자 지원(1,300억원, 신규)
  - 5조원 규모 자금 공급을 위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142.5억원, 신규)
- ▶ 부문별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CCUS 등 획기적 기술에 맞춤형 투자
- ▶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新국제질서 대비 탄소영향산정방법개발(49억원) 등을 통한 기반 구축 지원
 

\*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 3-2 ▶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 (All Digital)

### 1) 디지털 빅뱅

#### ⚙️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및 산업 인프라 지원

국내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도모하고, 관련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및 산업인프라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2021년 703억원 → 2022년 897억원)한다.

먼저, 공공·산업현장에 XR기술을 적용하여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 등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등 콘텐츠 개발 분야에 668억원을 지원하여 초기시장 육성에 앞장선다. 또한,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메타버스 허브 구축을 확대하고, 13개 지역에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하는 등 산업인프라 분야에 229억원을 지원하여 메타버스 기업의 성장환경도 고도화한다.

#### ⚙️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AI 허브에 무료로 공개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자원으로, 다양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구축의 핵심 과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30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방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5,797억원을 투입해 헬스케어, 농·축·수산 등 주요 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을 구축·개방([www.aihub.or.kr](http://www.aihub.or.kr))한다.

또한, 2022년에는 신규 데이터 구축뿐 아니라, 구축된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마련되고, 각 분야별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해 누구나 사공간 제약 없이 데이터 구축에 참여하여 인공지능 개발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공공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 지원

최근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까지 확대되고, 이용 대상은 비중요 정보에서 비밀·안보·수사·내부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되는 등 민간 클라우드 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의 수는 38개(2021.12월 보안인증 유지 기준)에 불과하며, 다양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SaaS를 확충하여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을 촉진하고, 행정업무·공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DX)을 위하여 2022년부터 ‘공공이용 SaaS 개발 지원’사업(80억)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의 수요가 높은 SaaS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업의 SaaS 개발·전환·검증을 지원(20개)하며, 기존 구축형 소프트웨어의 SaaS전환, 신규 개발, 기존 SaaS의 고도화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개발된 공공 SaaS의 보안인증 획득, 디지털서비스 품질요건, 플랫폼 호환성 등을 확보하여 공공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고,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도 등록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과 같은 블록체인 전문공급기업이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메인넷과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미들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검증과 함께, 서비스 글로벌화를 위해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BaaS 활성화 및 신남방 국가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검증을 제공한다.

## 2) 생활 디지털

### ⚙️ Si의료 진단·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교육 지원

의료분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닥터앤서클리닉을 8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AI앰블런스를 2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시범 도입한다. 닥터앤서클리닉은 의료데이터 분석·판독이 가능하여 의료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하고, AI앰블런스는

응급환자가 응급실 도착전까지 최적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AI의료 활성화를 위해 AI native Doctor 교육을 의과대학 학생 대상으로 제공하며, 닥터앤서 개론, 임상사례 등 닥터앤서 SW 스쿨교육을 의료진 및 의료SW기업 대상으로 추진한다.

### ⚙️ 화학물질 재난사고 대응 등 재난발생을 예측하고 피해확산 범위를 분석하는 AI 솔루션 개발 등 AI+X 확대

재난·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공지능 융합을 확대한다. 화학물질 화재사고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출된 화학물질을 식별하는 인공지능 솔루션과, 드론이 촬영한 산림영상을 분석하여 산림해충 고사목을 탐지하고 확산범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다. 부처 협업(과기정통부-소방청·산림청)을 토대로 개발된 솔루션을 119 상황실,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 본부 등에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 중앙도서관 등 논문·도서를 통합한 디지털 집현전

정부·공공기관 등(29개 기관, 75개 웹사이트)에서 분산 제공 중인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 검색 기능, 집현전 오리지널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22~'23년, '22년 70.76억원)을 추진하고 '22년 말에는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2022년 1월 서울 일부 지역과 대전 지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7월부터 전국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으로 운전면허증 분실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 위변조 및 도용 위험 등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온라인에서 실물 서류 없이 활용되는 전자신분증 역할을 하여 온라인 금융·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안전성 측면에선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면허증에 있는 각종 개인정보는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저장된다. 앱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 화면을 캡처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도 지문 등의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접근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처음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첫 시도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 3) K-사이버방역

#### ⚙️ 랜섬웨어 피해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데이터 백업 지원

중소기업이 랜섬웨어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거나 중요한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데이터 백업을 신규로 지원(55억원)한다. 데이터 백업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며, 총 5,000개사 대상 기업당 최대 200만원의 백업비용을 지원한다.

#### ⚙️ 기업 맞춤형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플랫폼 신규 구축

기업의 보안 면역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모의훈련 플랫폼을 2022년 부터 신규 제공(14억원)한다. 모의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이버 위협 콘텐츠 및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훈련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등 기업의 환경에 최적화된 훈련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 AI 기반 악성의심 도메인 탐지·차단 시스템 확대

악성으로 의심되는 도메인에 대한 선제적 탐지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AI 탐지 시스템 구축 예산(27억원)을 확대 반영하였다. 먼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는 악성도메인 탐지범위를 대폭 확대(2021년 시범운영 1개소 → 2022년 6개소)강화하였다. 또한, 악성도메인을 자가 학습·탐지할 수 있는 AI모델 개발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위협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 ⚙️ 중소기업 사이버 침해사고 기술지원

침해 사고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현장출동 피해복구 조치와 원격 보안점검 서비스를 지원(43억원, 1,100건)한다. 침해사고에 대한 현장 출동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제거하고, 과거 침해사고 이력이 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기업은 원격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한다.

## 4) ICT 지역확산

### ⚙️ 인공지능 융합 집적단지 구축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인공지능 핵심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 핵심자원(데이터·기술·인력)과 인프라(데이터센터, 실증장비)를 한 곳에 집약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와 실증·창업·교육공간 등 2개동을 건축하며, 광주 주역산업(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실증장비(14종)를 구축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인공지능 기반 신제품 서비스 창출을 위해 산업융합형 연구과제(20년~/14개 과제)를 추진중이며, 인공지능 특화 창업 지원체계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시제품 제작(30개사), 제품 고도화를 지원(8개사)한다.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무형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한다.(AI융합대학 760명, AI직무전환교육 200명, AI고급인재양성 300명)

### ⚙️ 지역산업 맞춤형 AI 고급인재양성

지역 특화산업에 기반한 프로젝트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몰입형 인재육성 모델 구축 및 인공지능 산업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일명 ‘인공지능 사관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교육생 전용 교육장 및 기숙사를 구축하고, 온라인 Pre-과정, 중·고급과정, 프로젝트과정 등 3단계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인공지능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기업이 참여하여 취업과 창업을 연계한 고용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 생산공정 최적화 등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각 지역별 특화산업과 인공지능 융합을 확대('21년 1개 → '22년 6개 광역지자체)한다. 지역기업이 보유한 제조 데이터를 토대로 제품설계, 공정 최적화, 품질 관리 등 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산업 현장에 도입한다. '23년까지 국비 총 231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 산업의 생산성을 5% 이상 향상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디지털 전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 ICT 기술을 통해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 빌리지

나날이 심화되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를 위해 지역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경로당·보육센터 등) 대상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한다. 2022년도에는 총 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 체감형 ICT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지역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 3-3 ▶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1) 뉴딜 2.0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21년 1.1조원 → '22년 1.7조원), 그린뉴딜('21년 1.3조원 → '22년 1.8조원) 등 관련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지능형 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509억원), 딥러닝 이후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371억원) 등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2050 뒷받침을 위해 디지털 기반 전력수요 관리('21년 2,140억원 → '22년 2,404억원)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21년 2,839 억원 → '22년 2,972억원) 등 선도기술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 전체 R&D	27.4조원	29.8조원	+8.7%
· 뉴딜 R&D(비중)	2.4조원(8.8%)	3.5조원(11.8%)	+46.8%(+3.0%p)

## 2) 미래주력산업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분야 선도자(First Mover)로 단계도약을 위한 R&D 고도화를 통해 미래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를 '21년 2.4조원 → '22년 2.7조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전력반도체(192억원)와 모바일·자동차·바이오·공공 수요 등 4대 주력산업과 연계한 첨단센서 기술(153억원) 등에 신규로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차세대 백신개발 등 감염병 대응 기반을 구축('21년 4,424억원 → '22년 5,102억원)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투자를 강화('21년 2,483억원 → '22년 3,539억원)하는 등 원천기술 개발 및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조성에 투자한다.

또한 미래차 기술 개발을 위해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주행효율 향상과 내구성 강화, 2027년 자율주행차 고도화(Lv. 4) 등을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에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향상과 핵심부품의 국산화로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2.0에 신규(206억원) 투자한다.

### 3)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신산업분야에 대한 프론티어형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전략산업분야를 선점하고자 한다. 민간 주도 우주개발인 「New Space」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21년 4,626억원 → '22년 6,477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계 7번째로 개발한 주력발사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발사체 개량 및 반복발사에 1,728억원을 투입한다. GPS를 대체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착수(845억원)하고, 민간중심 중소형위성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21년 381억원 → '22년 815억원)한다. 또한, 달 탐사 및 Artemis 국제협약 이행 등을 위한 우주탐사를 지원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신설(5개소)하여 인력양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자컴퓨팅·인터넷, 6G 분야에 투자도 '21년 459억원 → '22년 927억원으로 강화하여 미래 IT·NT의 게임체인저 기술을 선점한다. 양자컴퓨팅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를 구축(신규 100억원)하고, 양자인터넷 핵심기술을 개발(신규 72억원)하며, 한미 파트너십 체결('21.5.22.)에 따른 한미 공동연구를 신규(60억원) 추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6G 인프라 기술 및 장비·부품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기술 및 인력양성에 대해 투자를 확대('21년 172억원 → '22년 308억원)한다.

### 4) 도전적 기초연구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에 2.55조원을 투입하여 2017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17년 1.26조원)하는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한다.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하고 과학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공학·인문학 등 도전적 융합연구(STEAM연구)에 대한 지원도 '21년 205억원 → '22년 369억원으로 확대한다.

## 3-4 ▶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 양성

### 1) 핵심인재양성

첫째, 산업 디지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주도형 SW아카데미(550명, 77억원)와

산업전문인력 AI교육(1.8 → 5.6천명, 186억원)을 지원한다. 둘째, 산업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한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284억원)을 양성한다.

셋째, 양자·우주·로봇·UAM 등 미래원천기술을 선도할 양자정보과학 분야 인재를 양성(71억원)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 5개소를 새롭게 개소(91억원)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나갈 생물소재개발·생태복원 등 녹색융합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161억원)하고, 혁신·융합형 의사과학자(251억원)를 지원한다.

[표 4-1] 핵심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계획

신기술 (분야수)	주요 분야	'21년	'22년
❶ 디지털 (8)	AI, 클라우드, 5G·G, 빅데이터 등	8.1만명	11.5만명
❷ 산업기술 (6)	로봇·드론, 첨단소재, 시스템반도체 등	1.4만명	2.3만명
❸ 미래원천기술 (3)	수소, 양자, 우주	0.1만명	0.15만명
❹ 환경·바이오 (3)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1.7만명	1.9만명
계 (20)	—	11.3만명	15.8만명

## 2) 실전형 인재교육

첫째, 산업 수요에 맞춰 산학 연계형 LINC 3.0을 재설계(4,070억원)하고, 대학혁신 지원사업 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과정을 신설(600억원)한다. 둘째, 대학생 등이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8대 신기술 분야를 온라인 등으로 수강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확대(832 → 890억원)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인재에게 해외연구경험 제공하고, 해외인재 국내 유치 및 해외연구자 교류 등을 추진한다.(717 → 807억원)

## [표 4-2] 실전형 인재교육 주요 내역

- (국내 → 해외) 글로벌인재양성 지속 지원(ICT · 산업 · 에너지 · 보건 등, 373억원)
- (해외 → 국내) 해외우수과학자유치(BrainPool)(306 → 374명, 301 → 361억원)
- (교류지원) 우수연구자 교류지원 사업(BrainLink) 신설(73억원)

## 3) 신기술 직업훈련

첫째, 기업 참여 디지털 직업훈련(1.7 → 2.9만명)과 중소기업 자체 인재양성(S-OJT) 과정 등 기업주도형 직업훈련을 확대(0.2 → 0.5조원)한다.

둘째, K-Digital Credit(4 → 5.5만명)과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28 → 100만명) 등 디지털 기초교육을 확대 제공한다. 셋째, 직업계고 대상 미래유망분야 심화교육을 확대(8 → 40개)하고, K-Digital Platform을 추가(5 → 20개소)하는 등 인력양성체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AI+X · 그린테크 등 폴리텍 학과개편(121 → 200억원) 및 폴리텍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5억원) 등 폴리텍의 미래형 기술교육을 지원한다.

## 한국판 뉴딜 2.0

### 1-1 ▶ 한국판 뉴딜 2.0

정부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 충격으로 발생한 전례없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고, 비대면 수요 증가·저탄소 친환경 경제 확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하에 '20년 7월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간 국비 114.1조원 수준의 재정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20년 3차 및 4차 추경을 5.4조원 편성하여 뉴딜 사업을 즉시 착수하였고, '21년 본예산 21.0조원 및 추경 1.8조원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재정투자를 시작하였다.

한국판 뉴딜 계획의 기반 마련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지난 1년간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의 충격이 지속되어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 노멀로 정착되는 등 대내외 정책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에 불평등 및 격차해소, 청년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망 강화'분야를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하고, 디지털·그린 분야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등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여 '디지털+그린+휴먼'의 3축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21.7월)하였다. 마중물 재정지원도 대폭 강화하여 '25년까지 국비 총 160조원 수준, 총사업비를 2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22년 본예산 33.1조원을 확정하였다.

'22년 정부 예산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초연연결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에 9.0조원,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구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등 그린뉴딜에 12.7조원, 청년정책·격차해소 등 휴먼뉴딜에 11.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1-2 ▶ 부문별 세부내용

### ■ 디지털 뉴딜

#### ⚙️ D.N.A. 생태계 강화

헬스케어, 농·축·수산 등 주요 분야에 대한 AI 학습용 데이터 310종을 구축·개방하고, 중소기업 등에 AI 바우처 350건과 데이터 바우처 2,680건을 지원한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공공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2022년 7월), 랜섬웨어 피해방지를 위한 중소기업(5,000개사) 데이터 백업을 지원(기업당 최대 200만원)한다.

####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농어촌 마을 482곳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전국 공공장소(복지센터, 도서관 등)를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1,4만개)을 계속 확대한다. 또한 AI의료 진단·서비스를 8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AI앰블런스도 2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6개 지자체를 선정해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등 체감형 ICT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의료·교육분야 등에 대한 비대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ICT 핵심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국내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성장을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및 산업인프라 지원을 대폭 확대(2021년 703억 → 2022년 897억원)한다. 공공·산업현장에 XR기술을 적용하여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 등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등 초기시장 육성에 앞장선다.

## ⚙️ SOC 디지털화

향후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철도 신호시스템을 2022년부터는 노후화된 외산 아날로그 신호설비를 국산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는데 착수하고, 도로부문에서는 국도 4,520km에 ITS를 구축하고, C-ITS 도입을 위한 통신기술 연구를 추진하는 등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 그린뉴딜

### ⚙️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도시화로 단절된 녹지생태계 연결·복원 등 순환 경제와 흡수원에 기반한 자연·생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4,356억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으로의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변화에 따른 취약 산업을 지원(5,821억원)한다.

###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저하로 관리비용 낭비가 발생됨에 따라 노후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을 정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전면 제로 에너지화 달성에 1.4조원을 투자한다. ICT 기반의 스마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상·하수도를 관리하고, 노후 상수도의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1.1조원)한다.



###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6,318억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장기, 저리의 사업비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1.97조원을 투자한다. 그린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 차량의 미세먼지 저감 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등 3.94조원을 투자한다.

###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린뉴딜 100대 유망기업 육성 등 녹색 분야 선도사업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ICT기술을 활용해 산업단지의 녹색 환경을 조성(8,676억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미래환경산업 융자 등 저탄소·녹색 산업 혁신을 지원(9,384억원)한다.

## ▣ 휴먼 뉴딜

### ⚙️ 청년정책

첫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289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사회복귀준비금(2,16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둘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月20만원)를 특별지원(821억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장학금 기초·차상위 계층 및 소득분위 5~8구간 대상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 ⚙️ 격차해소

저소득층 기초학력 향상 위해 첫째, 학습특별바우처를 신규지급(年 10만원, 101억원)하여 초중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둘째, 우수한 저소득층·도서벽지 학생을 선발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확대(512 → 600명)한다.

한편, 한부모·노인·장애인 돌봄격차 해소 위해 첫째, 한부모 가족 근로소득공제

(30%) 신설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도입(1천명)한다. 둘째, 디지털 돌봄 확대(8.4 → 12.7만명) 등 ICT기반의 스마트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2.4 → 2.7조원)한다.

### 사람투자 및 안전망 구축

사람투자의 일환으로 AI·SW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3.3 → 5.9만명) 하고, K-digital training 다각화 통해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2.9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 4-1 ▶ 스마트 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2022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4,6조원으로 2021년 52,8조원 대비 3.4% 증가한 규모이다. 전력운영비 규모는 37,9조원으로 2021년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전투역량 강화, 군 사기진작, 비전통적 위협 대응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편비 규모는 16.7조원으로 2021년 17.0조원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미래전 대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 1) 첨단전력 증강

##### ⚙ 미래 첨단무기 보강을 위한 선제적 국방R&D 투자 확대

미래 게임체인저급 신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을 '22년 세부 사업으로 별도 분리·편성 및 스텔스탐지레이더·극초음속미사일·군용자율로봇 등 최첨단기술을 선제적·도전적으로 연구 개발한다.

더불어 감시·정찰전력 보강을 위해 초소형위성체계·위성항법체계·MUAV와, 적 미사일 방어를 위한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및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아이언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고위력·장거리 유도무기 등 무기체계 R&D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민·군 상호 기술 이전·활용 및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국방R&D의 개방성을 높이고, K2 전차, K9 자주포, FA-50 훈련기 등 수출무기의 부품·소재를 국산화하여 방위산업을 육성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확대·추진한다.(2021년 4.3조원 → 2022년 4.8조원)

## 2) 전투역량 강화

### ⚙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및 국방운영 첨단화

첨단장비 운영에 적합한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정원구조를 개선하고 병력 감소 자원을 간부·군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투부대는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비전투부대는 민간인력 활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  
(부사관·군무원 5,503명 증원)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을 통해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시킨다.

또한, 중·소대급 포병 사격훈련용 마일즈 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를 확대하여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간다.(2,560억원).

### ⚙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병장기준, 월 676,100원)하고,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기본급식비 단가를 대폭 인상(일 8,790원 → 11,000원, 25.1%) 및 민간조리원 910명(2,278 → 3,188명)을 증원한다. 병 자기개발비 지원을 확대(연 10만원 → 12만원)하는 한편,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기본금리에 1%를 추가 지급하고, 납입 원리금에 대하여 1/3 매칭지원금을 지급하여 사회와 단절없는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을 지원한다.(2,190억원). 병사의 군 복무 중 질병, 상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한다.(본인부담금의 최대 96%) 또한, 학군후보생 역량강화 활동비(월 8만원) 신설, 간부숙소 개선(4,890 → 5,934실)을 통해 간부의 복무여건을 향상시킨다.

### ⚙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 보강

PCR 검사비 신규 지원(214억원), 보건용 마스크 기존 주 3매에서 주 5매로 확대

지급(536억원), 방제용역 실시(연 5회) 등 의무장비·물자 보강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보강한다.(1,353억원) 아울러, 대테러·대화생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장비·물자 도입 예산도 반영하였다.(562억원)

### 3)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및 新안보 외교 강화

#### ⚙️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협력을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등 보건 외교를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공여하고(1억불), 루마니아 백신 도입에 상응하는 의료물품을 제공하고(88억원),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운영한다.(2억원)

#### ⚙️ 경제안보 역량 제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보·경제의 다층적·복합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의 개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및 주요국들의 대응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안보 전담조직인 경제안보센터(가칭)를 신규 설립(26억원)한다.

#### ⚙️ 과학기술 외교 강화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로 과학기술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점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혁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21년 3억원 → ’22년 8억원)

### 4) 외교 다변화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

#### ⚙️ 중남미·아중동으로 외교지평 확대

중남미 국가들과는 21.6월 제4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화상)를 11년만에

개최하였으며, 2022년에는 우리나라와 중남미 15개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과 기후변화, 보건위기 등 전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협력 과제를 개척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 및 양자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신규 4억원)하고, 중미통합체제(SICA)와의 실질협력을 강화한다.(5억원)

이와 함께, 아중동 지역에서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도입원 및 해외 인프라 수주 기반으로 전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대안으로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아중동 국가들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 및 대중들의 상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동 국가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강화(20 → 21억원)하고,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을 확대한다. (42 → 52억원)

###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 제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22년에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23.6월 선거 예정)을 위해 선거 교섭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10억원)

아울러, 2022.1.1 국제기구 분담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이 우리 외교정책에 부합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법정부 국제기구 분담금 통합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운영(7억원)할 계획이다.

## 5) 전략적 ODA

### 🌐 그린 · 디지털 ·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 지원 규모 확대

'19년 대비 '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이상 확대 추진하겠다는 G20 정상회의(19.6월) 공약 달성을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가능한 그린 · 디지털 · 보건 분야(1.0 → 1.2조원)를 중심으로 ODA 규모를 확대한다.(3.6 → 3.9조원) ODA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협업 · 연계하는 융합 ODA(예: 홍수 예 · 정보 마스터플랜 (환경부) +

시스템 구축(외교부 등) + 감시·예측 통합플랫폼(기상청))을 확대하여 (3,248 → 3,937억원) 부처 간 분절화를 해소하고, 사업 효과성을 제고한다. WHO·GAVI 등과 글로벌 백신협력을 강화하고(478 → 710억원),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해 COVAX AMC(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에 1억불을 차질없이 공여한다. 상생의 국익 실현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0.87 → 0.91조원)

### ⚙️ 청년·기업의 ODA 참여 활성화 및 국제기구 진출 기회 확대

WFK 해외봉사단, 영프로페셔널 등 개발협력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2.9 → 3.4천명, 538 → 794억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유엔자원봉사단 등 인재 양성도 확대하여(90 → 100명, 111 → 121억원) 청년들의 ODA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 확대를 위해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26 → 28건, 55 → 74억원),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35 → 43건, 119 → 140억원) 등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6)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 대북·통일정책 플랫폼 구축

국민들의 의견에 기반한 대북·통일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민간단체,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포럼'과 '분야별 민관협업 협의체'(사회통합, 교류협력, 인도협력)를 운영하고,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기반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3~'27)등을 수립해나가는 등 평화·통일 관련 민관협업을 강화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다.(12억원)

### ⚙️ 통일에 대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

그간 통일·북한 관련 우호적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해외 학자를 초청하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등을 운영해온 바, 이에 더해 '22년 예산안에는 해외 연구소·학자 등 대상 연구지원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여(3.25억원) 통일 북한 관련 해외 연구자의 저변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해외 동포 대상 문화 행사 개최를 확대하여 (0.3억원 → 1.9억원) K팝, K드라마 등 한국문화를 매개로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한다.

## 7) 통일 · 북한 관련 대국민 서비스 확대

### ⚙️ 통일정보자료센터 확충을 통한 북한 · 통일 정보 제공

국내 통일 · 북한자료 최대 보유 기관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89년 개관 이래 장서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이용자 불편 등이 제기되어 온 바, ’25년 하반기 ‘통일정보자료센터’신축 개관을 목표로 ’22년 부지계약과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32.8억원).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국내외 유일의 북한전문도서관이라는 기능과 함께 통일사료관의 기능도 확충하여 북한연구 및 통일대비 거점 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 통일+센터 확대를 통한 지역별 평화통일 거점 구축

지역 거점별 통일 · 북한자료 제공, 참여 ·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통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일+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8년에는 인천 지역에, ’21년에는 전라도 목포와 강원도 춘천 지역에 통일+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22년도에는 각각 충청도 홍성군과 경기도 의정부시에 설치할 계획이다. (52억원)

### ⚙️ DMZ 평화의 길 걷기 인프라 정비

DMZ 내 통일걷기 노선을 횡단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30km 마다 숙소, 휴게소, 화장실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DMZ 출입체계를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64억원)

## 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 및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 ⚙️ 지자체 교류 지원 및 여건조성에 따른 다양한 남북교류 추진

남북간 여건 조성시,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311억원). 이를 통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체육, 교육 · 학술, 문화예술, 종교 등 사회문화 교류와 보건의료, 농축산, 산림 · 환경 등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남북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4-2 ▶ 백신 · 방역 등 감염병 대응

### 1) 백신 · 치료제

#### ⚙️ 코로나19 백신 구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 글로벌 백신 공급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신규 도입분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으로 화이자 社 백신 6천만회분, 모더나 社 백신 2천만회분 등 mRNA 방식의 백신 8천만회분을 확보했으며, 전년 이월물량 7천만회분까지 합하여 전국민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총 1억 5천만회분을 확보했다. 이 외에 국산백신 1천만회분에 대한 도입계약도 협의중이다.

####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시행비, 백신 보관 · 배송 및 주사기 등 접종물품비 등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예방접종시행비는 서울 30%, 지방 50%를 국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에 한해 서울 40%, 지방 60%를 지원한다.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

####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중증 · 경증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주사용 치료제를 지속 지원하면서, 변이바이러스 대응효과, 투약 편리성 등에서 장점이 있는 먹는 치료제도 구매한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응하여 위중증률 · 치명률 감소를 위해 정부는 MSD社 및 화이자社와 먹는 치료제 100.4만명분을 2022년에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 2) 병상확보 등 공공인프라 확충

### ⚙️ 진단검사 확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지침’상 사례정의 부합하는 자(확진자 접촉자 등)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를 중심으로 무료로 이루어지던 진단검사는 2021년 4월부터 경증·무증상 환자 신속 발견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2022년 진단검사 예산도 일 31만건 이상 가능한 수준으로 마련되었다.

### ⚙️ 확진자 병상확보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코로나19 중증환자 입원·치료 병상 1.4만개 운영을 위해 1조 1,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12월 20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확충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일일 1만명 확진자 발생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2.5만병상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는 중수본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감염병병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였다. 중앙감염병병원은 중앙의료원에 1개소 구축 추진 중이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호남·충청·경남·경북 총 4개소에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에 신규 1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35개소에 대해서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대전·광주·울산의료원은 신규 건립을 지원한다.

### ⚙️ 감염병 대응 지역협업체계 마련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의료기관, 지역 간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력이 중요하므로, 질병청 산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과 지자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

### 3) 의료인력

#### ⚙️ 감염관리수당 지급

코로나19의 치료·돌봄 등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대해 日 5만원 수준의 감염관리수당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노고가 큰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한다.

#### ⚙️ 보건소 한시인력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추경예산 270억원으로 간호사 등 방역 대응인력 한시 고용을 지원하였다. 2022년에도 코로나의 재유행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보건소 인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고, 정규인력의 증원과 함께 한시인력 지원도 연장하였다. 재택치료의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간호사 인력과 일반 방역인력 연간 약 2,000여명이 고용되어, 보건소당 평균 6~8명의 추가인력이 지원될 예정이다.

#### ⚙️ 국공립병원 간호사 인력지원 시범사업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간호사의 현장 적응 및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육 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2022년까지 연장한다.

#### ⚙️ 공공·심야약국 한시 지원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 질환 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 89개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 미운영 178개 시·군·구 중 50%에 해당된다.

#### 4) 백신 자주권 확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방역체계 고도화 등에 R&D 투자를 확대(5,102억원)하여 백신 자주권 확보에도 집중하고자 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신규(385억원) 투자하고 암(癌) 등 치료·공공목적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신규(332억원) 투자한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완료를 앞당기는 前임상(80억원)·임상시험(893억원) 지원과 함께 현장 안전을 위한 시스템·장비 등 운용체계 고도화를 위해 신규(108억원) 사업을 추진하며 방역물품·기기 국산화 등 방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 4-3 ▶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 1) 자연재해 피해 예방

###### ⚙️ 풍수해 예방

지속적인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여 풍수해생활권 정비(35 → 55개소) 및 위험 수리시설 개보수(1.0 → 1.1조원) 등 사전적 예방 투자를 대폭 확충한다. 재해예방 및 재난대응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확대하여 AI기반 위험예측 기술개발(31억원, 신규), LTE기반 재난현장 영상 기반 공유통신망(18억원, 신규) 사업 등을 신규 추진한다. 재해예방사업은 재난피해복구사업과 비교해 사업성과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산림재해 대응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임업자원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의 중요성이 크다. 산불, 산사태의 사전예방을 위해 사방댐(390 → 704개소) 및 임도(271 → 371km) 건설을 확대하고 산불 감시·진화를 위한 산림청 노후헬기 교체(2대, 150억원)를 지원한다.

## ⚙️ 지진 대비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진에 대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철도에 대한 내진보강을 강화(39 → 176억원)하는 한편,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사업(16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소방청 소관 지진훈련시설·비축기지 구축도 확대 지원(5 → 71억원)한다.

## 2) 사회위험에서 국민생명보호

### ⚙️ 자살 예방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등 국민 마음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마음건강을 되찾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57억원, 신규) 및 마음투자(0.26 → 0.3조원)를 확대하는 한편, 8개 권역에 대한 정신응급 의료센터를 설치(19억원)하고 정신응급통합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19억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28개에서 245개로 확충(689 → 732억원)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의 상담인력 보강(+23명)도 지원한다.

### ⚙️ 교통사고 예방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일명 ‘민식이법’)됨에 따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누적 1.6만개 규모의 단속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통사고 다발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 투자도 지속 확대(1,486 → 1,551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 ⚙️ 산업재해·화재 예방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영세사업장 3대 위험기계(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에 대한 전면교체를 지속 지원(0.4만개, 0.2조원)한다.

또한, 끼임·추락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원·용자를 확대(1.5만개소, 0.4 → 0.5조원)하고, SW프리랜서·대학원 연구생 신규 지원 등을 위해 산재보험도 확대(6.5 → 7.1조원)한다.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화재취약 요인이 있는 피난약자·다중 이용시설 건축물(어린이집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재 안전성능 보강 투자(57 → 459억원)를 대폭 확대한다.

### 3)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 수질

ICT·AI 기반 하수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 등 스마트 수질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지원(204 → 384억원)한다. 수돗물 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2,503억원)하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4,568억원)한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해양·먹거리 안전 제고를 위해 해양방사선물질 감시 강화 투자를 확대(910 → 1,268억원)하고, 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 도입(15대, 33억원)을 지원한다.

#### 통합물관리

낙동강 유역의 먹는물 해결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98억원) 및 상류 산업단지 하수·폐수 처리시설 고도화(13억원)를 지원한다. 가뭄과 같은 기후위기 및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하천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취수·양수를 위한 한강·낙동강 시설개선에도 투자(308억원)한다.

#### 대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확대한다. 차량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35만대)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1,126억원)한다. 또한,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을 확대(23 → 61만대)한다.

## 🔧 폐기물

고품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충청권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활용 수거·선별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364 → 481억원)한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신유형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열분해시설(4개소, 설계비 등 10억원) 및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구축(4개소, 설계비 12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해 친환경부표 교체(200 → 400억원) 및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기술개발(73억원, 신규)도 지원한다.

## 4-4 ▶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1) 학대피해아동

#### 🔧 재정지원체계 일원화

그동안 아동 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호 인프라 조성 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①복지부 일반회계, ②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③기재부 복권기금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재정지원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복권기금\*\*(기재부)을 통해 지원하던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핵심 사업들을 '22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지원 : ('21)287억원

\*\*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인 '그룹홈'(장기), '학대피해아동쉼터'(단기) 설치·운영 지원 : ('21)267억원

## ⚙️ 재정지원 투자규모 1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①공동생활가정(그룹홈, 505 → 517개), ②학대피해 아동쉼터(105 → 141개) 및 ③아동보호전문기관(81 → 95개)을 대폭 확대(+224억원) 하였으며,

치유·회복 지원을 위해 ①아동보호전담요원(524 → 715명) 확충 및 ②심리치료 인원을 확대(2,000 → 4,750명)하고 가족방문회복 프로그램을 신설(1,000가정, 22억원)하였다.

- (인프라) 준공 15년 경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개보수 (각 1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단가 인상(33%)
- (조사지원) 아동학대조사 공무원의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 지원 (229개 시군구 각 1대)
- (치료지원) 중대사건 전문치료 등 수행 거점전담의료기관 신규 지정(8개소)

## 2) 위기아동

### 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 ⚙️ 경제적 지원 확대

소득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21.8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월 30만원)의 지급 기간을 기존 3년 → 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53억원)하였으며,

\* ('19) 수당 신설(2년 이내) → ('20) 3년 이내 → ('21.8월) 5년으로 확대

초기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매칭 비율(1:1 → 1:2) 및 지원규모(월 5 → 10만원) 또한 확대하였다(250 → 554억원). 이를 통해 아동당 평균 적립금 규모는 '20년 447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전담기관 신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개인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전담요원 120명 배치)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기관당 3억원, 신규 77억원)할 계획이다.

## 2-2) 입양아동(가정위탁지원 포함)

### ⚙ (일반회계) 입양대상아동 및 전문아동보호비 신설

'22년부터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입양 전 입양대상 아동 위탁 보육 가정에 국고로 아동보호비(월 100만원)를 신규 지원(463명, 19억원)한다. 아울러 장애 등으로 입양이 곤란한 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 활성화를 위한 전문아동 위탁보호비(월 100만원)도 신설하였다.

### ⚙ (복권기금) 입양축하금 신설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우리나라는 과거 국외 입양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국내 입양 활성화 노력 및 국외입양 상한제(키티제) 시행 등을 통해 '07년부터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10년 이전	2011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49,220	238,105	7,495	880	863	681	704	492
국내	81,124 (32.6%)	74,409 (31.0%)	4,679 (62.4%)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260 (52.9%)

그러나 여전히 매년 200~300명의 아동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고 있어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22년부터 아동을 입양한 모든 가정에 지급하는 '입양축하금'(200만원)을 신설\*하고, 지난 10여 년간 동결되었던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 2022년부터 출생 가정에게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입양=출산"이라는 인식 확산에 더해 아동 양육 초기부담 경감 목적에서 추진

### 3) 여성 · 외국인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일인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부가가치 분야 전문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예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결혼이주여성을 700여명을 채용하는 등 여성과 외국인의 사회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기존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앞서 매뉴얼,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성희롱 · 성폭력 인식개선 교육 및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4)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 초기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탐지기를 확보(신규, 10억원)하고,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3배 확대((2021년)0.3만대 → (2022년)1만대)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확대((2021년)7개소 → (2022년)10개소)하고, 디지털 스토킹 예방 활동(신규, 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아동 · 여성 · 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인권친화적 조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용조사실을 확대((2021년)35개 → (2022년)50개)하고, 피해자 국선번호를

확대((2021년)69억원 → (2022년)92억원)한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수용공간을 확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신규, 13억원)을 설치한다.

## 4-5 ▶ 가족 행복 ·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 1) 아동수당

아동권리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2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기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지급 연령 확대로 +43만명, +0.4조원)\*한다.

\* 아동수당 확대소요 : 0.53조원(국비 0.39조원, 지방비 0.14조원)

\*\* (도입) '18.9월 6세 미만 → (1차 확대) '19.9월 7세 미만 → (2차 확대) '22.1월 8세 미만

#### 〈연도별 예산 및 사업추진 경과〉

구 분	예산(억원)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7,096	('18. 9 : 아동수당 도입) 소득 · 재산 하위 90%, 6세 미만 대상 아동수당 224만명 지급(18.12기준)
2019	21,627	('19. 4 : 보편지급) 전 소득계층, 6세 미만 ( '19. 9 : 연령확대) 전 소득계층, 7세 미만
2020	22,838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아동수당 수급 이력 포함 근거 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20. 6개정)
2021	22,195	—
2022	24,039	지급대상을 7 → 8세 미만으로 확대

## ※ OECD 국가 사례 ('21년 기준)

① 지급대상 : 대부분 16세 미만~18세 미만 까지 지급하며, 고소득층 배제 없이 전 계층을 지원하는 국가가 다수(66%)

연령	6세	7세	15세	16세	17세	18세	18세	합계
OECD 국가수	1 (호주)	1 (한국)	1 (라트비아)	9	1 (핀란드)	17	2 (프랑스, 체코)	32

② 지급금액 : 평균 12만 4천원, 연령 무관 동일 금액 지급 국가 다수(63%)

③ 재원구조 : 보편주의 · 공공부조형을 채택한 국가들은 일반세입을 통해, 고용 연계형은 사용자 부담금, 기여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

\* ①보편주의형 : 모든 가족 대상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대다수 국가)

②고용연계형 : 모든 임금 노동자 대상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③공공부조형 : 일정 소득 기준 미달 가구 대상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

## 2)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초저출산 지속 및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

정부는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 중심으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한편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 운영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력 강화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0년 12월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에서 정책목표를 기존 출산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로 확장하고 ①돌봄 강화, ②고령화 대응, ③교육 · 창업, ④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세부 추진전략을 구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출산 · 양육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5대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친(親)가족 5대 패키지는 ①영아수당,

②첫만남이용권, ③육아휴직, ④공보육 확충, ⑤다자녀 지원으로 구성되며, '22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0-1세 영아수당 신설

가정양육(가정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 0-1세(23개월) 영아기 아동에 대한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 및 양육부담 경감 목적에서 '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시 영아수당(현금) 지원

\*\* (지급금액) ('22) 30 → ('23) 35 → ('24) 40 → ('25) 50만원/월

### ⚙ 첫만남 이용권 신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으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출생 초기 양육 부담경감 목적에서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하되, 유흥·위생·사행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 ⚙ 육아휴직

2022년부터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에 지급금액을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원으로 확대(150 → 200~300만원)하고, 이후 최대 9개월간(~1년 이내)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120 →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상향하여 사업자가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시 3개월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 공보육 확충

정부는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 중이며, 2020년 12월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은 공보육 이용률 목표를 2025년까지 50%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 설정하였다.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직장어린이집”이용 아동 수

$$* \text{공보육 이용률(\%)} = \frac{\text{“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직장어린이집”이용 아동 수}}{\text{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times 100$$

2021년 4월말 기준 공보육 이용률은 35.2%이며, 지속적으로 공보육 이용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단위 : 개소 수, %)

구 분	'18	'19	'20	'21	'22(계획)	'25(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50	+550	+600	+550	+550	+550
공보육 이용률	25.2	28.2	32.0	35.2	40	50

### ⚙️ 다자녀 지원

기준중위 200% 이하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전용 임대주택을 0.5만호 공급한다.

## 3) 보육·돌봄 지원

### ⚙️ 보육료 단가 및 수당

0~2세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 단가를 8%(부모보육료는 3%) 인상하고, 3~5세 누리 보육료 단가를 +2만원(월 26 → 28만원, +2,394억원, 100만명) 인상하여 국공립 대비 낮은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보육료 단가인상 외에도 직접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수당 +2만원(월 24 → 26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원(월 12 → 13만원) 인상(+181억원, 16.5만명)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수당(월 7.5만원, 86억원, 1.9만명) 한시 지급을 1년 연장한다.

## ⚙ 장애아 특수보육

장애아보육료 단가를 6% 인상하고, 어린이집 특수교사·치료사 수당도 인상하여(월 30 → 40만원) 특수보육을 적극 지원 한다.

## ⚙ 아이돌봄 지원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구 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비 고
		정부안	국회 중액	최종	
■ 보육	89,261	83,999	3,201	87,200	
• 기관보육료	33,952	31,508	519	32,027	• 기관보육료 인상을 3% → 8% • 장애아보육료 인상을 3% → 6%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141	16,594	286	16,880	• 담임교사수당 월24 → 26만원 연장보육수당 월12 → 13만원 • 어린이집원장 겸임수당 월7.5만원 • 장애아 특수교사·치료사 수당 월30 → 40만원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39,168	35,897	2,394	38,291	•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6 → 28만원 국공립 월 8 → 10만원
■ 돌봄서비스	2,515	2,564	214	2,778	
• 아이돌봄 지원	2,515	2,564	214	2,778	• 청소년부모 돌봄지원 5%p 인상

## 4) 모자건강관리

### ⚙ 청소년 임신부 의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에 대해 지원되는 임신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2021년 60만원에서 2022년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된다. 임신출산 바우처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22년부터는 모든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만19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의 경우 추가적으로 120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기존의 임신출산 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후 지원되며, 사용기간은 2년 이내이다.

### ⚙️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임산부와 만2세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초기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영아 가정에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건강, 영아발달, 양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5) 일·가정 균형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를 기존 30인 이상 → 전사업장으로 확대(수혜인원 1 → 1.3만명)하고,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 간접노무비 (1.1만명) 및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등 유연근무 확산을 지속 추진한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 적용 사업장에 대해 워라밸 장려금 지원

그 외에 워킹맘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인원을 확대(7,593 → 8,559명, 383 → 417억원)하고 직장어린이집 83개소를 신규설치할 계획이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 휴가 급여(최대 200만원) 지원대상도 기존 1,709명, 86억원 → 4,543명, 22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 0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 조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 (B-A)	%
총지출	558.0	607.7	49.7	8.9
1. 보건 · 복지 · 고용	199.7	217.7	17.9	9.0
2. 교육 (교부금 제외)	71.2 (18.0)	84.2 (19.1)	12.9 (1.1)	18.2 (6.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	65.1	11.8	22.2
3. 문화 · 체육 · 관광	8.5	9.1	0.6	7.3
4. 환경	10.6	11.9	1.3	12.4
5. R&D	27.4	29.8	2.4	8.7
6.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28.6	31.3	2.7	9.3
7. SOC	26.5	28.0	1.5	5.5
8. 농림 · 수산 · 식품	22.7	23.7	1.0	4.5
9. 국방	52.8	54.6	1.8	3.4
10. 외교 · 통일	5.7	6.0	0.3	4.4
11. 공공질서 · 안전	22.3	22.3	0.01	0.1
12. 일반 · 지방행정 (교부세 등 제외)	84.7 (32.9)	98.1 (32.3)	13.4 (△0.6)	15.8 (△1.9)
※ 지방교부세 등	51.8	65.8	14.1	27.1

#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제3장

## 분야별 투자계획

01. 보건·복지·고용 분야
02. 교육 분야
03. 문화·체육·관광 분야
04. R&D 분야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06. SOC 분야
07. 농림·수산·식품 분야
08. 환경 분야
0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2022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01 보건·복지·고용 분야



## 1-1 재정지원 방향

2022년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17.7조원 수준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35.8%로 총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소득·고용안정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투자로 포용국가 실6현을 뒷받침한다. 가족 행복·육아 친화기반 조성 및 건강한 노후 지원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의료지원, 건강보험 등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

###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 보강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대상 기준 및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에 영향을 주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5.02% 인상된다. 특히, 수급가구의 대부분인 1인 가구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에 따라 6.4%로 인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2022년에 5.3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급여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약 11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된다. 그리고 기준임대료는 100% 현실화되어 1급지 기준 4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48만원에서 50.6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21.1% 인상된다.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시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2022년에는 110억원을 지원하여 263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긴급복지 재산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2만명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하는 등 생계 위기가구의 빈곤층 추락을 방지한다.

### ㉠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공적임대주택에 22.9조원을 투자하여 21만호를 신규 공급하고, 품질 제고를 위해 건설형 단가를 5% 인상한다. 또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위해 중형평형 임대주택 공급을 6.2천호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주거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월 20만원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그리고 월세로 독립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대출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저리 임차보증금 대출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장애인, 한부모가족, 위기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100시간에서 월 125시간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선정시 소득공제를 30% 신설하고, 청소년 한부모 1천명 대상 자립지원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유인도 높인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7개 시도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구축한다.

### ㉢ 가족 행복·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및 노인 생활안정 강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7세에서 8세미만으로 확대한다. 월 30만원의 0~1세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이용권 도입, 3+3 부부공동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친가족 5대 패키지에 4.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임신 바우처 인상(60 → 100만원), 고위험 임신부·영아가정 방문 건강 확대 등 임신부의 모든 의료비를 지원한다. 0~2세 민간 어린이집 기관보육료는 8%, 장애아 보육료는 6% 인상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598만명에서 628만명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30만원에서 30.7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일자리도 80만개에서 84.5만개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84.5만개중 7만개에는 사회서비스형에 투자된다. 노인 50만명대상으로 맞춤형돌봄을

지원하고, 디지털 돌봄도 8.4만명에서 12.7만명으로 확대한다. 응급 안전안심서비스도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고독사 방지체계도 구축하여 노인돌봄망을 보다 확충한다.

### 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 강화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선제적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비용 지원, 먹는 치료제 구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고도화 등에 대해 전년대비 +4.6조원 늘어난 11.9조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2.6조원, 먹는 치료제 구입에 3,7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5개소 건립(266억원), 지역(35 → 43개소) 책임의료기관 확대(103억원) 등 의료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 ㉕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9.5 → 10.5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5 → 1.8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착수(110억원)와 함께, 암진진비 지원(413억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219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긴급대응체계 마련,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2,535억원 → 3,063억원)한다.

### ㉖ 보건·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K-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2022~2023년간 약 1조원 규모의 2022년 0.7조원을 투자하고, 2026년까지 2.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글로벌 신약의 해외진출 지원(신규 11억원), 국산 의료기기 광역형 교육훈련센터 2개소 신설(신규 16억원), 화장품 원료 국제규제 대응(15억원) 등 국산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한국형 NIBRT 프로그램(30 → 37억원),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59 → 90억원) 등 보건산업 인력양성 지원과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109억원),

데이터중심병원(80억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확산(30 → 35억원) 등 보건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활용 지원도 확대한다.

[표 1-1]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997,427	2,176,658	9.0
기초생활보장	153,243	167,638	9.4
취약계층지원	45,132	47,884	6.1
사회복지일반	13,710	9,473	△30.9
아동·보육	85,582	91,827	7.3
여성·가족·청소년	12,001	14,289	19.1
노인	188,723	204,592	8.4
주택	335,184	358,263	6.9
공적연금	600,408	629,823	4.9
보훈	58,866	59,308	0.8
건강보험	107,688	119,242	10.7
보건의료	34,232	101,264	195.8
식품의약품안전	6,086	6,619	8.8
고용	258,402	259,383	0.4
노동	92,595	100,736	8.8
고용노동일반	5,574	6,045	8.5

## 1-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④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자활,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탈수급·자립기회를 확대한다.

☞ (2021년) 15조 3,243억원 → (2022년) 16조 7,638억원 (9.4% 증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기준이자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5.02% 인상된다. 특히, 수급가구의 대부분인 1인 가구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에 따라 6.4%로 인상된다.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구 분		'21년	'22년	증가율	비 고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4,876,290	5,121,080	+5.02%	
(1인 가구)		(1,827,831)	(1,944,812)	(+6.40%)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1,462,887	1,536,234	+5.02%	선정기준 = 월 최대급여액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1,950,516	2,048,432	+5.0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2,194,331	2,355,697	+7.35%	기준임대료 4인 (1급지): 48 → 50.6만원/월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2,438,145	2,560,540	+5.02%	고교생 교육 활동지원비: 44.8 → 55.4만원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4인가구 기준 월 146.3만원에서 153.6만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자산·고소득자 제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된 이후 60년간 사용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약 11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의 행위별 수가도 지속 추진한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및 이동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도 지속 실시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된다. 그리고 기준임대료는 100% 현실화되어 1급지 기준 4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48만원에서 50.6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21.1% 인상된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은 5개의 통장을 3개의 통장으로 개편한다.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해 수급자 이해의 어려움이 있었던 자산형성 사업의 매칭비율을 단순화하는 등 재구조화된다. 청년 대상 사업은 통폐합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한다. 특히, 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및 연소득 2,4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여 2022년에는 10.4만명의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 제공 및 자립을 지원한다.

개편 前 통장	개편 後 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자) 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원 이하) ① ~중위50% 만15세이상 39세이하: 본인적립금(10만원 ↑) + 정부지원금(30만원) ② 중위50%~100%: 만19세이상 34세이하: 본인적립금(10만원 ↑) + 정부지원금(10만원)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중위50%) 본인적립금(10만원) + 정부지원금(30만원)	
중위 50~100%: 지원 없음	
희망키움통장 I (생계·의료 수급자) 본인적립금(5/10만원) + 정부지원금(소득비례)	희망저축계좌 I (생계·의료 수급자) 본인적립금(10만원 ↑) + 정부지원금(30만원)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본인적립금(5/10/20만원) + 정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희망키움통장 II(주거·교육/중위50%) 본인적립금(10만원) + 정부지원금(10만원)	희망저축계좌 II(주거·교육/중위50%) 본인적립금(10만원 ↑) + 정부지원금(10만원)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153,243	167,638	9.4	
생계급여	46,079	52,648	14.3	4인가구 최대급여액 5.02%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76,805	81,232	5.8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의료보장성 강화 등
주거급여	19,879	21,819	9.8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상향 45 → 46%, 기준임대료 100% 현실화
교육급여	1,030	1,222	18.6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평균 21.1% 인상
자활사업	6,200	6,964	12.3	자활근로 대상 확대(5.8 → 6.6만명), 급여단가 3% 인상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913	1,083	18.6	통장 재구조화(5 → 3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설

## 취약계층지원 부문

돌봄, 소득·고용, 일상 편의 등 장애인의 생활 전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를 지원한다.

☞ (2021년) 4조 5,132억원 → (2022년) 4조 7,884억원 (6.1% 증가)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에 필수적인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추가 확대(2.5 → 2.8만명)하는 등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2021년 99천명에서 2022년 107천명으로 8천명 확대하고, 활동지원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14,020원에서 14,805원으로 5.6% 인상한다. 아울러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 기피 해소를 위한

가산급여의 단가, 대상, 시간을 확대(1.5 → 2천원, 3 → 4천명, 128.5 → 140시간)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낮 시간 활동수요가 높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9천명에서 1만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월 제공시간을 확대(월 100 → 125시간)한다

[표 1-3] 취약계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45,132	47,884	6.1	
장애인연금	8,291	8,326	0.4	37.9만명에 대해 월 30.75만원 지급
장애인일자리 지원	1,596	1,853	16.1	일자리 24.9 → 27.4천개
장애인활동지원	15,070	17,405	15.5	대상 9.9 → 10.7만명 단가 14,020 → 14,805원
발달장애인지원	1,524	2,080	36.5	〈주간활동〉 대상 9천명 → 10천명 단가 4,020 → 14,805원 시간 월 100 → 125시간

#### ◆ 사회복지일반 부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등으로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2021년) 1조 3,170억원 → (2022년) 9,473억원 (△30.9% 감소)

노인, 장애인 등에게 시설·병원이 아닌 재가·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거, 보건의료, 돌봄,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제공하여 수요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16개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14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모든 광역 지자체로 확대 운영한다.

지역의 부족한 복지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표 1-4] 사회복지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13,710	9,473	△30.9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182	159	△12.8	16개 기초지자체 대상 선도사업 실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47	246	67.2	중앙 사회서비스원 1개소 시도 사회서비스원 17개소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459	1,551	6.3	아동보호체계 구축 확대(109 → 173억원)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254	2,100	△35.4	지역사회서비스 지원(29만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설(1.5만명) 등

#### ◆ 아동·보육 부문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신설, 보육료 단가 및 수당 인상,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아동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학대피해아동, 입양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2020년) 8조 5,582억원 → (2021년) 9조 1,827억원 (7.3% 증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월 30만원)' 및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0-2세 부모보육료(3%),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관보육료(8%) 및 장애아보육료(6%)를 인상하고, 담임수당(+2만원) 및 연장보육교사 수당(+1만원) 등 보육교사의 직접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및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하던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핵심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재정지원 투자 규모를 1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 한다. 2021년 8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 자립수당(월30만원)의 지급 기간을 기존 3년 → 5년 이내로 확대하고, 보호종료 아동이 어디서든 개인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구축하고 120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입양 전 입양대상 아동 위탁 보육 가정에 국고로 아동보호비(월 100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가정 위탁 보호 활성화를 위한 전문아동 위탁보호비(월 100만원)도 신설된다. 그 외에도 2022년부터 아동을 입양한 모든 가정에 지급하는 '입양축하금(200만원)'을 신설하고, 지난 10여 년간 동결되었던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표 1-5] 아동·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85,582	91,827	7.3	
아동수당	22,195	22,195	△2.8	• 7세 →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영아수당	—	3731	신규	
첫만남이용권	—	3731	신규	
영유아보육료지원	33,952	32,028	△5.	• 부모보육료 3% 인상 • 기관보육료 8% 인상 • 장애아보육료 6% 인상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141	16,880	4.6	• 장애아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인상(30 → 40만원) • 담임교사·연장보육 교사 수당 인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287	381	32.7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 '21년 81 → '22년 95개소 • 가족방문회복 프로그램 신규지원(1,000가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267	394	47.6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확대 * '21년 105 → '22년 141개소 • 그룹홈 개소수 확대 * '21년 505 → '22년 517개소
가정위탁 지원·운영	9	80	750.5	• 위기아동(6세 미만) 가정보호 사업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 전문아동보호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22	275	23.5	• 지급기간 3 → 5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구축	—	77	신규	•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구축 • 자립지원전담요원 120명 배치

## ㉔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지원, 보편적·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활동·보호 기반을 확대한다.

☞ (2021년) 1조 2,001억원 → (2022년) 1조 4,289억원 (19.1% 증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으로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장기 과정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지속유지를 위한 경력단절예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한 국립여성사 박물관 건립을 본격화한다. 한편,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를 3개소 추가(7 → 10개소) 확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추진을 내실화하는 한편,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3.1월)에 앞서 관련 정책 연구와 중앙 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질높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를 전년 대비 57% 인상한다.

1인가구·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근로를 통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적용하고,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도 月 10만원 인상(月10 → 20만원)하여 지급한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그 동안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부모에 대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고, 아이돌봄 통합지원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를 시작한다. 지역 단위를 기반으로 한 가족교육·상담·돌봄 등 통합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12개소, 공동육아나눔터 4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168개 가족센터에서 취학전 자녀에게는 기초학습을 제공하고, 학령기 자녀에게는 학업·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 한다.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을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확대한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만 11~18세 → 만 9~24세)을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강화한다.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표 1-6]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12,001	14,289	19.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67	4,213	37.4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월 10 → 20만원), 소득공제 30% 적용(20.4 → 22.1만명)
아이돌봄지원	2,515	2,778	10.4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5%p 정부지원을 인상(85 → 90%)
가족역량강화	59	92	55.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신규 20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72	126	75.7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만11~18세 → 만9~24세)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637	670	5.1	학교밖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 그램 확대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연령 확대 (만9~18세 → 만9~24세)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702	737	5.1	새일여성인턴 유지(8천여명)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및 경력단절예방지원 시범추진
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	123	185	50.6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신규 83억원)

## ㉔ 노인 부문

노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력있는 노후를 지원하고, 돌봄·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고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 (2021년) 18조 8,723억원 → (2022년) 20조 4,592억원 (8.4% 증가)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1년 598만명에서 2022년 628만명으로 늘어나며,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던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75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년기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확충 및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2021년 80만개 일자리를 2022년에는 4.5만개 늘려 84.5만개로 확대하여, 국정과제상 목표 80만개(∼'22)를 상회하여 달성한다. 아울러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및 지속 공급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확대(4.5 → 7만명)하여 노인일자리 전반의 질적 제고 및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돌봄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대상자 50만명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체·정신적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지속 지원한다. 이러한 조기 돌봄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장기요양 진입이 억제되어, 노인 의료비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256개 시군구 보건소별로 구축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등록, 조기검진, 치매쉼터, 가족지원, 사례관리 등 치매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2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진단·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치매 관련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원격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치매검진, 예방과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양질의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신축비를 계속 지원하고 민간 일반시설도 치매전담형 전환도 계속 지원한다.

[표 1-7] 노인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부문 계	188,723	204,592	8.4	
기초연금	149,635	161,140	7.7	598 → 628만명 월 30.75만원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152	14,422	9.7	74 → 80만개(+6만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4,183	4,366	4.4	대상자 50만명
치매관리 체계구축	2,047	2,077	30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노인요양시설 확충	669	620	△7.4	공립시설 15개소 추가 확충

## ㉠ 주택 부문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 (2021년) 33조 5,184억원 → (2022년) 35조 8263억원 (6.9% 증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21만호 공급하여 2018~2022년 5년간 총 100만호 수준 공급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21년 19.7조원에서 2022년 22.9조원(전년대비 약 3.2조원 확대, +16.3%)으로 대폭 확대한다. 동시에, 임대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건설형 단가 5% 인상을 추진하고 '질 좋은 평생주택' 6.2천호를 공급하여 3~4인 가구가 최장 30년동안 중형 임대주택(60~85㎡)에 거주할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무주택 서민의 자가 취득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450호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시설 지원, 주거재생특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963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주거여건이 악화된 청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월 20만원(12개월)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하여 82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월 20만원의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저리(1.2%) 임차보증금 대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등 주택임차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기금 용자 예산 9.5조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저리의 정책자금이 공급되도록 이차보전 예산도 0.4조원 확보하였다.

수혜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에게는 도심내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 5.4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등 임대주택 총 6.2만호를 공급하고, 대출한도 상향,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용자상품을 계속 지원한다. 고령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은 맞춤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총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1-3]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335,184	358,263	6.9	
주택구입·전세자금 용자	99,000	95,300	△3.7	
다가구매입임대 출·용자	64,089	91,560	42.9	3.7 → 5.3만호
전세임대 용자	43,663	45,328	3.8	4.1 → 4.15만호
통합공공임대 출·용자	1,813	18,231	905.3	0.4 → 6.76만호

## ㉔ 공적연금 부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 및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한다.

☞ (2021년) 60조 408억원 → (2022년) 62조 9,823억원 (4.9% 증가)

공적연금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국민, 공무원,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에 대한 급여를 지속 지급한다.

특히, 4대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노령·퇴직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605.3→632.5만명으로 27만명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급여지급액도 1.5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여타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수도 각각 56.2 → 60.7만명, 9.8 → 10.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1-9] 공적연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부문 계	600,408	629,823	4.9	
국민연금	300,025	314,649	4.9	605.3 → 632.5만명
공무원연금	211,044	222,559	5.5	56.2 → 60.7만명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53,908	56,046	4.0	9.8 → 10.6만명
군인연금	35,430	36,569	3.2	10.0 → 10.0만명

## ㉔ 보훈 부문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강화한다.

☞ (2021년) 5조 8,866억원 → (2022년) 5조 9,308억원 (0.7% 증가)

\* 완료소요 1,278억원 제외시 ('21년) 5조 7,588억원 → ('22년) 5조 9,308억원 (3.0% 증가)

'22년 보훈부문 예산은 표면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5조 9,308억원 수준 규모이나 임정기념관 건립사업,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등 '21년 완료소요 1,278억원을 미편성하였음을 고려시 실제 증가율은 3.0% 수준으로 '21년(증가율 2.7%) 대비 확대 편성한 규모이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 5%를 인상한다.

고령 국가유공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640개소까지 확대하며, '22년 4분기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시 약제비를 지원한다.

'22년 9월부터 상이 국가유공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시내버스,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중기복무자는 25 → 50만원으로, 장기복무자는 50 → 7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표 1-10] 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58,866	59,308	0.7	
보상금	30,593	31,975	4.5	단가 5% 인상
위탁병원진료	2,350	2,526	7.5	위탁병원확대 88억원 약제비 69억원
교통시설 이용지원	104	175	68.3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68억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33	62	86.2	중기복무자 월 25 → 50만원 장기복무자 월 50 → 70만원

## ⑧ 건강보험 · 보건 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공공의료 확충 및 미래성장 동력인 보건산업 R&D 투자를 강화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 (2021년) 14조 8,007억원 → (2022년) 22조 7,126억원 (53.5% 증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9.5 → 10.5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1.5 → 1.8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착수(110억원)와 함께, 암진진비 지원(413억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219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 자가격리자 등 심리상담 강화 ·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인력 300명을 신규 확충(3,260명 → 3,560명, +917억원)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 지역을 12개 시 · 도에서 17개 시 · 도로 확대(+87억원)하였다. 또한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상담인력도 23명을 신규 확충(57명 → 80명, +20억원)하고 자원봉사체계 운영도 연장하여 자살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하였다.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국을 17개 권역과 70개의 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며,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공공의료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분만실 설치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중증 소아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건립을 2022년에도 1개소 추가한다.

K-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2022~2023년간 약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국산백신 선구매를 추진하는 등 2022년 0.7조원을 투자하고, 2026년까지 2.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글로벌 신약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규제컨설팅 등 지원(신규 11억원),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광역형 교육훈련센터 2개소 신설(신규 16억원), 화장품 원료 국제규제 대응을 위한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15억원) 등 국산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한국형 NIBRT 프로그램(30억원 → 37억원),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59억원 → 90억원), 제약바이오 특성화대학원(15억원),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양성(15억원) 등을 통해 보건산업분야 핵심인재를 적극 양성한다.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109억원), 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데이터중심병원 지원(80억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확산 지원(30억원 → 35억원) 등 보건산업 고도화를 위한 ICT 등 신기술 활용 지원도 확대한다.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 및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모든 어린이 급식소(전국 4만개소)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4개소)’의 현장 지도·지원활동을 확대(562억원 → 584억원)하고, 노인·장애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개소 추가(전국 7개소 → 18개소) 설치한다. 또한, 코로나19 등 국산 백신의 개발·생산 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종합상담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지원을 위한 실습형 교육시설과 백신

제조용 세포주 공급을 위한 국가 백신 셀뱅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백신허브 기반 구축을 선도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 등에 포함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한다.

[표 1-11]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합 계	148,007	227,126	53.5	
건강보험	107,688	119,242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가입자지원 (일반 : 75,834 → 86,843억원) (기금 : 19,167 → 18,149억원)</li> </ul>
보건의료	34,232	101,264	1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 증진사업 (919 → 1,086억원)</li> <li>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368 → 450억원)</li> <li>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58 → 141억원)</li> <li>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433 → 1,658억원)</li> <li>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73 → 169억원)</li> <li>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20 → 18억원)</li> </ul>
식품의약품안전	6,086	6,619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562 → 584억원)</li> <li>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121 → 281억원)</li> </ul>

## 〈참고1〉 일자리 분야

### 참고 1-1 ▶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31.1조원으로 2021년 30.1조원 대비 3.3% 증가한 수준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확충과 신기술 직업훈련,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확대한다.

☞ (2021년) 30조 1,436억원 → (2022년) 31조 1,303억원 (3.3% 증가)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신기술 직업훈련,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 맞춤형 고용장려금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 재정지출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3조원(10.7%)으로, 91만명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5조원(8.1%),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2.0조원(6.4%) 규모이다.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에는 7.8조원(25.0%), 창업지원은 2.8조원(9.0%)을 투자한다. 구직자가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는 12.7조원(40.8%)이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2년에도 일자리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평가에 기초한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통합 공고하여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예산 집행상황도 매월 관리할 계획이다.

[표 참고1-1]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301,436	311,303	3.3
직접일자리	30,894	33,200	7.5
직업훈련	23,340	25,303	8.4
고용서비스	17,000	20,044	17.9
고용장려금	80,935	77,731	△4.0
창업지원	24,176	28,091	16.2
실업소득 유지·지원	125,090	126,933	1.5

## 참고 1-2 주요 지원내용

##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시행 등 중층적 고용안 전망 강화

202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20.1만명), 임시·일용직(42.9만명), 가사근로자(0.3만명) 및 그 사업주가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특고 종사자(8만명) 대상으로 구직급여를 신규 지원(0.2조원)하고, 예술인(0.4 → 0.5만명) 대상 구직급여를 확대(+225억원)해 실업시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소득 및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인원을 확대(40 → 50만명)한다. 노인·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공공일자리도 105 → 106만명으로 확대한다.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

신기술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기업참여 디지털 핵심인재양성(1.7 → 2.9만명), 중소기업 현장맞춤훈련(S-OJT) 등 기업주도 훈련과정을 확대(0.2 → 0.5조원)한다. 아울러,

K-Digital Credit(4 → 5.5만명),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 지원인원 확대(28 → 100만명) 등 디지털 기초교육을 확대 제공하고, AI+X·그린테크 등 폴리텍 학과개편, 직업계고 심화교육 확대(8 → 40개), K-Digital Platform 추가(5 → 20개소) 등을 통해 인력양성체계를 강화한다.

노동전환 분야에서는 저탄소·디지털화로 인한 사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무전환교육과 전직지원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재직자의 전직·직무 전환 교육을 위해 유급휴가훈련(1만명), 산업구조대응 특화훈련(2.5만명) 등 신규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0.5만명)과 노동전환지원금(0.2만명)을 신설하여 전직지원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여 민간的高용시장을 보완한다.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 시 年 960만원의 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고령자의 경우, 과거보다 고령자 초과 채용 시 분기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0.6만명)한다. 장애인의 경우,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장애인 신규 채용 시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신설(0.3만명)한다.

## ㉔ 일자리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을 감안하여, 일선 산업현장의 산재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산재예방의 경우,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 대상 산재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규모를 확대(1 → 1.3만개소)하고, 산재예방컨설팅 규모도 대폭 확대(361 → 450억원) 한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8개소)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추진한다.

## 02 교육분야



### 2-1 ▶ 재정지원 방향

2022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4.2조원으로, 2021년도 71.2조원 보다 18.2%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5.1조원, 전년 대비 11.9조원 증가)이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6.2%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 교육분야는 유치원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집중 지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대한 특별학습바우처 지원과 함께, 8구간 이하 대학생에 대한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신기술분야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평생교육 기회 제고를 위해 바우처 자원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온국민 평생배움터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④ 유·초중고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노력 강화

코로나19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영유아 누리과정 단가를 지속 인상(2021년 월 26만원 → 2022년 28만원, 38,290억원)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대상 초중고생에게 학습교재 및 EBS 콘텐츠 구입비 목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특별지원한다.(2022년 101억원, 신규)

맞벌이 가정 증가에 대응하여 초등돌봄교실 확충(연간 700실)을 2022년까지 지속하여 초등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021년 210억원 → 2022년 210억원)

내국세수 증가에 따라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3.2조원에서 2022년 65.1조원으로 대폭 증가 하였으며, 증가한 교부금을 활용하여 보충학습·멘토링 등 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 ㉠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의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인재양성 역량 강화 지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각부처의 전문성과 대학내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 및 일반재정지원을 결합하는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 신설한다.(7개 부처 14개 분야, 420억원) 또한 대학 자율적인 인재양성 역량강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적정규모화 유도를 위해 대학(전문)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2021년 10,611억원 → 2022년 11,550억원)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고도화와 후발대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LINC 3.0 사업을 재설계 하고 대학별 산학협력 수준에 따라 맞춤형 역량강화를 지원한다.(4,070억원, 일반대 75교 / 전문대 59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기업에 취업,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2021년 4개 플랫폼, 1,710억원 → 2022년 6개 플랫폼, 2,440억원)

또한,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특화분야 인재양성을 추진한다(30개교, 405억원)

#### ㉠ 전국민 평생교육 기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소득계층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대폭확대(15,000명 → 30,000명)한다.

전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언제든지 양질의 대학수준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시스템(K-MOOC) 강좌수를 대폭 확대하고, 매치업 강좌, 우수 해외 MOOC 강좌, 국내·외 석학강좌 제작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확충한다.

또한 학습자가 맞춤형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공 받고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온국민 평생배움터 시스템 구축 사업(35억원)을 추진한다.

### ㉠ 한계대학 폐교·청산 절차 지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미충원 사태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및 한계사학 폐교절차 지원을 위해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34억원)을 지속 추진하고,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114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712,076	841,571	18.2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5	707,301	2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650,595	22.2
고등교육	113,270	120,894	6.7
평생·직업교육	11,052	11,983	8.4
교육일반	1,380	1,394	1.0

## 2-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노후 학교시설의 '그린스마트 스쿨 전환'을 본격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단가 지속 인상과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확충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현행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예산 운용방안을 검토한다.

☞ (2021년) 58조 6,375억원 → (2022년) 70조 7,301억원 (20.6% 증가)



노후 학교 건물을 디지털·그린 기반의 미래 학교로 재구조화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2021년 943억원 → 2022년 5,194억원)

학부모의 유아학비·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3년 연속으로 +2만원 인상(26 → 28만원)하여 총 3조 8,290억원을 편성하였다. 저소득 초중고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 및 학습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10만원 상당의 교육목적 바우처를 우선 '22년에 한해 신규 지급한다. ('22년 101억원)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수학년 대상 무상교육 소요 9,094억원을 지원하고, 국정과제 마무리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충(연간 700실, '18~'22년 총 3,500실 구축)도 지속 지원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호조에 따라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65조 595억원이 교육청에 교부되며, 증액된 교부금을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지원 및 기초학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검토한다.

[표 2-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586,375	707,301	2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650,595	22,2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9,168	38,290	△2,2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943	5,194	451,1
고등학교 무상교육	9,431	9,094	△3,6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210	210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	101	순증

## ㉔ 고등교육 부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해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재학중 이자 면제를 지원한다.

미래사회 대비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LINC 3.0 사업을 재설계하여 대학의 산학연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도 확대한다.

☞ (2021년) 11조 3,270억원 → (2022년) 12조 894억원 (6.7% 증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및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지원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한다. (2021년 39,946억원 → 2022년 46,567억원)

또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재학중 대출이자 면제를 신규로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점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기(2022년~2024년)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각부처의 전문성과 대학내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 및 일반재정지원을 결합하는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도 대학혁신사업 내 Ⅱ유형으로 신설한다.

대학간 공유·협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사업 내실화를 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고, 대학의 산학연 협력 역량 고도화를 위해 LINC 3.0 사업을 재설계 하여 추진한다.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신규 플랫폼을 확대 지원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13,270	120,894	6.7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39,946	46,567	16.6
한국장학재단 출연	1,915	2,014	5.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1,710	2,440	42.7
대학혁신지원	6,951	7,950	14.4
산학협력 고도화지원	4,306	4,359	1.2

## 평생·직업교육 부문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지원을 통해 계층별 성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강좌 수를 확대하여 평생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학령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기초지자체-전문대학 연계 고등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사회에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인 혁신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직업계고생이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금 등 고졸취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한다.

☞ (2021년) 1조 1,052억원 → (2022년) 1조 1,983억원 (8.4%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확대(15,000명 → 30,000명)하여 성인의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시스템(K-MOOC)에 강좌수를 대폭 확대하고, 매치업 강좌, 우수 해외 MOOC 강좌, 국내·외 석학강좌 제작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언제든지 양질의 대학수준의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학습자가 맞춤형 온라인 평생교육 훈련 콘텐츠를 제공받고 학습훈련 이력을 One-Stop으로 관리하는 온국민 평생배움터 시스템 구축 사업(35억원)을 추진한다.

전문대학이 기술생명 주기의 급격한 단축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사업내용 및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확대(97개교 → 104개교)한다.

지역소멸 위기 및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 됨에 따라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토대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주민 수요 맞춤형-오프라인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특화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규교육과정 및 성인학습자 교육을 추진한다(30개교, 405억원)

아울러, 직업계고생이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연계 장려금을 지속 지원(1인당 5백만원, 1,555억원)하고, 우수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및 지도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 취업을 원하는 직업계고생과 해당 분야 기업 중 현장실습 활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채용연계형 직무 교육과정을 신규 운영한다. (1,050명, 28억원)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1,052	11,983	8.4
평생교육 바우처지원	74	141	90.6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259	283	9.4
전문대학 혁신지원	3,660	4,020	9.8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육성	945	1,045	10.6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1,669	1,555	△6.8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	28	순증

## 03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 3-1 재정지원 방향

2022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9.1조원으로 2021년 8.5조원보다 7.3% 증가하였다.

한국문화의 경쟁력 · 확장성 ·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세계일류 문화콘텐츠 제작, 신한류 기반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문화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매력적인 관광거점 조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반국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스포츠 저변 확대를 지원한다.

#### ㉮ 세계일류 콘텐츠 양산을 위한 정책금융 및 콘텐츠제작 지원

콘텐츠산업은 매출, 수출, 고용 측면에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시장 점유율이 세계 7위에 달하는 등 향후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해당한다.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는 투자, 제작, 인력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콘텐츠산업의 높은 위험부담, 영세성으로 인해 여전히 투자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모험펀드(1,500 → 2,000억원 조성) 및 완성보증 공급(1,800 → 2,000억원 공급)을 확대하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 스포츠산업의 회복을 위해 관광 · 스포츠기업 대상의 융자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산업은 기술발전과 함께 차세대콘텐츠 시장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 콘텐츠 및 OTT 콘텐츠 제작 등을 신규 지원한다.

#### ㉮ 신 한류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 소비재 동반성장 지원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전세계 한류 동호인 수가 1억명을 돌파하였으며, 국제사회도 한국 문화의 위상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한류콘텐츠 수출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화장품·패션·식품 등 연관산업의 소비재 수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신규 지원한다.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콘텐츠와 함께 연관산업 소비재를 체험·구입 할 수 있는 홍보관 1개소를 새롭게 구축(40억원)하고, 한류 콘텐츠를 통한 간접광고를 지원하는 한류마케팅 사업(45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개별 부처에서 각각 추진해오던 해외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와 연계하여 우리문화를 집중 소개하는 ‘코리아 시즌’도 신규 지원(18억원)한다. 2022년에는 멕시코의 세르반티노 축제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축제기간 동안 우리의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개최한다.

예술한류의 핵심분야인 K-뮤지컬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공연 및 뮤지컬 프로듀서 발굴도 신규로 지원(20억원)한다. 미술시장 활성화 및 미술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아트페어 육성 및 해외 유통채널 참가 지원도 확대한다.

### ㉔ 문화예술 창·제작 산업화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대

코로나19로 창작여건이 악화된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컬처랩’조성(160억원)을 지원한다. 아트컬처랩을 통해 예술가들은 창·제작, 교육·교류, 시연·유통, 창업·창직 등 예술의 창작부터 산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술인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창작준비금 지원대상을 1.5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가 심화된 점을 고려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청소년 북토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화활동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지원대상을 194만명에서 299만명으로 50% 이상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예술단체 지방공연을 확대하여 지방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 등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취약지역의 활력촉진을 위해 지자체의 문화프로그램도 신규 지원(46억원)한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예술단체의 협력에 기반한 공연의 창제작 및 유통도 신규 지원(87억원)한다.

### ㉔ 미래 관광기반 구축 및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지원

관광분야 용자 확대 등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회복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관광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거점도시·스마트관광도시 등 글로벌 관광지를 집중 육성한다. 관광트렌드변화에 대응하여 체감형 지역관광 활성화 및 볼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관광거점 육성 등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

### ㉕ 스포츠 참여 기회 보장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클럽 운영, 승강제 리그 확대 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산업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용자 확대, 일자리 지원, 연구개발(R&D)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 ㉖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 활용·향유 확대

문화재보존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궁능원·왕릉 등 대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표 3-1]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84,816	90,975	7.3
문화예술	37,226	41,423	11.3
관광	14,998	14,496	△3.3
체육	17,594	19,303	9.7
문화재	11,416	12,014	5.2
문화 및 관광 일반	3,582	3,739	4.4

### 3-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문화예술 부문

예술분야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예술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및 OTT 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 시장 선도를 위한 신규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신한류 확산을 활용하여 소비재 수출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다부처 협업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 (2021년) 3조 7,226억원 → (2022년) 4조 1,423억원 (11.3% 증가)

지속가능한 자생적 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해 예술특화 윈스톱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컬처랩’을 조성(신규, 160억원)하여 문화뉴딜의 허브로서 예술인들에게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창작 중단 위기에 있는 예술인에게 창작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을 1.5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422 → 603억원)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거점인 장애예술공연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함께누리 지원’사업도 확대(207 → 226억원)한다.

신(新)한류를 활용한 콘텐츠 및 연관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 한국문화축제는 기간 및 규모를 확대(55 → 92억원)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류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한식·브랜드K·뷰티 관련 소비재를 홍보할 수 있는 한류마케팅 사업을 신규 추진(45억원)한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 한류 콘텐츠 및 연관산업 제품을 상시 홍보·판매할 수 있는 해외홍보관을 1개소 구축(45억원)한다.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도 지속 확대(234 → 270개소)하여 신한류 지속과 국가위상 제고를 지원한다. 공연예술의 핵심장르인 뮤지컬 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를 위한 공연준비, 뮤지컬 프로듀서 양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20억원)한다.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최근 새로운 성장 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Metaverse)’시장과 관련,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신규, 168억원)해 신시장 진출과 도전에 속도를 높인다. 동시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 확산, 한국어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확대도 새롭게 추진한다. 영상콘텐츠산업의 핵심 신시장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성장을 위해 OTT 특화콘텐츠 제작(116억원)과 기획개발(신규, 20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인기 콘텐츠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신규, 60억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실감형 콘텐츠 시장 확대를 돕는다.

콘텐츠 제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를 확대(1,148 → 1,737억원)한다. 특히 드라마펀드를 신규로 조성(조성규모 400억원)하여 OTT에 특화된 콘텐츠 제작의 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 제작사의 역량강화를 유도한다. 위험부담이 큰 콘텐츠 제작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완성보증 공급규모도 1,8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온국민의 보편적 문화향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문화향유기반 조성 및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한다. 지역격차 해소 등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및 유통 지원을 신규 추진(87억원)한다. 전국 국공립 및 민간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협업을 통해 우수한 공연을 제작하여 지방에서 공연함으로써 중앙-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및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을 지원한다.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마중물 사업인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을 신규 지원(46억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 확대(184 → 259억원)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지역공연을 확대(16 → 73억원) 지역의 문화향유기반을 확대한다.

소득에 따른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수혜인원을 확대(177 → 263만명)하여 기초·차상위계층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 체육 가상현실(VR) 체험공간 조성(신규, 10억원) 등으로 스포츠 향유격차도 줄여 갈 예정이다.

콘텐츠 강국의 위상에 맞게 저작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1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저작권 보호 등 저작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13 → 15개소)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고도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ONE-STOP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표 3-2] 문화예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37,226	41,423	11.3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321	489	52.2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83	337	19.0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1,148	1,388	20.9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586	780	33.2
예술의 산업화 추진	146	345	135.7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56	314	22.6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892	981	10.0
문화도시 조성	184	274	48.9

## 8 관광 부문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안전한 국내관광 활성화 및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한다. 스마트 관광 기반 조성,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 지원 등 관광산업 혁신역량 강화도 집중 추진한다.

☞ (2021년) 1조 4,998억원 → (2022년) 1조 4,496억원 (△3.3%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관광기금의 용자사업은 올해 대비 550억원 증액 편성하였다(5,940 → 6,490억원). 특히, 전체 용자중 공공보증기관 출연을 통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특별용자 규모를 올해보다 두배 확대한 1,000억원으로 증액하였다(500 → 1,000억원).

관광업계의 일자리 및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관광기업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현재 4개소(부산, 인천, 경남, 대전·세종)에서 '22년에는 10개소로 6개소를 추가 확대한다(48 → 126억원). 또한 여행업, 마이스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걸맞게 혁신 촉진 및 신사업 개발 등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종사자 디지털교육을 확대하고 마이스 전문인력 고용(45억원, 400명)을 지원한다.

관광벤처기업의 창업과 관광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기업의 창업 및 시장안착을 위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등 관광벤처기업 발굴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97 → 118억원). 관광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또한 확대 편성하였다(166 → 177억원). 관광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도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한다(450억원)

안전한 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관광 빅데이터 고도화 사업(102 → 128억원)을 통한 '여행예보'서비스 및 스마트관광도시 조성(302 → 490억원) 확대 등 ICT-관광 융복합을 통해 안전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세계 유일의 DMZ평화관광 사업은 총 524km의 동서 횡단노선을 조성 하고 완주 인증제 도입, 폐군사시설·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10개 거점센터 조성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142 → 169억원).

지역민과 함께 현지인처럼 체류하며 색다른 삶의 방식을 체험하는 '살아보기형' 생활관광을 확대(2개 → 12개 지원)한다(5 → 16억원). 지역의 유희시설(폐교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을 확대 지원한다(20 → 80억원).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50선 선정,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등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신규편성하였다(2억원). 또한, 야간관광 100선 선정,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5개소) '야행주간'운영 등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14억원).

[표 3-3] 관광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4,998	14,998	11.2
관광산업 융자지원	5,940	6,490	9.3
국민여가캠핑장조성	40	47	16.8
전통문화체험지원	326	347	6.5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42	169	19.1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102	120	17.7
스마트관광 활성화	302	490	62.3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745	764	2.5
MICE산업육성지원	303	390	21.2

## ④ 체육 부문

코로나 19로 위축된 생활체육 및 스포츠산업 분야의 활력을 제고하고,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스포츠의 위상강화를 도모한다.

☞ (2021년) 1조 7,594억원 → (2022년) 1조 9,303억원 (9.7% 증가)

생활체육 분야는 학습·일상생활과의 병행을 통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 수행에 특화된 전문클럽을 지원(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신규, 106억원)한다. 그리고, 야구·탁구·당구 종목 승강제리그(디비전)를 '20년 시군구, '21년 시도에 이어 '22년 전국리그 까지 확대 운영(77 → 94억원)하고, 3개 신규 종목에 대해 승강제 리그를 도입(신규, 63억원) 하는 등 승강제 리그를 확대(128 → 207억원)한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스포츠체험기회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단가 월 8 → 8.5만, 지원 개월수 8 → 10개월, 대상인원 연 72천명 → 86천명)하고,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유청소년 종목별 I리그’를 확대(23 → 107억)하였으며, 국내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강습과 캠프활동을 지원하는 ‘또바기 체육돌봄’사업을 지속 추진(10억원)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는 스포츠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구축(40억원), 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신규, 68억원), 인천선수촌내 전천후 육상트랙 설치(신규, 30억원), 국가대표 훈련수당 증액(6만5천 → 7만) 등 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선수육성 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또한 체육분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의 확대 지원(53 → 62억원)을 통해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추가(3 → 5개소)하여 각 지역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조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스포츠 산업분야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기업·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용자 규모를 대폭 확대(1,062 → 1,843억원)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포츠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212 → 285억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심각한 고용 위기를 겪는 실내체육시설에 444억원 규모로 4,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산업계가 비대면화에 대응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체험 및 관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177 → 207억원)하였으며, 스포츠용품제조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테크프로젝트’도 50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학교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개방을 지원(10개소, 2.5억원)하고,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스포츠체험관’조성(신규, 2개소) 및 체험 콘텐츠 보급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인다.(275억원) 이와 더불어,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275억원),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349억원)을 통하여 한국 장애인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서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본격적인 대회준비와 성공개최를

위하여 75억원을 지원하고,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을 초청하여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출전 선수로 육성한다.(신규, 7.5억원) 그 외에도 ‘2022년 제26차 ANOC 총회’ 개최(8억원) 등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또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핑방지활동 사업 확대 지원(91 → 93억원) 및 개도국스포츠 발전지원 사업(ODA)을 확대(72 → 74억원)한다.

[표 3-4] 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7,594	19,303	9.7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1,119	1,329	18.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32	519	56.1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694	2,042	△24.2
안전한 스포츠활동지원	230	604	162.3
우수선수양성지원	1,106	1,130	2.2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53	62	16.4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1,192	2,083	74.7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604	666	10.2
국제체육교류지원	155	184	18.8
도핑방지활동 지원	91	93	1.9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182	185	1.6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ODA)	72	74	3.5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269	275	2.3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339	349	3.1

## ㉔ 문화재 부문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실현한다. 유·무형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를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채로운 문화유산콘텐츠를 제공한다.

☞ (2021년) 11,416억원 → (2022년) 12,014억원 (5.2%증가)

선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 디지털전환을 위하여 ‘문화재 수리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4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2021년도에 이어 ‘문화재 3차원 원형기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145억원)’, ‘문화재 수리이력 DB 구축(50억원)’사업을 각각 편성하였다

문화재 상시 보호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3,840억원 → 4,040억원) 및 소규모 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사업(202억원 → 2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사업’에 3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문화유산산업 분야의 건전한 성장 및 일자리 기회제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문화재 관련 전공자의 실무경험을 확대를 위한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에 2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통기술·재료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계획 연구와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 등 문화유산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강화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개관을 위한 예산을 증액(6억원 → 23억원)하였고, ‘한국의 갯벌’4개소가 세계자연유산에 신규등재 됨에 따라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증진 및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자원화 기반조성을 강화하였다. 방한 외국인 등에게 우리나라 주요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내 홍보센터 운영 사업에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천공항 전통 미디어 콘텐츠월 설치사업(23 → 34억원)을 편성하였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45 → 72억원)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실감형미디어 제작도 확대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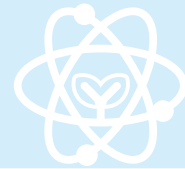
[표 3-5] 문화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1,416	12,014	5.2
문화재 보수정비	3,970	4,040	1.8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427	470	10.0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245	253	3.5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조사지원	202	239	18.4
매장문화재보호 및 관리지원	66	108	63.5
문화재 돌봄사업	162	193	19.0
문화재 활용 진흥	512	515	0.3



## 04 R&D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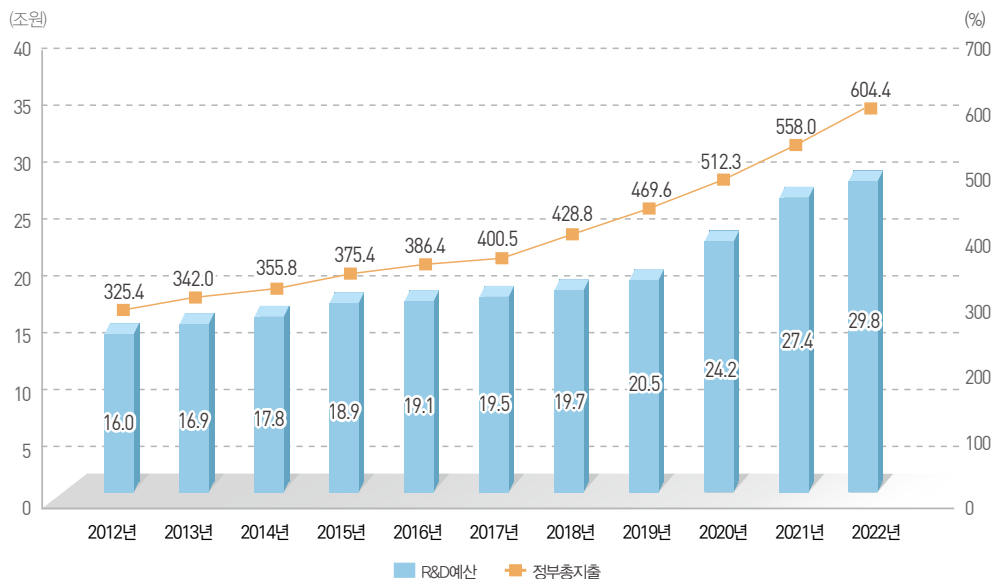


### 4-1 재정지원 방향

2022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1년 대비 2.4조원 증가한 29조 7,770억원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8.7%이며 3년 연속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R&D 분야의 예산 편성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㉔ 3년 연속 정부 총지출 증가율 상회를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그래프 4-1] 정부 R&D 투자 추이(2012~2022년)



한국판 뉴딜 2.0 기반 R&D 투자 강화 및 미래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도 R&D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29,8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지난 2020년도부터 최근 3년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現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0.3조원 증가하여('17년 19.5 → '22년 29.8조원) 3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까지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GDP대비 정부 R&D 투자비중 1.09%로 세계 1위, 전체 R&D투자비중 4.64%로 세계 2위에 이르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 확대에 힘입어 논문·특허 증가 등 과학기술분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세계 2위로 평가받는 과학인프라 등 이 분야의 높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불화수소 등) 대응,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표 4-1] R&amp;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274,005	297,770	8.7
과학기술	78,903	83,772	6.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7,866	74,545	9.8
교육	24,368	25,436	4.4
사회복지·보건·환경	14,140	15,407	9.0
SOC	10,137	10,794	6.5
기타	78,591	87,817	11.7

## 4-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

한국판 뉴딜 2.0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R&D 투자를 '21년 2.4 → '22년 3.5조원으로 +1.1조원(46.8%) 확대

지능형 메모리(PIM) 반도체(509억원), 인공지능 핵심기술(371억원) 등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실감 콘텐츠·사물인터넷('21년 165 → '22년 259억원) 등 비대면 전환에 따른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한다. 디지털 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 디지털 트윈 간 정합성 향상 등 SOC 디지털 가속화 또한 지원한다.

2050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에너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등 탄소배출 저감과 녹색관련 R&D 투자를 확대하여 탄소배출을 최소화한다. 산림부문('22년 70억원) 등 부문별로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연구하고, 건축물 에너지 성능진단('22년 42억원)을 통해 녹색 생활 인프라를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전력수요를 관리('21년 2,140억원 → '22년 2,404억원)하고 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21년 2,839 → '22년 2,972억원)하여, 저탄소 에너지 전환 및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표 4-2] 한국판 뉴딜 R&D 지원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한국판 뉴딜 R&D	24,028	35,273	46.8
• 디지털 뉴딜	10,894	16,868	54.8
• 그린 뉴딜	13,134	18,405	40.1

## ㉔ 미래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BIG3 분야 핵심산업에 R&D투자를 확대('21년 2.4조원 → '22년 2.7조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미래시장 선도 및 新공급망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확대('21년 2.2조원 → '22년 2.3조원)한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반도체, 첨단 센서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21년 0.3조원 → '22년 0.4조원으로 확대한다.

고속도·저전력 구현을 위한 PIM 반도체 개발(509억원), 실리콘 대비 전력효율·내구성이 높은 차세대 화합물 소재 전력반도체(192억원), 산업수요 특화 첨단센서(K-Sensor, 153억원)에 신규 투자한다. 또한 반도체 설계·융합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 양성(1,700명)과 핵심 설계자산(IP) 확충 등을 통해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핵심기술개발+고급인력 양성+채용연계」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사업도 확대하고자 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산업생태계 형성과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21년 1.76조원 → '22년 1.87조원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개발-생산공정-연구협력 등 단계별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투자를 '21년 4,424억원 → '22년 5,102억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2030년 세계 점유율 6% 달성 목표를 위한 범부처 협력 블록버스터급 신약('21년 452억원 → '22년 1,342억원), 첨단기술 융합 의료기기 개발('21년 1,903억원 → '22년 1,816억원)을 지원하며 첨단 GW 바이오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및 뇌질환·치매 등 국민 건강 분야 기초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의약품·의료기기 안전·평가 등 규제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의사과학자를 비롯한 바이오헬스 1,200명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등 R&D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자율주행차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1년 0.39조원 → '22년 0.48조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친환경차는 전기차 주행효율 향상(400 → 600km)

및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강화(16만 → 80만km), 자율주행차는 LV4.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소상용차 보급확산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2.0에 206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위험군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R&D를 신규(187억)로 착수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시장 선도 및 新공급망 창출을 목표로 '21년 2.15조원 → '22년 2.28조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5대 주력사업 고도화 및 4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 품목(65개)을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으뜸기업 육성을 확대(40 → 60개)하고 앵커 수요기업 중심 5대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인프라를 확충한다.

[표 4-4] 주력산업 고도화 R&D 지원

(중복포함,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 주력산업 고도화	45,882	50,269	9.6
• BIG3 분야 R&D	24,336	27,484	12.9
- 시스템 반도체	2,890	3,959	37.0
- 미래차	3,887	4,775	22.9
- 바이오 헬스	17,560	18,750	6.8
• 소재·부품·장비 R&D	21,545	22,784	5.8

## ㉔ 도전적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우주·양자·6G 등 미래적 분야 도전을 위해 우주분야 R&D 예산을 '21년 4,626억원 → '22년 6,477억원으로 +40.0% 확대하고, 양자, 6G에도 '21년 459억원 → '22년 927억원으로 +101.9%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분야는 GPS를 대체하여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착수(신규 845억원)하고 한국형발사체 자력 발사('21.10월, '22.5월) 이후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발사체 고도화(신규 1,728억원)를 추진한다. 중소형 위성체계를 개발(815억원) 및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중심 「New Space」시대 개막에 대응한다. 또한 달궤도선을 발사하여 달 탐사를 실시('22년)하고, 미국 주도 Artemis 협약을 이행하는 등 본격적 우주탐사를 실시하는 원년으로 삼는다.

양자 컴퓨팅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100억원)과 양자인터넷 핵심기술개발(72억원)을 신규로 진행하며, 한미 공동연구를 신규 지원(60억원)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6G 인프라 기술 및 장비·부품 주도권 선점을 위해 10대 과제(테라급 무선통신·부품·지능형 무선 기술 등)를 중점 추진('21년 172억원 → '22년 308억원)한다.

[표 4-5] 도전적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지원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5,085	7,404	45.6
• 우주·항공 R&D	4,626	6,477	40.0
• 양자, 6G 등 R&D	459	927	101.9

## ㉔ 국정과제 R&D 투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와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를 '17년 대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연구자주도 기초연구('21년 2.3조원 → '22년 2.5조원)와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21년 2.5조원 → '22년 2.5조원)를 확대한다.

국정과제의 완성을 위해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17년 대비 2배 이상 확대('17년 1.26조원 → '22년 2.55조원)한다. 또한 연구자 성장 단계 및 학문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인문학 등 도전적 융합연구(STEAM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21년 205억원 → '22년 369억원)한다.

중소기업 전용 R&D도 '17년 대비 2배 이상 확대('17년 1.18조원 → '22년 2.49조원)하여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한다. 산-학-연 인력·장비·기술 연계와 先 민간투자-後 정부 R&D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R&D 중점투자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표 4-6] 국정과제 R&D 투자 R&D 지원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국정과제	48,184	50,340	4.5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R&D	23,484	25,488	8.5
• 중소기업 전용 R&D	24,700	24,852	0.6

## ㉔ 혁신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혁신인재('21년 0.6조원 → '22년 0.67조원), 국제협력('21년 0.5조원 → '22년 0.58조원)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고난도 AI 공동연구(100억원), 실무형 인재 양성(38억원) 등 산업수요가 높은 핵심 기술에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ICT 분야 해외 대학 맞춤형 교육과정(18억원) 개설, 기술분야 협의회 등 해외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 대학의 ICT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지역 산업 연계 산학 공동연구·교육을 12개 대학에 지원한다.

우주·양자 분야의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원과, 감염병·탄소중립·미세먼지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교류, 감염병 공동연구 협력 등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한다.

[표 4-7] 혁신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R&D 지원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혁신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042	12,535	13.5
• 혁신인력 양성 R&D	6,013	6,708	11.6
• 국제협력 R&D	5,029	5,827	15.9



##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5-1 재정지원 방향

2022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31.3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에는 수출 총력지원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그린뉴딜 투자, 벤처붐 분위기 사수, 코로나 19 등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재기·성장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다.

#### ㉠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 ㉡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산업 육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장기저리 사업비 융자(2021년 5,340억원 → 2022년 6,590억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2021년 3,133억원 → 2022년 3,214억원)을 확대하였다. 건물형 태양광 보급확산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지원과 같은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도 강화한다.

### ㉠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하였다

### ㉡ 역동적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제2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해 모태펀드가 5,200억원의 예산을 출자하여 1.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한다. 또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기업 발굴·육성해 유니콘기업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2021년 60개사, 180억원 → 2022년 100개사, 300억원) 유망 스타트업과 관련기업, 기관들이 한데 모여 혁신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린스타트업타운 2개소, 스타트업파크도 1개소씩 구축한다.

우수 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국내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해외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에게 현지 진출 컨설팅, 현지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을 운영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현지화하여 해외진출을 돕는 해외실증(PoC) 사업을 지원한다(20개사, 24억원).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 ㉔ 영세 소상공인 재기·성장지원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2021년 4/4분기 이후 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위해 3.2조원을 지원하고,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약 210만명 지원을 위해 35조원 수준의 저리 용자를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스마트기술을 보급·확산하여 전국 0.7만개 점포(스마트상점 약 0.6만개, 스마트공방 0.1만개 등)를 스마트상점·공방으로 육성한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구독경제화 지원, 쇼핑물 입점, 라이브커머스 제작 등 온라인 판로지원(2021년 726억원 → 2022년 905억원)을 늘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가속화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3조원 → 3.5조원)하여,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한다.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2022년 8곳 신규)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신규 지원(34곳)을 통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표 5-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286,487	313,270	9.3
무역 및 투자유치	11,519	9,096	△21.0
창업 및 벤처	44,617	42,466	△4.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117,970	141,782	20.2
에너지 및 자원개발	45,872	50,795	10.7
산업혁신지원	55,893	58,313	4.3
지식재산일반	3,472	3,678	5.9
산업금융지원	365	—	△100.0
산업·중소기업일반	6,779	7,141	5.3

## 5-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후퇴로 침체된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2021년) 11,519억원 → (2022년) 9,096억원 (△21.0% 감소)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디지털 통상 전문가양성 등을 바탕으로 양·다자·지역별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표 5-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1,519	9,096	△21.0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817	786	△3.6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288	394	36.9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5	22	51.3

## 창업 및 벤처 부문

포스트 코로나시대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지원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기반을 강화한다. 벤처 붐 확산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투자 역할도 지속할 계획이다.

☞ (2021년) 4조 4,617억원 → (2022년) 4조 2,466억원 (△4.8% 감소)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대상 협업부처 연계지원을 확대(2021년 300억원 → 2022년 450억원),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아기유니콘 지원사업도 확대한다.(2021년 180억원 → 2022년 300억원)

우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사업화 자금, 신기술 해외 실증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을 확대(2021년 75억원 → 2022년 99억원)한다.

2021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벤처투자자와 제2벤처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5,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대한민국 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표 5-3] 창업 및 벤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44,617	42,466	△4.8
창업사업화지원	4,425	4,328	△2.2
민관협력창업자 육성	1,024	1,303	27.2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1,266	977	△22.9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000	5,200	△35.0

## 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화·디지털화와 관련된 투자를 확대한다.

☞ (2021년) 11조 7,970억원 → (2022년) 14조 1,782억원 (20.2% 증가)

불확실한 경기여건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자금 용자(91,100억원 → 92,600억원)를 지속 지원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역점 추진중인 가운데, 2021년말 누적 2.5만개 보급에 따라 2022년도에는 5천개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고도화된 첨단 스마트공장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K-스마트등대공장 육성을 확대(10 → 15개사)하고,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 간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를 본격 구축(3개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상점·공방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444억원 → 770억원)한다. 구독경제화 지원, 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제작 등의 온라인 판로지원

예산(726억원 → 905억원)을 늘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가속화한다. 카드 매출정보, 임대료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도 착수한다(36억원).

[표 5-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17,970	141,782	20.2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	2,000	△60.0
신성장기반자금	17,700	16,200	△8.5
소상공인지원(융자)	37,000	42,000	13.5
소상공인성장지원	1,314	1,463	11.3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220	770	250.0

## 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 (2021년) 4조 5,872억원 → (2022년) 5조 795억원 (10.7% 증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①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용자, ②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③지역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④도시內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등을 위한 용자예산이 증액(2021년 5,340억원 → 2022년 6,590억원)되었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하였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도 강화한다.

[표 5-5]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45,872	50,795	10.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3,133	3,214	2.6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5,340	6,590	23.4
녹색혁신금융(융자)	370	418	13.0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839	2,972	4.7
에너지바우처	1,139	1,389	22.0

## ㉠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 (2021년) 5조 5,893억원 → (2022년) 5조 8,313억원 (4.3% 증가)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및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산단 소재 기업의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예산을 확대하였다.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55,893	58,313	4.3
소재부품기술개발(R&D)	7,109	8,410	18.3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139	198	42.8
국가신약개발사업(R&D)	151	461	206.4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	65	99	52.0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	430	순증

## ㉠ 지식재산일반 부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건전한 지식재산권 기반의 혁신 성장 및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2021년) 3,472억원 → (2022년) 3,678억원 (5.9% 증가)

창의성·기술혁신에 기반한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여 조기 권리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754억원 → 841억원).

우수 IP보유기업이 미래 가치에 기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IP 평가지원 예산을 확대(96억원 → 116억원)하고, 수출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해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 제공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218억원 → 25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IP 인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26억)을 신규로 편성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IP 침해를 예방 및 대응하고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5-7] 지식재산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3,472	3,678	5.9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지원	754	841	11.4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	26	순증
지식재산 평가지원	96	116	20.2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218	255	17.2

## 06 SOC 분야



### 6-1 재정지원 방향

2022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8.0조원으로 2021년 26.5조원 대비 5.5% 증가하였다. SOC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지원,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주요 간선망 구축에 집중하고, IoT 등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노후SOC 유지보수 및 생활안전 인프라 고도화, 드론·자율차·스마트도시 등 혁신성장 및 미래 신산업 관련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 ㉔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주요 간선망 구축 강화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장거리·대량통행이 특징인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GTX), 광역 BRT,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혼잡을 완화한다. 지방 광역경제권은 지방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교통망을 구축하여 광역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23개)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2022년 18개 SOC 사업 중 8개는 공사·착공, 10개는 설계가 실시될 예정이다.

#### ㉔ SOC 첨단화 및 안전투자 확대

SOC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도로 유지보수 및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어린이집·양로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건설근로자 역량 교육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의 안전투자 확충 및 안전관리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㉔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주요 국도에 ITS 구축 확대 및 C-ITS 구축을 위한 통신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고, 드론·UAM 등 신 교통수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용시험장 완공 및 드론 인증센터·교육센터 구축 등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창출을 도모한다.

## ㉕ 생활밀착·국민체감형 SOC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물류 인프라 스마트화로 체감도 높고 질 좋은 SOC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및 스마트 물류센터 지원을 확대하여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 세종)의 성과확산 및 혁신기술 발굴·실증 지원을 확대한다.

[표 6-1]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2021년 (a)	2022년 (b)	증감율 ((b-a)/a)
합 계	265,090	279,683	5.5
도로	77,829	85,478	9.8
철도	80,956	85,756	5.9
해운·항만	21,099	20,413	△3.3
항공·공항	3,564	4,237	18.9
물류등기타	30,192	32,607	8.0
수자원	16,517	16,055	△2.8
지역및도시	30,693	30,439	△0.8
산업단지	4,239	4,699	10.8

## 6-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도로 부문

고속도로, 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 투자를 지속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첨단도로교통체계·교량IoT 시스템 구축 등 도로 분야 인프라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대비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1년) 7조 7,829억원 → (2022년) 8조 5,478억원 (9.8% 증가)

고속도로는 연차별 투자소요, 집행률 및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종-안성, 안성-구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주요사업에 중점투자하고, 광주순환, 동이-옥천 고속도로의 2022년 준공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양평, 서평택-안산 등 신규 고속도로 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일반국도의 경우, 동읍-한림 등 11건 준공사업 및 충청내륙, 춘천-화천 등 99개 계속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른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따라 추진되는 남해 서면-여수 신덕, 신안 비금-암태, 고창 해리-부안 변산 등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도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자도로는 이천-오산, 포천-화도, 평택-안산 등 실시협약에 따른 의무지출성 예산(MRG, 건설보조금)은 필요 소요로 반영하고, 토지보상비는 민자 先보상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와 금융비용을 반영하였다.

한편, 교량·터널 등 노후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투자 확대와 AI·IoT 등 첨단기술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분야 디지털 뉴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주요 국도 4,520km에 ITS를 구축하고, C-ITS 도입을 위한 통신기술 연구 등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량 및 비탈면 IoT 시스템 구축, 터널 원격제어 체계 구축 등 상시관측을 통해 위험을 자동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SOC 디지털화도 중점 추진한다.

[표 6-2]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77,829	85,478	9.8
고속도로	20,609	24,025	16.6
국도	19,169	19,498	1.7
민자도로	5,940	8,334	40.3
도로관리	25,254	27,047	7.1
지자체도로건설지원	4,026	4,417	9.7

## ㉠ 철도 부문

수도권은 교통 혼잡 해소 및 통근시간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지역간 균형발전 및 초광역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 또한,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도시철도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1년) 8조 909억원 → (2022년) 8조 5,684억원 (5.9% 증가)

고속철도 부문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고속철도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선로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평택~오송 2복선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철도 부문은 '23년 개통 예정인 보성~임성리, 포항~삼척, 포항~동해 전철화, 서해선, 이천~문경, 동두천~연천, 도담~영천, 진주~광양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광역철도 부문은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및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등 그 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대폭 확대(제3차 계획 1개 → 제4차 계획 11개)하였으며, 권역별 선도사업(5개)을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철도 부문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 보조사업인 신림선·동북선 등 경량전철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또한, 도시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사업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도시철도 차량 교체 지원사업도 지속 한다. 또한,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차량 내 CCTV 설치도 2022년 한시 지원한다.

철도망 확충 이외에도 기존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지속 투자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교량, 터널, 전기설비 등 각종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노후시설물 개량, 스크린도어·재해예방시설 등 안전시설 확충, 역사 증·개축 등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철도시설 유지보수·운영 디지털화를 촉진해나가고, 특히 2022년부터는 노후화된 외산 아날로그 신호설비를 국산 디지털 시스템(KTCS-2)으로 전면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표 6-3]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80,909	85,684	5.9
고속철도	3,469	5,564	60.4
일반철도	32,696	30,009	△8.2
광역철도	8,311	11,968	44.0
철도안전 및 운영	30,976	30,833	△0.3
도시철도건설	5,505	7,311	32.8

## ㉔ 해운 · 항만 부문

해운물류 산업의 세계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선박 보급과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하고, 항만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해상교통의 안전성 강화에 지속 투자한다.

☞ (2021년) 2조 1,099억원 → (2022년) 2조 290억원 (△3.8% 감소)

해운업계의 국제환경 규제 대응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외항선박 대상 친환경선박 대체 건조 지원을 확대(191 → 205억원)하고, 내항선박 대상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49 → 79억원)다.

이와 함께, 친환경 관공선 30척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장착을 신규로 지원하고 항만 야드트랙터(YT)의 LNG 연료 전환(50대, 6억원), 하역장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장착(42대, 15억원)도 지원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선사 경영안정 및 해운재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를 2022년까지 지원(300억원) 연장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를 인천과 부산에 건립(26억원) 지원하는 한편, 항만하역장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재해방지 시설설치를 신규로 지원(31억원)한다.

항만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916 → 1,207억원), 광양항(570 → 1,203억원), 새만금 신항(744 → 1,262억원) 등 항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재해안전항만구축(789 → 1,447억원) 등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항만 조성을 도모한다.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결손 보상금 지원(161 → 206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146억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18억원)를 지속 지원하고, 연안 화물선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에 따른 선사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를 지속 지원(622억원)한다.



[표 6-4] 해운·항만 부문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21,099	20,290	△3.8
항만개발 및 관리	16,352	15,881	△2.9
해운산업 선진화	3,322	2,984	△10.2
해양 및 해상교통	1,425	1,425	—

\* 지방이양일괄법 시행(21.1.1)에 따라 35개 지방관리항만 이관(1,598억원)으로 해운·항만 부문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이다.

## ㉔ 항공·공항 부문

항공수요 대응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탑승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 전국 15개 공항에 구축되도록 생체인식시스템을 적극 지원한다.

☞ (2021년) 3,564억원 → (2022년) 4,237억원 (18.9% 증가)

공항건설 부문은 국가 균형발전 및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9월)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신공항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릉공항은 '25년 준공 목표로 공사비를 대폭 확대하고, 그 외 공항은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여 공항건설에 차질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여 활주로 연장, 안전시설 개량 등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부문은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항공교통시장 선도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2025년 상용화를 위해 2022년까지 실증인프라(전남 고흥)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행시험장 등 제반 인프라의 차질없는 구축과 신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무결점 항공 안전을 위해 데이터 중심의 항공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며, 공항인근지역 소음 피해 주민 지원, 비대면 탑승을 위한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등도 지속 지원한다.

[표 6-5] 항공·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3,564	4,237	18.9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	1,892	2,251	19.0
항공발전지원	1,527	1,835	20.2
항공운영지원	145	151	4.1

## ㉔ 물류 등 기타 부문

스마트 물류, 자율자동차 등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2021년) 3조 8,746억원 → (2022년) 4조 1,568억원 (7.3% 증가)

「스마트 물류 인증제」를 통하여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 첨단시설 및 장비투자에 따른 금융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IoT,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시설 확충을 촉진한다.

모든 주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완전자율 주행차 기술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해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통해 주행데이터 분석 및 공유 활성화를 지원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확대, 벽지노선 지원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 한편 생활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등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둔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교통사고 환자들이 집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선진재활치료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표 6-6]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3,783	4,663	23.3
물류정책	373	389	4.5
대중교통 육성	1,346	2,169	61.1
자동차 및 교통정책	2,064	2,105	2.0

## ㉔ 수자원 부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등 미래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진 예보시스템 마련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국토 조성을 마련한다.

☞ (2021년) 1조 5,126억원 → (2022년) 1조 4,522억원 (4.0%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댐과 하천의 유량을 통합 관리하여 홍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댐-하천 연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적기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등 홍수예보 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확대한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 치수연구개발비를 반영하였고,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의 적기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지방하천정비는 재정분권에 따라 해당 하천관리청인 지자체에서 예산을 자체 확보하여 추진한다.

[표 6-7] 수자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5,126	14,522	△4.0
수자원정책 및 홍수관리	5,145	5,162	0.3
댐건설 및 치수능력증대	1,640	1,912	16.6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630	714	13.3
국가하천유지보수	4,138	2,599	△37.2

## ④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개발, 도시재생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 및 도시 : (2021년) 3조 693억원 → (2022년) 3조 439억원 (0.8% 감소)

☞ 산업단지 : (2021년) 3,833억원 → (2022년) 4,458억원 (16.3% 증가)

노후 주거지 개선, 도시 경쟁력 회복 등 도시쇠퇴를 막고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세계선도형 K-City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성과 확산,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한 솔루션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새만금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출자,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 및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광역교통시설 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적기 공급 될 수 있도록 총 66개 사업을 지원하며, 노후공단의 재정비를 지원하고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을 개발하기 위해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지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표 6-8]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지역 및 도시	30,693	30,439	△0.8
• 지역개발	5,994	5,299	△11.6
• 도시정책	13,986	11,892	4.9
• 국토정보관리	2,011	2,259	12.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4,344	4,038	△7.2
• 새만금개발	2,962	2,485	△16.1
산업단지	3,833	4,458	16.3
• 산업단지진입도로	3,045	3,539	16.2
• 산업단지지원	788	919	16.6

## 07 농림·수산·식품 분야



### 7-1 재정지원 방향

202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3.7조원으로 2021년 22.7조원 대비 1조원, 4.5% 증가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변화 촉진과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정망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국민들의 삶터·일터·쉼터로써 농어촌 공간 정비 및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한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를 지원한다. 둘째, 주요 식량작물 자급 기반 확충, 자율적 수급조절, 재해 및 가축질병 사전적 예방 조치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농어업경영 안정성을 강화한다. 셋째,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으로 농수산 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 및 농어촌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속 지원한다.

#### ④ 농어촌 활력제고

농어촌공간의 농어촌다움을 보전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마을정비 및 공장·축사 이전 등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를 (2021년) 5개소 → (2022년) 45개소(신규 40개소), 어촌뉴딜300을 (2021년) 250개소 → (2022년) 300개소(신규 50개소)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345개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청년농 등에 대한 농지매매·임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및 교육·판로 및 주거 등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농업·농촌

분야의 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 공간 및 주거지원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농촌에서 살아가기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탄소배출 저감 모델 실증 및 농촌지역 RE100 실증사업 4개소 신규지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한다.

### ㉔ 재해예방·소득안전망 확충 및 수급지원 강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변동에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여 농어업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2022년에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업·수산 부문에 이어 임업부문에 도입(신규, 512억원)한다. 또한, 농업 부문 공익기능증진직불제도(2020년 도입) 및 수산 부문 수산공익직불제(2021년 도입)도 안착을 지속 지원하여 농·림·어가 소득안정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 사고에 대비 안전재해보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을 통해 사전적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예측 고도화와 생산자 중심의 사전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직매장 운영 등을 지원한다. 또한, 2022년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속 지원하여 소비 활성화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㉕ 농·수산·식품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농어업 전반에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전문인력 육성 및 정착, 기술개발 및 실증 등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농어업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서비스 모델 보급 확산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농어업도 확산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 및 결제자금 융자 300억원을 신규지원하고, 축산물 부분육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한다. 또한 유통조직의 경영혁신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화시설, 경영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지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식품·외식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판 뉴딜 등과 연계하여 미래 대응 기술 개발 및 인력정보제공 등 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애로상황을 수시 파악·해소하고 한류열풍과 연계한 비대면마케팅 중심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품목·국가에 집중 지원하여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㉔ 농어업·농어촌의 포용성 제고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외국국적 농어업종사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실외사육견 중성화 시술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도 확대 지원한다.

[표 7-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226,557	236,823	4.5
농업·농촌	164,991	172,467	4.5
수산·어촌	26,736	28,428	6.3
임업·산촌	25,899	27,599	6.6
식품업	8,930	8,329	△6.7



## 7-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㉟ 농업 · 농촌 부문(농식품부)

농촌다움을 보전하고, 살기좋은 농촌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 및 정비를 추진하고, 청년 등 귀농귀촌 농업인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 판로 · 네트워크 및 주거 등을 종합 지원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 · 농촌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 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확산 및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하여 농업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계층별 영양 불균형과 취약계층 삶의 질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영양 · 건강 상태 개선하기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농업인, 외국인 등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 (2021년) 16조 4,911억원 → (2022년) 17조 2,467억원 (4.5% 증가)

비대면 · 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공간정비 예산을('21년 31억원 → '22년 327억원)으로 확대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스마트안전, 에너지 효율화, 녹지공간 조성 등 그린 인프라 조성을 지원(신규 28억원, 3개소)한다.

귀농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창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확대('21년 322억원, 1,800명 → '22년 375억원, 2,000명)하고, 귀농귀촌 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신규, 76억원)한다. 아울러, 구직자들과 농업 일자리를 연계할 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21년 53억원, 130개소 → '22년 69억원, 150개소)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을 위하여 축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소 사육모델 개발(신규 26억원), 농촌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생산·활용하는 RE100 모델(신규 18억원) 구축,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설치(신규, 29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82억원) 등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지원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밀 보급증 지원과 비축물량 확대, 두류 공동선별비,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 등 밀·콩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21년 1,831억원 → '22년 1,910억원)한다. 또한 주식인 쌀의 비축량을 연간 35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하여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을 4,755억원에서 6,857억원으로, 재해대책비를 1,285억원에서 2,285억원 확대하고, 재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전적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용수이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2조원)을 지원한다. 가축방역 부문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이력 관리할 수 있도록 신규 예산 66억원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인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임대팜 스마트팜(6개소), 스마트팜 기업 실증단지 운영, 청년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팜 저변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서비스 모델 농가 적용·보급을 추진(신규, 62억원)한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관측데이터의 정확도 제고, 의무자조금 품목('21년 14개, 106억원 → '22년 16개, 124억원) 확대, 주요 채소류 수급조절 물량 확대 및 사전적 수급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도 내실화('21년 341억원 → '22년 451억원) 등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안착을 지원한다. 또한,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촉진 및 유통시설 스마트화 추진을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결제자금융자(신규 300억원)를 지원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구축을 위한 ISP(신규 5억원)를 추진한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42억원을 투입하여 기숙사를 시범 건립하며, 약 2만여 외국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도 지원한다.

반려인구 천만시대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용을 15억원 신규로 지원하고,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 개선에도 18억원을 지원한다.

[표 7-2]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64,991	172,467	4.5
농업기반시설(SOC)	19,732	20,156	2.1
정부양곡매입비	11,271	14,290	26.8
농업재해보험	4,755	6,857	44.2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3,362	3,596	7.0
농지연금	1,809	2,106	16.4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31	327	954.8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53	110	107.5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	—	62	순증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	20	순증

## ㉔ 수산·어촌 부문

수산식품, 기자재 등 고부가 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업인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등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 해외판매 활로개척 등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양식 육성, 청정어장 재생 등 수산물 생산성 개선을 도모한다.

☞ (2021년) 2조 6,736억원 → (2022년) 2조 8,428억원 (6.3% 증가)

도서 및 해상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를 인상(75만원→80만원)하였으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대상도 확대(1,000척 → 1,437척)한다. 또한, 경영이양직불금제를 개선하여 청년어업인 유입으로 어촌사회 유지하고, 청년의 어촌정착자금 지원대상자를 확대(200명 → 220명)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실시하는 어촌뉴딜 300개소 선정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한다. 또한, 국가어항의 부잔교, 여객터미널, 화장실 등 기능편익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어선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거리조업어선 위치발신기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실습형 조업 안전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회복을 위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 조사와 폐어구 수거뿐만 아니라 우리 대형어선 등을 활용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조사와 회유성 수산종자방류를 확대(96억원) 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주요 수산자원의 생산량, 허가정수, 어업갈등 등 다각적 요인을 고려하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양식산업 육성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해 ICT·빅데이터 등 첨단양식 기술과 연관시설(유통·가공·사료 등)을 연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계속해서 조성(5개소)하고,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구축(1개소)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부표 사용이 적어 친환경적인 굴양식이 가능한 개체굴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공동생산 시설을 지원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청정어장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위판장 시설 개선(청정위판장)을 지속 추진하고,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200억원) 및 해외 온라인 시장 판로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 육성 지원(328 → 410억원) 등을 확대하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산지거점 유통센터(1개소)를 지속 확충한다. 또한 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전남 10 → 300억원, 부산 21억원 신규)을 본격 추진한다.

원양어업의 생산성 제고 및 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펀드를 지원(누적출자금 420억원 → 570억원)하고, 수산 후계인력 양성 및 수산계고교 활성화 등을 위해 수산계고교 공동실습 건조사업('22~'25년)을 신규로 추진한다.

[표 7-3] 수산·어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26,736	28,428	6.3
어촌어항 활성화	8,573	8,567	△0.1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5,250	6,567	25.1
어업인 삶의 질 향상	4,394	4,496	2.3

## ㉔ 임업·산촌 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분야 역할 수행을 위해 탄소흡수원 확충 등 산림자원을 육성·관리한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안정 및 산림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림복지 및 산촌을 활성화하며,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한다.

☞ (2021년) 2조 5,899억원 → (2022년) 2조 7,599억원 (6.6% 증가)

산림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경제림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목재수확 전 사전타당성 조사(11억원)와 목재수확 후 점검·관리(14억원)를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조림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151 → 185ha) 및 큰나무가꾸기(6천 → 15천ha)를 확대 추진하며,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임도시설 확대(826 → 954km) 및 임도 노선에 대한 타당성 평가(9억원)를 신규 추진한다.

생활권 주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국유지도시숲 조성(6 → 30ha), 생활밀착형 숲 조성(34 → 108개소), 차단숲 조성(156 → 193ha)을 확대하고, 바람길숲 조성(8개소)을 추가로 추진한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제고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는 임업인 등에게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512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산촌 및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와 사회적 기업을 지속 발굴·육성하고, 산림휴양·치유 수요 증가 등 국민적 요구를 고려하여 국립자연휴양림 조성(3개소) 및 치유의 숲 조성(2개소)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노령산맥권 휴양·치유 벨트 조성을 완료한다.

정원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국가정원(2개소)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한국정원 문화원 및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을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건립을 신규 추진한다.

산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산림헬기(2대, 150억원) 및 진화차량(90대, 19억원)을 교체하고, 산불에 대한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산불피해지 조사(10억원)를 신규 추진한다.

산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확대(900 → 7,200개소)하고, 산사태 피해저감 효과가 입증된 사방댐 설치를 확대(390 → 704개소)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 → 3,792ha)하고, 일반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재발생 조사(8억원)를 신규 추진한다.

산림을 통한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협력 등 관련예산(ODA 포함)을 확대(235 → 263억원)하고, REDD+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표 7-4]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25,899	27,599	6.6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2,338	2,688	15.0
숲가꾸기	1,884	2,308	22.5
사방사업	1,628	2,267	39.3
임도시설	1,093	1,382	26.4
산림헬기 도입·운영	664	774	16.6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	512	순증
정원조성관리	220	375	70.5

## ㉔ 식품업 부문

식품 분야 디지털화·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식품 제조 기반기술 개발, 미래 유망 분야 핵심 소재 및 산업화 기술 확보 등 미래 식품산업을 견인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온라인시장 한국식품관 운영을 확대하고, 한류 열풍과 연계한 정부 합동 K-박람회 개최 등 해외시장 개척에 진력하는 한편, 수출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을 확대한다.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친화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고령친화식품 실증 시험 등을 지원한다.

☞ (2021년) 8,930억원 → (2022년) 8,329억원 (△6.7%)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대체식품 및 친환경 식품 포장 관련 기술, 현장 수요가 높은 범용적 설비·부품 및 가공·검사 기술 등 식품 제조 기반 기술, 질환 관리식·기능성 소재 등 건강 관리 식품의 산업화 기술 및 핵심 소재 생산 기술 등 유망 분야 관련 R&D 지원('21년 313억원 → '22년 338억원)을 확대한다.

세계적인 물류대란,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1년 농식품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금년에도 이어나가기 위해 해외 온라인시장에 우수한 우리 농식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을 확대('21년 6개소 → '22년 11개소)한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연계하여 해외에서 정부 합동 K-박람회를 개최하고,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확산하며,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 외식 창업 희망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21년 10억원 → '22년 13억원) 및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21년 4억원 → '22년 11억원)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다채로운 외식 메뉴 활성화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외식업계의 지역 식재료 소비 확대를 지원(3개소, 4억원)한다.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친화식품산업을 식품분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고령친화우수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하고, 실증시험을 통해 우수성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21년 6억원 → '22년 13억원)한다.

김치 종주국으로써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시기에 세계인의 건강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김치원료공급단지 2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김치의 날 및 김치 홍보예산 등을 신규 지원한다.

[표 7-5]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8,934	8,329	△6.7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809	855	5.7
농식품해외시장진출	475	446	△6.0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453	358	△20.9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48	179	△20.5
전통발효식품육성	144	119	△17.2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62	82	33.6
기능성식품산업육성	61	63	4.6
푸드서비스 선진화	723	50	△93.0

## 08 환경 분야



### 8-1 재정지원 방향

2022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11.3조원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과 국민 생활안전·삶의 질 제고 등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 ㉠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수송부문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 지원과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폐기물 지속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 구현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현대화 등 지원사업도 다양화한다.

또한,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 ㉡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낙동강유역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사업 등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먹는물 안정성을 확보한다.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 ㉔ 미세먼지·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지속 구현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후산단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화학안전사업장 조성지원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 ㉕ 자연과 사람의 공존기반 조성

국립공원, 비무장지대(DMZ)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 강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저지대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사업,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 공존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표 8-1] 환경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06,157	112,928	6.4
물환경	44,015	43,368	△1.5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34,102	42,513	△24.7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1,913	10,532	△11.6
자연환경(해양환경)	11,151	11,640	4.4
환경 일반	4,976	4,874	△2.0

※ 환경분야 총지출 기준(예산+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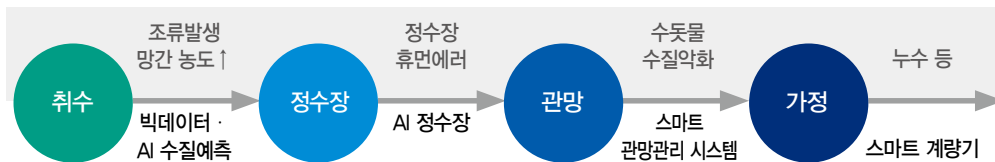
## 8-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 ㉠ 물환경 부문

상하수도 보급률('20년 기준 상수도 99.4%, 하수도 94.5%)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수질개선 기초시설 설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 물 복지 등 신규 정책수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0년부터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스마트화 사업은 '22년까지 마무리하고, '21년부터 시작한 광역상수도 스마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먹는물 전과정에 AI·ICT 기반의 실시간 감시·제어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돗물 유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정수장 위생관리사업을 마무리하고, 수돗물 불신의 주요 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옥내급수관 교체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먹는 물 전과정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또한, 30여년간 지속되어온 낙동강 유역 물문제 해결을 위해 '22년부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공장폐수 중 미량오염물질 고도처리 등을 위해 신규 투자를 시작한다.

아울러 센서(수위·강수량)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분석 자동화, 소요시간 최소화 등 선제적인 AI 홍수 예보사업도 추진한다.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사업과 오염지류 유역진단 및 수변 생태수로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낙동강 유역 물문제 해소를 위해 수질개선사업 및 상·하류 지역 취수원 다변화 등도 지속 추진한다.

[표 8-2]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44,015	43,388	△ 1.4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4,676	2,504	△ 46.4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189	234	23
노후상수도 정비지원	4,615	4,568	△ 1.0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04	384	88.2
빅데이터 기반 시흥수예보	108	183	69.4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115	75	△ 34.8
오염지류 유역진단 및 수변 생태수로 조성	128	35	△ 72.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20	98	25.6
낙동강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	13	순증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 대상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 용자지원('22년 7개소 1,900억원), 공공기관 가스히트펌프(GHP) 저공해화('21년 1,000개소) 등 핵심 배출원 저감을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21년 6,282억원 → '22년 4,782억원)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의 LPG 차량을 전환 지원('21년 6,000대 → '22년 6,000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에 친환경 보일러 구매 비용을 차등지원(일반 10만원(60만대), 저소득층 60만원(1만대))하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수소차와 충전소

대기질을 개선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무공해차를 보급한다. (전기차 '21년 10.1만대 → '22년 16.5만대, 수소차 '21년 15.2천대 → '21년 28천대)

아울러,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견인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21년 8,000기 → '22년 37,000기, 수소충전소 '21년 55개 → '22년 100개소)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환경성 질환 사전예측·원인규명 R&D 착수 등 예방관리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등 국민 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효능평가 및 노후산단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실시간 원격 감시체계 구축, 화학안전사업장 조성지원 등 환경안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화학물질·제품 등록·승인 전과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과정에서 척추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확산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22년 23억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기후환경협력 차원에서 개도국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라오스 등 3개국을 대상으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22년 45억원)

[표 8-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34,102	45,006	32.0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5,056	3,385	△33.0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6,557	5,095	△22.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1,226	19,352	72.4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4,416	8,928	102.2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622	472	△24
화학제품 안전관리	240	303	26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119	91	△23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140	209	49

## ㉔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21년 28억원 → '22년 54억원)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22년 54억원)하며,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고르게 증액하는 등 '22년에 약 941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열·수소 등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편의시설과 연계된 주민·환경친화형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도 신규 추진한다. ('21년 23억원)

중소환경기업의 해외진출 밀착지원, 미래환경산업펀드 본격 운영, 장기·저리 융자지원 통하여 환경산업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산업체를 집중 지원하여 환경산업 수출확대를 도모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 도약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의 오염물질 감소, 에너지 사용저감 등을 통해 친환경 공장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청정대기, 생물소재, 자원순환 등 녹색산업 선도분야에 대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물소재, 녹색금융 등 신산업 분야 산학연계·공동연구 등을 통해 녹색융합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주도의 기후 회복력 강화와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제공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를 본격 조성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매체별(수질, 대기, 폐기물 등) 분산관리 체계를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매체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측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 기반 하에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표 8-4]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1,913	13,712	15.1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236	281	45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85	139	54
자원순환촉진지원	192	236	44
재활용품 비축사업	259	257	△2
재활용 및 업사이클체계 구축	27	28	1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897	656	△26.8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216	207	△4.2
스마트그린도시	526	1,060	101.5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287	210	△26.8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3,111	2,115	△32

## ㉔ 자연환경 부문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 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생태계 연속성 및 생태적 기능 향상에 기여한다.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체험·탐방 인프라를 조성하여 전국민(교통약자 포함)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야생생물 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공존문화 조성을 강화한다.

또한, ASF 확산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예찰·신고·검사 강화, 차단·광역 울타리 등 확산방지 시설 설치도 계속 추진한다.

[표 8-5] 자연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8,317	9,058	8.9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2,336	2,257	△3.4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233	223	△4.3
생태계 훼손지 복원	150	155	3.0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320	366	14.5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124	279	125

## 09 국방분야



### 9-1 재정지원 방향

2022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4.6조원으로 2021년 52.8조원 대비 3.4% 증가한 규모이다.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지속 개선하는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우주분야 등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과 국내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 R&D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다.

#### ④ 국방운영의 정예화 · 첨단화,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장교 · 부사관 중심으로 군 인력구조를 정예화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여 국방운영을 첨단화하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 또한, 병 봉급 및 급식비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생산적 군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였다. 아울러, PCR 검사비 신규지원, 의무장비 보강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 ④ 신규 핵심무기전력 확보 및 국방 R&D 투자 확대

2022년에는 자주국방능력 강화를 위해 33개의 신규전력 착수예산을 확보하였다.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향공모함을 확보하며 지상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상륙공격헬기, 소형무장헬기 등에도 투자한다. '21년 4월 시제 1호기를 출고한 KF-21의 개발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의 신기술 및 성숙된 기술 · 제품을 소요군에 신속히 도입하여 안보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획득사업과 신속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등 우리 기술력으로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원천 기술 및 현존하지 않는 최첨단 미래무기 개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 기술 확보 등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전년 대비 11.5%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9-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전력운영 부문

국방인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국방운영을 첨단화하며, 급식 대책 및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 국방분야 적용 및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사이버·재난·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전력운영비 : (2021년) 35.8조원 → (2022년) 37.9조원 (5.8% 증가)

### (1)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및 국방운영 첨단화

첨단장비 운영에 적합한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정원구조를 개선하고 병력 감소 자원을 간부·군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투부대는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비전투부대는 민간인력 활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

(부사관·군무원 5,503명 증원)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을 통해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시킨다.

또한, 중·소대급 포병 사격훈련용 마일즈 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를 확대하여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간다.(2,560억원).

## (2) 장병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병장기준, 월 676,100원)하고,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기본급식비 단가를 대폭 인상(일 8,790원 → 11,000원, 25.1%) 및 민간조리원 910명(2,278 → 3,188명)을 증원한다. 병 자기개발비 지원을 확대(연 10만원 → 12만원)하는 한편,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기본금리에 1%를 추가 지급하고, 납입 원리금에 대하여 1/3 매칭지원금을 지급하여 사회와 단절없는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을 지원한다.(2,190억원). 병사의 군 복무 중 질병, 상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한다.(본인부담금의 최대 96%) 또한, 학군후보생 역량강화 활동비(월 8만원) 신설, 간부숙소 개선(4,890 → 5,934실)을 통해 간부의 복무여건을 향상시킨다.

## (3)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 강화

PCR 검사비 신규 지원(214억원), 보건용 마스크 기존 주 3매에서 주 5매로 확대 지급(536억원), 방제용역 실시(연 5회) 등 의무장비·물자 보강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보강한다.(1,353억원) 아울러, 대테러·대화생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장비·물자 도입 예산도 반영하였다.(562억원)

[표 9-1] 전력운영비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358,437	379,195	5.8
급여정책	152,058	160,639	5.6
군인·공무원 연금 기금 전출금	30,798	32,042	4.0
급식 및 피복	23,016	25,161	9.3
국방정보화	6,424	7,329	14.1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4,991	7,981	59.9
군수지원 및 협력	61,845	60,219	△2.6
군인사 및 교육훈련	8,024	9,069	13.0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46,849	50,318	7.4
예비전력관리	2,346	2,612	11.4
책임운영기관 운영	2,041	2,157	5.7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1,912	13,994	17.5
국방행정지원	8,132	7,473	△8.1

## ㉔ 방위력 개선 부문

전방위 안보위협 및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WMD 대응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기체계 국산화 및 핵심기술개발 등 국방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한다.

☞ 방위력 개선 : (2021년) 17.0조원 → (2022년) 16.7조원 (1.8% 감소)

북한 및 주변국의 전방위 위협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경항공모함, 장사정포 요격체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 등 핵·WMD 대응전력에 중점 투자(2022년 4.3조원)하고, 군위성통신체계-Ⅱ,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등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핵심군사능력을 강화해 나간다.(2022년 2.6조원)

또한,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변화하는 작전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K-2

전차, 한국형 전투기(KF-X), 상륙공격헬기, 레이저대공무기 등 군구조개편 관련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개발을 위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원천·핵심 기술 확보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대비 11.5% 확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군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방위력의 고도화·지능화를 촉진하는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국방벤처기업육성 및 방산혁신 클러스터 추가조성, 방산기술보호 등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방위산업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무기체계 투자 확대와 더불어, 무기체계 도입 시 철저한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방위력개선 예산의 지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69,964	166,917	△1.8
무기체계 양산 및 도입	125,682	117,361	△6.6
국방 R&D 투자	43,314	48,310	11.5
방위산업 육성	968	1,246	28.7



경항공모함



상륙공격헬기



레이저대공무기

# 10 외교·통일 분야



## 10-1 재정지원 방향

2022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6.0조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다. 2022년은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 대북·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에 중점을 둔다.

### ④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및 新안보 외교 강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협력을 주도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보·경제의 다층적·복합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의 개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경제안보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4차산업 혁명 및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한다.

### ④ 외교 다변화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중남미·아중동 지역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에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23.6월 선거 예정)을 위해 선거 교섭 활동을 추진하고, 2022.1월 국제기구 분담금법 시행에 따라 분담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범정부 분담금 통합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

### 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하면서 기후변화, 교육, 빈곤퇴치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한다. 외교 다변화, 신남방·신북방,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과 ODA 사업간 정합성을 제고하여 ODA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그린·디지털·보건 ODA를 강화하고, 원조 효과성이 크고 수원국 만족도가 높은 융합 ODA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 ㉕ 지속적 대북·통일정책 기반 구축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

국내외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소통 플랫폼을 마련하고, 2030 세대 대상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해외 연구자 지원, 재외동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에도 주력할 것이다. 또한, 권역별 '통일+센터'설치, '통일정보자료센터'건립, 'DMZ 평화의 길'인프라 정비, '판문점 견학'확대 등 통일공감대 확대를 위한 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남북간 연락채널의 안정적 운용, 남북간 대화 복원 및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표 10-1]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57,037	59,543	4.4
외교·통상 부문	41,958	44,180	5.3
통일 부문	15,079	15,363	1.9

## 10-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㉔ 외교 · 통상 부문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경제안보 및 기술안보 등 신안보 외교환경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통상 부문은 4조 4,18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2021년) 4조 1,958억원 → (2022년) 4조 4,180억원 (5.3% 증가)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역내 협력 등 방역 외교를 활발히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 [COVAX AMC]에 1억불을 공여하고, 루마니아에 2021년 도입 백신에 상응하는 의료물품을 제공하고(88억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중·일·러·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운영할 예정이다.(2억원)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보·경제의 다층적·복합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의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센터(가칭)를 신규 설립한다.(26억원)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로 과학기술 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를 확대한다.(‘21년 3억원 → ’22년 8억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남미·아중동 지역으로 외교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실질 교류를 확대한다.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센터(가칭)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억원)과 한-중미통합체제(SICA)와의 협력 사업(5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을 확대한다.(‘21년 42억원 → ’22년 52억원)

유엔을 비롯한 G7, G20, APEC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무대에서 국격을 제고할 예정이다.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23.6월 선거 예정)을 위한 선거 교섭활동(10억원)을 추진하며, OECD 동남아프로그래밍 각료포럼 서울 행사를 개최한다.(6억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재외국민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21년 1억원 → '22년 5억원), 해외 위난 시 전세기 투입 등 긴급대피('21년 10억원 → '22년 20억원) 예산을 증액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 외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스마트 업무환경 및 지능화 사업을 수행하고(31억원), 노후 외교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해('21년 263억원 → '22년 288억원) 시설 안정성 및 기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분야는 그린·디지털·보건 ODA, 융합 ODA를 중심으로 전략적 ODA 투자를 확대하고,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해 COVAX AMC에 1억불도 차질없이 공여한다.

우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그린·디지털·보건 ODA를 강화(1.0조원 → 1.2조원)하고, WFK 해외봉사단 등 청년들의 개발협력 참여를 확대(538억원 → 794억원)하여 청년·기업의 ODA 참여 활성화 및 국제기구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으로, ODA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부처가 협업·연계하는 융합 ODA(예: 홍수예·경보 마스터플랜(환경부) + 시스템 구축(외교부 등) + 감시·예측 통합플랫폼(기상청))을 적극 발굴·지원(23개 부처 102개 프로그램, 3,937억원)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한다. 특히 원조 효과가 큰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및 수원국 만족도가 높은 인프라-역량 강화 유형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우리나라 ODA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3차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신남방·신북방 정책, 일자리 정책 등 국가적 정책과 ODA 사업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체계적으로 ODA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표 10-2] 외교·통상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41,958	44,180	5.3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64	42	△34.0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263	288	9.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3,042	13,844	6.2

## ㉔ 통일 부문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 추진, 남북공동번영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 추진을 위해 통일 부문 총지출은 1조 5,36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통일 부문 : (2021년) 1조 5,079억원 → (2022년) 1조 5,363억원(1.9% 증가)

☞ 남북협력기금 : (2021년) 1조 2,456억원 → (2022년) 1조 2,714억원 (2.1% 증가)

### (1)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남북관계발전포럼’ 및 분야별 ‘대북·통일정책 플랫폼’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국민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2030 대상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 메타버스를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등 미래세대 대상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통일학 분야 해외 연구 지원 및 재외동포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국제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구축하는 등 통일·대북정책 관련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2) 통일·북한 관련 대국민 서비스 확대

평화·통일 지역 거점으로서 '통일+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18년 인천, '21년 호남·강원권에 이어 '22년에는 충청·경기권에 통일+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균형적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정보 AI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북한정보 분석을 보다 체계화하고, 국내 유일 북한전문도서관인 '북한자료센터'를 확충하여 '25년 하반기 경기도 고양시에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신축 개관하기 위해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

한편, DMZ 평화지대화에 대한 국민체감을 증진하기 위해 DMZ 인접 지역에 평화통일 특화 노선을 개발하고, '평화의 길'통일걷기 프로그램 활성화, 숙박·위생시설 등 걷기 인프라 확충, DMZ 웹지도·모바일앱 개발 등을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 코로나 19 상황을 보아가며 판문점 견학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통일·북한 관련 체험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 및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연락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 나가고자 한다. 코로나 시대 남북영상회담 등 방역안전 회담체계도 구축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보건의료·민생협력 등 인도적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고, 대화 복원 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특히,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등 남북교류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지속 조성해나갈 것이다.

[표 10-3] 통일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5,079	15,363	1.9
남북경협인프라 구축 (경협기반 무상·유상)	4,992	4,995	0.1
민생협력지원	5,131	5,131	—
DMZ 평화적 이용	184	267	45.0
국내통일기반조성	96	100	4.5
통일정책추진	15	21	38.9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	32	순증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104	93	△10.1

#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11-1 재정지원 방향

2022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2.3조원으로 2021년도 22.3조원보다 0.1% 증가하였다. 2022년은 법률복지 사각지대 지원 및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 지속 투자하고, 재해예방, 국민 생활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하였다.

### ㉠ 법률복지 사각지대 및 재범방지를 통한 국민불안 해소

AI 법률구조 및 전자접수시스템 도입으로 미래혁신적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현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살인사건 등 연이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1:1 전자감독 강화, 전자감독 특사경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각종 인프라를 보강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 ㉡ 치안역량 강화 및 인권보호 강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예산 등을 확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학 수사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2023년 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경찰관 부대를 창설하고, 경찰관 및 경찰관서 방호인력 증원, 해안경계과학화 시설 등 의경대체 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한다.

한편 범죄 발생시 조사·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여비 지원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조서 작성, 여성·아동·외국인 전용 조사실 확충 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㉔ 재해예방 투자·국민 생활안전 투자 확대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복합화하는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지역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등 재해예방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사물인터넷·드론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3대 안전 분야(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에 중점 투자하여 국민안전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최일선 재난대응기관인 소방 및 해경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헬기 확충 및 대응장비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a)	2022년(b)	증감률((b-a)/a)
합 계	223,050	223,182	0.1
법원 및 헌재	21,788	21,763	△0.1
법무 및 검찰	42,246	43,847	3.8
경찰	123,723	126,461	2.2
해양경찰	15,779	17,107	8.4
재난관리	19,513	14,005	△28.2



## 11-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또 다른 분쟁해결수단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한다. 형사사건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공탁시스템 기능 개선을 지원한다.

☞ 조정제도 지원 : (2021년) 123억원 → (2022년) 122억원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 (2021년) 28억원 → (2022년) 39억원

대법원은 조정전담변호사를 증원하여((2021년)34명 → (2022년)44명) 조정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재판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공탁시스템을 개선(2022년 7억원, 순증)하여 형사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신청을 가능케 하여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자료(사진·필름)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자료의 보존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헌법재판연구활동을 통해 헌법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11-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21,788	21,763	Δ0.1	
대법원				
• 조정제도 지원	123	122	Δ1	• 조정전담변호사 확대
•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28	39	41.5	• 형사공탁 특례절차 신설에 따른 공탁시스템 개선
헌법재판소				
• 재판자료확충	4	4	Δ0.0	• 재판자료 전산화 추진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9	19	0.0	• 헌법재판연구활동 강화

## ㉔ 법무 및 검찰 부문

AI 법률구조 등 미래혁신적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현하고, 과밀수용 해소 등 수용자의 기본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자감독 인프라를 보강하여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

☞ 법률구조 : (2021년) 535억원 → (2022년) 624억원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 (2021년) 166억원 → (2022년) 255억원

☞ 전자감독 : (2021년) 222억원 → (2022년) 274억원

AI 법률구조 및 전자접수시스템 도입으로 미래혁신적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현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년 수용률 100% 수준을 목표로 유희부지 내 수용동 증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용자의 기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사장 현대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수용자 도주·자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등을 활용한 활력징후 감지시스템, 무소음 이동형 CCTV를 구축할 예정이다.

\* 과밀수용율 변화 : ('19) 113.4% → ('20) 110.8% → ('21) 106.7%

\* 과밀수용 해소 목표 : ('22) 106% → ('23) 103% → ('24) 100%

최근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살인사건 등 연이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1:1 전자감독 강화, 전자감독 특사경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각종 인프라를 보강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한다.

중대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전담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상근 진술조력인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하고, 첨단 IT 기술을 형사절차에 접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수사·재판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 사건 관계인의 형사절차 권리 강화를 포함한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표 11-3] 법무 및 검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42,246	43,847	3.8	
법률구조	535	624	16.6	AI 법률구조서비스,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등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797	1,061	33.2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리모델링 등
전자감독	222	274	23.6	전자감독 인프라 강화 등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4	30	108.5	위치확인장치 등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97	619	215.1	2차년도 구축비 등

## ㉞ 경찰 부문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물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고, 신종범죄 대응을 위해 관련 장비 및 교육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아동청소년 디지털범죄 위장수사비 지원 등 범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 ☞ 과학수사역량강화 : (2021년) 312억원 → (2022년) 349억원
- ☞ 사이버수사역량강화 : (2021년) 62억원 → (2022년) 83억원
- ☞ 인권피해자보호활동 : (2021년) 26억원 → (2022년) 35억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물량 증가 및 보관·등본 서류 등 증가로 수사기록 등본용 복사기 등 관련 인프라 시설 등을 지원하고, 수사팀 현장지원 장비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현장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스템·첨단 장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아동안전지킴이,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등 아동학대 방지 관련 인프라, 여성대상

범죄 대응, 학원 폭력 대응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파탐지기 등 신규장비 비용을 지원하고, 법개정으로 가능해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장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사권 확대, 신종 범죄증가, 피의자 인권 보호 요구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서 경찰관들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경찰역량 강화교육, 원격강의 시스템 구축 등 관련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2050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순찰차 등에 친환경차를 일부 도입할 예정이고, 경찰관들의 잦은 교대근무·야간근무·범죄대응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건강상 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해 마음동행센터, 특수건강검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표 11-4] 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123,723	126,461	2.2	
사이버수사	62	83	33.9	전문인력교육, 위장수사장비
과학수사	312	349	11.9	DNA감정장비 등 지원
여성청소년범죄	153	247	61.4	조사환경개선
인권피해자보호활동	26	35	34.6	피해자 교통편의, 전용공간
경찰복지증진	546	689	26.2	트라우마 상담, 특수건강검진
아동안전지킴이	540	645	19.4	아동안전활동비

## ㉔ 해양경찰 부문

빈틈없는 해양경비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도입 및 연안VTS 신규구축, 현장중심 필수예산을 확대 반영하였고, 안정적인 장비 가동을 위해 함정 및 항공기 정비비를 확대 지원한다.

- ☞ 항공기도입 : (2021년) 468억원 → (2022년) 573억원
- ☞ VTS 구축 운영 : (2021년) 299억원 → (2022년) 366억원
- ☞ 함정계획정비 : (2021년) 395억원 → (2022년) 406억원
- ☞ 항공기정비유지 : (2021년) 341억원 → (2022년) 365억원

서해해역 경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3,000톤 1척)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위해 해경의 노후된 헬기를 야간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신형 헬기로 대체할 계획이다.

원활한 경비함정 정비·운용을 위해 함정 정비비를 증액하여 지원하고 서부정비창 착공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엔진 충분해정비 시간 도래에 대비하여 엔진 정비비를 지원하는 등 해양경찰 장비의 가동률을 향상토록 할 계획이다.

사천경찰서 신규 설치에 따른 신설패키지 예산을 지원하고, 불법외국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유형별 단속 장비, 지능형 CCTV 등을 보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해안가 동굴·암벽 등 고위험상황 대응을 위한 구조대 안전장비(안전헬멧, 벨트, 방수통신기)를 보강하고 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신형 연안구조정 도입을 지원한다. 또한 선박의 안전통항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연안 VTS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11-5] 해양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비 고
본예산	15,779	17,107	8.4	
항공기도입	468	573	22.6	노후헬기 교체 등
경비대테러역량강화	92	97	5.4	경찰서 상황실 구축 등
VTS구축운영	299	366	22.3	연안 VTS 구축비
서부정비창	132	538	305.8	연차 건축비 반영
함정계획정비	395	406	2.9	함정정비비 상향
항공기정비유지	341	365	6.9	고정익항공기 수리 등

## ㉞ 재난관리 부문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등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확충 등 재해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 재해위험지역 등 정비 : (2021년) 5,915억원 → (2022년) 6,901억원

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재난통신망 기반 현장·영상정보 공유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현장·영상정보 공유 시스템 시범사업 : (2022년) 18억원(신규)

대형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훈련·장비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방정책 수립 등 소방정책 과학화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체력증진 등 보건안전사업에 지속 투자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차질없는 개원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 (2021년) 5억원 → (2022년) 71억원

☞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 (2022년) 39억원(신규)

☞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 (2021년) 14억원 → (2022년) 101억원

☞ 국립소방병원 건립 : (2021년) 32억원 → (2022년) 121억원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재해예방사업은 재난이 발생한 후 그 피해를 복구하는 재해복구사업과 비교해 투입 대비 편익이 4배 수준으로서 정책적·경제적 효과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험저수지·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우수저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해예방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986억원)

또한, 2021년 5월 국가재난통신망이 완공·개통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재난통신망 기반 현장·영상정보 공유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소방청·해경청 등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되며, 실시간 현장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성 강화 및 인명·재산피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대규모·상시화되는 재난 대응 훈련·장비 투자의 일환으로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진 발생 및 피해 유형에 따른 훈련시설(건물·도시 붕괴 대응, 유해물질 유출 대응, 터널·지하공간 붕괴 대응)을 권역별로 구축하는 한편,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비축기지 구축 및 차량·장비 비축을 지원한다.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 강화 및 지역간 교육훈련 격차 해소를 위하여 권역별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신규 39억원, 2개소)이다. 전국 소방공무원의 접근성·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既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 충청권 外 호남권(광주소방학교), 영남권(경북소방학교)에 VR 훈련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단위 재난 통합대응 인프라 보강을 위해 전국 31대 소방헬기에 대한 통합 운항관제실을 구축(신규 14억원)하는 한편, 국가 주요 항만 화재발생시 효율적 대응 및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해 500톤급 소방선박 2대(부산, 울산) 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전담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의 차질없는 개원을 위해 1년차 공사비(115억) 및 개원준비단 운영경비(신규 6억)를 지원하는 한편, 소방유물·역사 보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표 11-6]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19,513	14,005	△28.2	
재해위험지역 등 정비	5,915	6,901	16.7	재해위험지역 정비 6,20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695억원
재난통신망기반 복합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	10	순증	소방청·해경청 등 다부처 협업(총 18억원)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5	71	1,320	훈련시설·비축기지 공사, 비축장비 보강 등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	39	순증	VR훈련시스템 2개소
국립소방병원 건립	32	121	283	공사비, 개원준비단 운영비 등



#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12-1 재정지원 방향

2022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98.1조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에는 지방소멸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 선제적·맞춤형 대민서비스 지원, 책임있는 과거사 지원, 신산업 육성·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투자 등에 중점을 두었다.

### ㉔ 지방소멸 대응·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특별양여금(연 1조원, 10년간 총 10조원 수준 지원)을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핵심 생활인프라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지원하고, 접경·섬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지원, 지역주민간 소통협력공간 확대 등을 통해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한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여 지방교부세를 대폭 확충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지속한다.

### 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선제적·맞춤형 대민서비스 지원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서비스(카카오톡 등)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본격화, 보조금24 시스템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 ㉔ 과거사 정리·기념 지원 강화로 책임 있는 국가 구현

과거사 피해지원·진상조사·기념지원 등을 강화하여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한 사회통합 노력을 지속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여순사건 위원회 신설,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본격화에 맞춰 과거사 진상조사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민주인권기념관 등 각종 기념·추모시설의 차질없는 건립을 지원한다.

## ㉕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 및 안전한 선거환경 조성

차세대 의정지원서비스 구축, 디지털 정보안내게시판 설치, 국회박물관 및 국회부산 도서관 개관·운영 지원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 ㉖ 신산업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투자 확대

탄소중립 시대와 디지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뉴딜펀드, 기후대응기금 출자를 지원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을 신규로 출시하는 등 신산업 육성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표 12-1]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846,766	980,939	15.8
지방행정·재정지원	557,303	673,219	20.8
(교부세 제외시)	(39,757)	(22,659)	(△43.0)
재정·금융	229,893	237,996	3.5
입법 및 선거관리	11,009	15,870	44.2
정부자원관리	12,690	13,887	9.4
국정운영	6,438	6,587	2.3
일반행정	29,432	33,378	13.4

## 12-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㉔ 지방행정 · 재정지원 부문

지방소멸 대응 ·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 (2021년) 55조 7,303억원 → (2022년) 67조 3,219억원 (20.8% 증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핵심 생활인프라(주거 · 통신 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인 특별양여금을 '22년부터 연 1조원 수준으로 10년간 총 10조원 지원하고, ('22년 신규, 7,500억원)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조성 확대,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접경 ·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LPG 인프라 확충 등 지역발전 투자를 강화한다.

세수 증가로 인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2021년 51.8조원 → 2022년 65.1조원)하는 등 지방 자주재원을 대폭 강화하되, 한시적으로 증가한 지방채 인수지원은 정상화한다 (2021년 2.1조원 → 2022년 1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필요성과 단계적 정상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총 15조원의 발행량에 대해 할인판매비용의 4%를 지원한다.(2021년 1조 522억원 → 2022년 6,053억원)

[표 12-2] 지방행정 · 재정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557,303	673,219	20.8
보통교부세	445,377	551,042	9.7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	7,500	순증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	7	91	1,274.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522	6,053	△42.5

## ㉔ 재정·금융 부문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디지털·그린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재정·금융부문에 23조 7,996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1년) 22조 9,893억원 → (2022년) 23조 7,996억원 (3.5% 증가)

탄소중립 시대와 디지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연간 4조원 규모)을 위해 산업은행에 6,000억원을 계속 출자한다. 기후대응기금에 산업은행 넷제로 프로그램을 위해 신규로 1,300억원을 출자(프로그램 0.3조원, 총사업비 1.34조원) 확대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출자사업에 대해서도 2022년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뒷받침한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을 신규로 출시('22년 476억원)하고, 수출입은행의 해외 인프라 시장의 차질없는 수주지원을 위해 특별계정 2단계를 추진한다.(1단계('19~'21) 5,000억원 → 2단계('22~) 4,000억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신규, '22 96억)를 구축한다.

[표 12-3] 재정·금융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229,893	237,996	3.5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5,100	6,000	17.6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	1,300	순증
청년희망적금	—	476	순증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	96	순증

## 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 (2021년) 1조 1,009억원 → (2022년) 1조 5,870억원 (44.2% 증가)

차세대 의정지원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정보안내게시판을 확충하여 디지털·친환경 국회 구현을 도모한다. 전면 개편 후 재개관하는 국회박물관(22년 4월)과 완공 후 정식 개관하는 국회부산도서관('22년 2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2022년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변화하는 온라인 선거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선거범죄대응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해소를 위해 관외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등 법정 선거절차사무 강화를 통해 선거관리 신뢰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또한, 안정적인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4시간 재외선거상황실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외선거인의 안전한 투표참여를 위해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 대응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회송대책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한다.

[표 12-4]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1,009	15,870	44.2
대통령선거관리	171	2,662	1,460.8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	163	11,538.6
입법정보화(정보화)	238	310	30.3

## ㉔ 정부자원관리 부문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디지털역량을 제고한다.

☞ (2021년) 1조 2,690억원 → (2022년) 1조 3,887억원 (9.4%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디지털 수요 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자원관리 부문도 강화한다. 먼저 행정·공공기관에서 자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민간·공공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21~'25년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수립('21.7월) 하였고, '22년에는 '21년 최초 사업에 이어 본격 클라우드 전환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서비스(카카오톡 등)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강화한다. 알림·고지·납부 등의 처리가 가능한 완결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대화형 민원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민간과 협업하여 디지털 포용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행정서비스·정책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연계한 보조금24 시스템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며, 헌법 상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표 12-5]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2,690	13,887	9.4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통합구축	1,348	3,182	136.1
지능형서비스 구축 및 운영	60	89	49.4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134	152	13.8
온라인청원시스템구축	—	31	순증

## ㉔ 일반행정 부문

과거사 정리·기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국가를 구현하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 등을 지원한다.

☞ (2021년) 2조 9,432억원 → (2022년) 3조 3,378억원 (13.4% 증가)

과거사에 대한 피해지원·진상조사·기념지원등을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22년부터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1인당 9천만원 수준으로 지원(2022년 신규, 1,810억원)하는 한편, '여수·순천10·19위원회' 출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년차 활동 등 과거사 진상조사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민주인권기념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시설 등 기념시설의 차질없는 건립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주요 산업별 사업체에 대한 경영실태와 산업구조변화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청사 등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29,432	33,378	13.4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	—	1,810	순증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	43	순증
경제구조통계 작성	85	287	235.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204	327	60.0

#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 제1 장

2022년도 예산

### ▶ 제2 장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제 1 장

## 2022년도 예산

01. 2022년도 예산총칙
02. 일반회계
0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04. 계속비
05. 명시이월비
06. 국고채무 부담행위



# 2022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01 2022년도 예산총칙



■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421,416,033,950,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350,276,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7,345,798,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05,403,00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1,571,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337,769,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6,906,170,000,000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482,984,800,000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28,411,000,000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71,635,000,000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05,410,000,000원
⑫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766,543,000,000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3,675,000,000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2,876,000,000원
⑮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408,656,000,000원
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46,000,000원
⑰ 양곡관리특별회계	2,242,820,000,000원
⑱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25,907,000,000원
⑲ 조달특별회계	492,962,000,000원
⑳ 우편사업특별회계	4,644,795,000,000원
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408,148,000,000원

- 제2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2022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제5조 2022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 제6조 2022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 제8조 2022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 (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4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 제9조 2022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8,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67,5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0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1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에 한함),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18,114,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8,000,000,000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60,572,000,000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5,539,000,000원



-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773,419,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79,598,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2,255,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476,968,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718,114,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6,119,000,000원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2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960,006,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0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 2-1 세입예산(Revenue Budget)

####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2021년도 추경예산 FY 2021 Supplementary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내국세 (Internal Taxes)	239,564,700	62.9	270,184,200	63.7
2. 관세 (Customs Duties)	8,347,200	2.2	8,347,200	2.0
3.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690,300	4.1	15,690,300	3.7
4. 교육세 (Educational Tax)	5,306,600	1.4	5,306,600	1.3
5.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5,113,800	1.3	5,113,800	1.2
6.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106,828,270	28.0	119,799,160	28.2
• 국채발행 (Borrowing from Bonds)	93,513,725	24.6	103,976,302	24.5
• 기타수입 (Others)	13,314,545	3.5	15,822,858	3.7
합 계 (Total)	380,850,870	100.0	424,441,260	100.0

※ 일반회계 세입 규모임.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96,127,000	70.3	56,562,300	23.6	25,942,800	9.6
8,735,100	2.1	387,900	4.6	387,900	4.6
15,380,500	3.6	△309,800	△2.0	△309,800	△2.0
5,340,900	1.3	34,300	0.6	34,300	0.6
7,382,800	1.8	2,269,000	44.4	2,269,000	44.4
88,449,734	21.0	△18,378,536	△17.2	△31,349,426	△26.2
76,175,866	18.1	△17,337,859	△18.5	△27,800,436	△26.7
12,273,868	2.9	△1,040,677	△7.8	△3,548,990	△22.4
421,416,034	100.0	40,565,164	10.7	△3,025,226	△0.7

구 분 Classification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1. 국세 (Tax Total)	274,022,600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239,564,700
나. 관세 (Customs Duties)	8,347,2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690,3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5,306,600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5,113,800
2.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106,828,270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5,304,107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6,347,872
다. 재화및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838,740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88,316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112,253
바.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291
사. 세계잉여금 (Net Carry Over)	—
아.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93,936,691
(국채발행) (Government Bonds Floatation)	93,513,725
합계(Total)	380,850,87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1년도 추경예산 FY 2021 Supplementary Budget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304,642,100	332,966,300	58,943,700	21.5	28,324,200	9.3
270,184,200	296,127,000	56,562,300	23.6	25,942,800	9.6
8,347,200	8,735,100	387,900	4.6	387,900	4.6
15,690,300	15,380,500	△309,800	△2.0	△309,800	△2.0
5,306,600	5,340,900	34,300	0.6	34,300	0.6
5,113,800	7,382,800	2,269,000	44.4	2,269,000	44.4
119,799,160	88,449,734	△18,378,536	△17.2	△31,349,426	△26.2
6,119,994	5,094,951	△209,156	△3.9	△1,025,043	△16.7
6,347,872	5,685,125	△662,747	△10.4	△662,747	△10.4
838,740	796,514	△42,226	△5.0	△42,226	△5.0
288,316	249,392	△38,924	△13.5	△38,924	△13.5
112,253	121,338	9,085	8.1	9,085	8.1
291	298	7	2.4	7	2.4
1,692,426	—	—	—	△1,692,426	순감
104,399,268	76,502,116	△17,434,575	△18.6	△27,897,152	△26.7
103,976,302	76,175,866	△17,337,859	△18.5	△27,800,436	△26.7
424,441,260	421,416,034	40,565,164	10.7	△3,025,226	△0.7

## 나. 국세수입 내역 (Tax Revenues)

구 분 Classification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239,564,700
(1) 소득세 (Income Tax)	89,816,000
(가) 신고분 (Not Withheld Income Tax)	33,363,300
(나) 원천분 (Withheld Income Tax)	56,452,700
(2) 법인세 (Corporation Tax)	53,305,400
(3) 상속세 (Inheritance Tax)	9,099,900
(가) 상속세 (Inheritance Tax)	3,337,700
(나) 증여세 (Gift Tax)	5,762,200
(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66,653,100
(5) 개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10,065,500
(6) 증권거래세 (Security Transaction Tax)	5,086,100
(7) 인지세 (Stamp Tax)	946,700
(8) 기타내국세 (Other Internal Tax)	4,592,000
나. 관세 (Customs Duties)	8,347,2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690,3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5,306,600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5,113,800
합계(Total)	274,022,6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96,127,000	56,562,300	23.6
105,801,700	15,985,700	17.8
43,996,700	10,633,400	31.9
61,805,000	5,352,300	9.5
74,938,000	21,632,600	40.6
13,126,000	4,026,100	44.2
6,088,000	2,750,300	82.4
7,038,000	1,275,800	22.1
77,478,600	10,825,500	16.2
10,141,800	76,300	0.8
7,538,000	2,451,900	48.2
948,000	1,300	0.1
6,154,900	1,562,900	34.0
8,735,100	387,900	4.7
15,380,500	△309,800	△2.0
5,340,900	34,300	0.7
7,382,800	2,269,000	44.4
332,966,300	58,943,700	21.5

## 다. 소관별 세입예산(Revenues Budget by Agencies)

소 관 Agency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01.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243	—	—	243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80	—	—	80
03. 국회(National Assembly)	3,688	—	—	3,688
04. 대법원 (Supreme Court)	629,402	—	—	629,402
05.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41	—	—	41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1,537	—	—	1,537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6	—	—	6
08.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609	—	—	609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885	—	—	2,885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Prime Minister's Secretariat)	—	—	—	—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79,355,735	93,513,725	—	372,869,460
①내국세 (Internal Taxes)	239,564,700	—	—	239,564,700
②관세 (Customs Duties)	8,347,200	—	—	8,347,200
③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690,300	—	—	15,690,300
④교육세 (Educational Tax)	5,306,600	—	—	5,306,600
⑤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5,113,800	—	—	5,113,800
⑥세외수입 (Non-Tax Revenues)	5,333,135	93,513,725	—	98,846,860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41,418	—	—	241,418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30,259	—	—	330,259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8,194	—	—	198,194
1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2,820	—	—	2,820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1,930,623	—	—	1,930,623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43,948	—	—	243,948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59,339	—	—	59,339
19.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61,058	—	—	61,058
2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910	—	—	20,910
21.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9,234	—	—	209,234
22.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12,866	—	—	512,866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97	-	-	297	54	-	-	54
75	-	-	75	△5	-	-	△5
4,163	-	-	4,163	475	-	-	475
483,235	-	-	483,235	△146,167	-	-	△146,167
480	-	-	480	439	-	-	439
4,035	-	-	4,035	2,498	-	-	2,498
5	-	-	5	△1	-	-	△1
716	-	-	716	107	-	-	107
7,719	-	-	7,719	4,834	-	-	4,834
23	-	-	23	23	-	-	23
338,076,931	76,175,866	-	414,252,797	58,721,196	△17,337,859	-	41,383,337
296,127,000	-	-	296,127,000	56,562,300	-	-	56,562,300
8,735,100	-	-	8,735,100	387,900	-	-	387,900
15,380,500	-	-	15,380,500	△309,800	-	-	△309,800
5,340,900	-	-	5,340,900	34,300	-	-	34,300
7,382,800	-	-	7,382,800	2,269,000	-	-	2,269,000
5,110,631	76,175,866	-	81,286,497	△222,504	△17,337,859	-	△17,560,363
208,766	-	-	208,766	△32,652	-	-	△32,652
326,677	-	-	326,677	△3,582	-	-	△3,582
231,958	-	-	231,958	33,764	-	-	33,764
1,673	-	-	1,673	△1,147	-	-	△1,147
1,355,756	-	-	1,355,756	△574,867	-	-	△574,867
208,081	-	-	208,081	△35,867	-	-	△35,867
61,118	-	-	61,118	1,779	-	-	1,779
60,513	-	-	60,513	△545	-	-	△545
20,710	-	-	20,710	△200	-	-	△200
210,041	-	-	210,041	807	-	-	807
513,078	-	-	513,078	212	-	-	212

소 관 Agency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24.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85,961	—	—	85,961
25.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10,717	—	—	10,717
2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71,391	—	—	171,391
27.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47,662	—	—	47,662
28.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3,433	—	—	133,433
29.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8,820	—	—	8,820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68,328	—	—	68,328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2,052	—	—	32,052
33.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02	—	—	102
34.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35,250	—	—	35,250
35. 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402,718	—	—	402,718
36.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48,069	—	—	248,069
37. 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479	—	—	479
38. 원자력안전위원회(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1,677	—	—	1,677
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4,284	—	—	4,284
40.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693,957	—	—	693,957
41.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81,293	—	—	81,293
43. 통계청 (Statistics Korea)	3,637	—	—	3,637
44.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1,526	—	—	1,526
45.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452,879	—	—	452,879
46.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863,925	—	—	863,925
47.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2,840	—	—	2,840
48.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44,786	—	—	44,786
49.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9,515	—	—	9,515
50.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88,775	—	—	88,775
52.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568	—	—	2,568
53.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2,723	—	—	22,723
55.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5,214	—	—	5,214
56.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6,872	—	—	6,872
합계 (Total)	287,337,145	93,513,725	—	380,850,87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131,061	—	—	131,061	45,100	—	—	45,100
13,492	—	—	13,492	2,775	—	—	2,775
160,242	—	—	160,242	△11,149	—	—	△11,149
49,092	—	—	49,092	1,430	—	—	1,430
163,372	—	—	163,372	29,939	—	—	29,939
9,198	—	—	9,198	378	—	—	378
60,568	—	—	60,568	△7,760	—	—	△7,760
50,135	—	—	50,135	18,083	—	—	18,083
12	—	—	12	△90	—	—	△90
31,109	—	—	31,109	△4,141	—	—	△4,141
391,433	—	—	391,433	△11,285	—	—	△11,285
281,749	—	—	281,749	33,680	—	—	33,680
539	—	—	539	60	—	—	60
1,677	—	—	1,677	—	—	—	—
2,906	—	—	2,906	△1,378	—	—	△1,378
548,192	—	—	548,192	△145,765	—	—	△145,765
37,568	—	—	37,568	△43,725	—	—	△43,725
3,454	—	—	3,454	△183	—	—	△183
302	—	—	302	△1,224	—	—	△1,224
323,335	—	—	323,335	△129,544	—	—	△129,544
997,070	—	—	997,070	133,145	—	—	133,145
3,579	—	—	3,579	739	—	—	739
54,975	—	—	54,975	10,189	—	—	10,189
11,662	—	—	11,662	2,147	—	—	2,147
94,132	—	—	94,132	5,357	—	—	5,357
5,579	—	—	5,579	3,011	—	—	3,011
21,419	—	—	21,419	△1,304	—	—	△1,304
7,837	—	—	7,837	2,623	—	—	2,623
5,244	—	—	5,244	△1,628	—	—	△1,628
345,240,168	76,175,866	—	421,416,034	57,903,023	△17,337,859	—	40,565,164

## 라. 성질별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by Objects)

구분 Classification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11.재산수입 (Property Income)	5,304,107
51.관유물대여료 (Rent From Land & Buildings)	77,640
52.정부출자수입 (Dividends & Profits)	822,239
53.전대차관이자수입 (Interest from Tied Loans)	1
54.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Others)	4,404,227
12.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6,347,872
56.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Fine & Confiscation)	3,395,379
57.변상금 및 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296,190
58.가산금 (Penalties to Delinquency)	607,225
59.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2,049,078
13.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838,740
62.병원수입 (Hospital Income)	13,047
64.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5,620
65.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737,828
66.입학금 및 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766
67.항공항만및용수수입 (Revenues from airport, Harbors & Water)	6,737
68.실습수입 (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4,360
69.잡수입 (Other)	70,382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증 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율(%) Rate
5,094,951	△209,156	△3.9
78,688	1,048	1.3
858,200	35,961	4.4
1	—	—
4,158,062	△246,165	△5.6
5,685,125	△662,747	△10.4
2,919,971	△475,408	△14.0
214,236	△81,954	△27.7
459,778	△147,447	△24.3
2,091,140	42,062	2.1
796,514	△42,226	△5.0
14,254	1,207	9.3
5,117	△503	△9.0
701,238	△36,590	△5.0
871	105	13.7
8,530	1,793	26.6
2,976	△1,384	△31.7
63,528	△6,854	△9.7

구분 Classification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14.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88,316
64.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1,500
65.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245,689
66.입학금 및 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325
69.잡수입 (Other)	30,802
15.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112,253
71.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Capital Assets)	7,582
72.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62,766
73.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41,905
20.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291
75.융자원금회수 (Collection of Principals A/C' s)	234
77.전대차관원금회수 (Collection of Counterpart Sub-Loan)	57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93,936,691
91.전입금 (Transfer from Gen. A/C)	422,966
94.예수금 (Collection of Trust Fund)	93,513,725
합 계 (Total)	106,828,27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증 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율(%) Rate
249,392	△38,924	△13.5
15,468	3,968	34.5
204,971	△40,718	△16.6
371	46	14.2
28,582	△2,220	△7.2
121,338	9,085	8.1
8,332	750	9.9
67,838	5,072	8.1
45,168	3,263	7.8
298	7	2.4
241	7	3
57	—	—
76,502,116	△17,434,575	△18.6
326,250	△96,716	△22.9
76,175,866	△17,337,859	△18.5
88,449,734	△18,378,536	△17.2

## 2-2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 가. 총괄표

구분 Classification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77,475,659	20.3
2.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21,221,199	5.6
3.통일 · 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3,098,422	0.8
4.국방 (National Defense)	53,084,447	13.9
5.교육 (Education)	70,527,147	18.5
6.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3,950,646	1.0
7.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5,524,884	1.5
8.사회복지 (Social Welfare)	68,482,029	18.0
9.보건 (Health)	11,475,812	3.0
10.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10,088,381	2.6
11.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13,830,594	3.6
12.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18,021,647	4.7
13.통신 (Communication)	584,372	0.2
14.국토및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7,395,568	1.9
15.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7,490,063	2.0
16.예비비 (Reserve Fund)	8,600,000	2.3
합 계 (Total)	380,850,870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1년도 추경예산 FY 2021 Supplementary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94,741,694	22.3	93,296,346	22.1	15,820,687	20.4	△1,445,348	△1.5
21,225,366	5.0	21,260,098	5.0	38,899	0.2	34,732	0.2
3,098,422	0.7	3,239,671	0.8	141,249	4.6	141,249	4.6
52,521,509	12.4	54,884,158	13.0	1,799,711	3.4	2,362,649	4.5
77,087,114	18.2	83,451,942	19.8	12,924,795	18.3	6,364,828	8.3
4,120,396	1.0	4,277,435	1.0	326,789	8.3	157,039	3.8
5,501,806	1.3	5,983,127	1.4	458,243	8.3	481,321	8.7
71,739,950	16.9	74,218,964	17.6	5,736,935	8.4	2,479,014	3.5
19,553,599	4.6	19,263,861	4.6	7,788,049	67.9	△289,738	△1.5
7,132,530	1.7	9,333,396	2.2	△754,985	△7.5	2,200,866	30.9
24,362,434	5.7	15,108,372	3.6	1,277,778	9.2	△9,254,062	△38.0
18,131,087	4.3	17,068,371	4.1	△953,276	△5.3	△1,062,716	△5.9
595,172	0.1	1,036,720	0.2	452,348	77.4	441,548	74.2
7,425,568	1.7	7,291,985	1.7	△103,583	△1.4	△133,583	△1.8
7,504,613	1.8	7,801,588	1.9	311,525	4.2	296,975	4.0
9,700,000	2.3	3,900,000	0.9	△4,700,000	△54.7	△5,800,000	△59.8
424,441,260	100.0	421,416,034	100.0	40,565,164	10.7	△3,025,226	△0.7

## 나. 소관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구 분 Classification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01.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97,607
02.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92,687
03.국회 (National Assembly)	705,318
04.대법원 (Supreme Court)	1,718,024
05.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52,602
06.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385,228
0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32,918
08.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35,833
09.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746,000
10.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Prime Minister's Secretariat)	629,518
11.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5,165,416
• 예비비 (Contingency)	8,600,000
• 일반경비 (General Adm.)	16,565,416
12.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70,429,061
13.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7,763,860
14.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736,149
15.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329,355
16.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3,989,341
17.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35,843,659
18.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56,746,184
19.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886,127
20.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6,766,184
21.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6,623,321
22.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5,634,493
23.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6,188,223
24.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7,529,928
25.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547,738
26.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2,967,343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95,570	△2,037	△2.1
96,996	4,309	4.6
703,841	△1,477	△0.2
1,717,789	△235	△0.0
53,145	543	1.0
872,594	487,366	126.5
34,025	1,107	3.4
136,307	474	0.3
831,200	85,200	11.4
643,929	14,411	2.3
22,794,029	△2,371,387	△9.4
3,900,000	△4,700,000	△54.7
18,894,029	2,328,613	14.1
83,362,762	12,933,701	18.4
8,488,545	724,685	9.3
2,874,765	138,616	5.1
330,881	1,526	0.5
4,119,284	129,943	3.3
37,919,476	2,075,817	5.8
69,513,672	12,767,488	22.5
3,151,148	265,021	9.2
5,794,324	△971,860	△14.4
6,384,130	△239,191	△3.6
62,106,250	6,471,757	11.6
6,646,280	458,057	7.4
8,070,898	540,970	7.2
634,651	86,913	15.9
22,442,352	△524,991	△2.3

구 분 Classification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27.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438,440
28.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090,786
29.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5,663,279
30.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3,772,408
31.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40,737
32.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604,550
33.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37,931
34.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52,068
35.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146,291
36.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705,172
37.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90,835
38.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155,091
39.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36,842
40.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1,867,962
41.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596,201
43.통계청 (Statistics Korea)	415,297
44.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44,368
45.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6,996,420
46.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11,926,699
47.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220,761
48.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002,613
49.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976,019
50.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1,938,911
52.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378,868
53.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425,659
5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431,680
55.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296,227
56.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1,540,669
57.기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Humidifier Disinfectants & 4.16 Sewol Ferry Disasters)	5,782
58.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	10,187
59.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6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합계 (Total)	380,850,87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737,654	299,214	8.7
8,689,816	1,599,030	22.6
5,724,036	60,757	1.1
4,278,108	505,700	13.4
43,194	2,457	6.0
657,910	53,360	8.8
39,336	1,405	3.7
50,758	△1,310	△2.5
157,526	11,235	7.7
3,400,006	△305,166	△8.2
93,288	2,453	2.7
156,098	1,007	0.6
50,197	13,355	36.2
1,933,000	65,038	3.5
614,134	17,933	3.0
379,823	△35,474	△8.5
272,952	28,584	11.7
16,691,730	△304,690	△1.8
12,238,062	311,363	2.6
242,563	21,802	9.9
1,044,004	41,391	4.1
1,068,872	92,853	9.5
1,986,099	47,188	2.4
5,209,294	4,830,426	1,275.0
452,737	27,078	6.4
391,722	△39,958	△9.3
248,543	△47,684	△16.1
1,685,687	145,018	9.4
12,529	6,747	116.7
13,739	3,552	34.9
13,777	13,777	순증
19,999	19,999	순증
421,416,034	40,565,164	10.7

## 다. 기능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기 능 Function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77,475,659	20.3
1) 입법및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1,090,546	0.3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631,915	0.2
3) 지방행정·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53,067,422	13.9
4) 재정·금융 (Budget & Finance)	18,783,857	4.9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1,269,036	0.3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2,632,883	0.7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21,221,199	5.6
1) 법원및헌재 (Law Court & Constitutional Court)	1,770,626	0.5
2) 법무및검찰 (Justice & Prosecution)	3,989,341	1.0
3) 경찰 (Police)	11,989,057	3.1
4) 해경 (Maritime Police)	1,525,681	0.4
5)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1,946,494	0.5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3,098,422	0.8
1) 통일 (National Unification)	362,273	0.1
2) 외교·통상 (Foreign Affairs & Trade)	2,736,149	0.7
4. 국방 (National Defense)	53,084,447	13.9
1)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20,587,231	5.4
2) 전력유지 (Maintenance of Military Force)	15,256,428	4.0
3) 방위력개선 (National Defense Improvement)	16,996,420	4.5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244,368	0.1
5. 교육 (Education)	70,527,147	18.5
1) 유아및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58,428,301	15.3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11,412,441	3.0
3) 평생·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548,403	0.1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138,002	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93,296,346	22.1	15,820,688	20.4
1,576,435	0.4	485,889	44.6
646,729	0.2	14,814	2.3
66,097,403	15.7	13,029,981	24.6
20,642,194	4.9	1,858,338	9.9
1,388,722	0.3	119,686	9.4
2,944,863	0.7	311,980	11.8
21,260,098	5.0	38,899	0.2
1,770,934	0.4	308	0.0
4,139,283	1.0	149,942	3.8
12,305,145	2.9	316,088	2.6
1,664,234	0.4	138,553	9.1
1,380,502	0.3	△565,992	△29.1
3,239,671	0.8	141,249	4.6
364,906	0.1	2,633	0.7
2,874,765	0.7	138,616	5.1
54,884,158	13.0	1,799,711	3.4
21,784,266	5.2	1,197,035	5.8
16,135,210	3.8	878,782	5.8
16,691,730	4.0	△304,690	△1.8
272,952	0.1	28,584	11.7
83,451,942	19.8	12,924,795	18.3
70,554,438	16.7	12,126,137	20.8
12,191,955	2.9	779,514	6.8
566,187	0.1	17,784	3.2
139,362	0.0	1,360	1.0

기 능 Function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3,950,646	1.0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2,642,462	0.7
2) 관광 (Tourism)	8,629	0.0
3) 체육 (Sports)	3,128	0.0
4)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1,002,613	0.3
5) 문화 및 관광일반 (General Culture & Tourism)	293,814	0.1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5,524,884	1.5
1)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175,841	0.0
2) 환경일반 (General Environment)	5,349,043	1.4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68,482,029	18.0
1) 기초생활보장 (Basic Livelihood Guarantee)	15,324,343	4.0
2) 취약계층지원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3,972,988	1.0
3) 공적연금 (Public Pension)	3,578,641	0.9
4) 보훈 (Patriots & Veterans Affairs)	5,663,279	1.5
5) 주택 (Housing)	3,704,694	1.0
6) 사회복지일반 (General Social Welfare)	1,007,059	0.3
7) 아동 · 보육 (Children and Child Care Centers)	8,514,066	2.2
8) 노인 (Senior)	18,639,293	4.9
9) 여성 · 가족 · 청소년 (Women, Family, and Youth)	547,738	0.1
10) 고용 (Employment)	6,855,547	1.8
11) 노동 (Labor)	125,360	0.0
12) 고용노동일반 (Employment and Labor (General))	549,021	0.1
9. 보건 (Health)	11,475,812	3.0
1) 보건의료 (Healthcare)	2,019,069	0.5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8,852,193	2.3
3) 식품의약품안전 (Food & Drug Safety)	604,550	0.2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10,088,381	2.6
1) 농업 · 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7,742,203	2.0
2) 임업 · 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938,911	0.5
3) 수산 · 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407,267	0.1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4,277,435	1.0	326,789	8.3
2,914,370	0.7	271,908	10.3
9,212	0.0	583	6.8
3,003	0.0	△125	△4.0
1,044,004	0.2	41,391	4.1
306,846	0.1	13,032	4.4
5,983,127	1.4	458,243	8.3
227,409	0.1	51,568	29.3
5,755,718	1.4	406,675	7.6
74,218,964	17.6	5,736,935	8.4
16,763,782	4.0	1,439,439	9.4
4,348,715	1.0	375,727	9.5
4,111,149	1.0	532,508	14.9
5,724,036	1.4	60,757	1.1
4,462,486	1.1	757,792	20.5
697,007	0.2	△310,052	△30.8
9,161,096	2.2	647,030	7.6
20,245,144	4.8	1,605,851	8.6
634,651	0.2	86,913	15.9
7,344,757	1.7	489,210	7.1
135,010	0.0	9,650	7.7
591,131	0.1	42,110	7.7
19,263,861	4.6	7,788,049	67.9
8,496,703	2.0	6,477,634	320.8
10,109,249	2.4	1,257,056	14.2
657,910	0.2	53,360	8.8
9,333,396	2.2	△754,985	△7.5
6,863,196	1.6	△879,007	△11.4
1,986,099	0.5	47,188	2.4
484,101	0.1	76,834	18.9

기 능 Function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1.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13,830,594	3.6
1) 산업금융지원 (Support for Industry Finance)	36,500	0.0
2) 무역및투자유치 (Trade & Investment Inducement)	1,115,320	0.3
3) 에너지및자원개발 (Development of Energy & Resources)	—	—
4) 산업 · 중소기업일반 (General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3,147,835	0.8
5) 산업혁신지원 (Support for Industrial Innovation)	5,616,864	1.5
6) 창업및벤처 (Start-up and Venture)	973,147	0.3
7)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pport )	2,940,928	0.8
12.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18,021,647	4.7
1) 도로 (National Road)	5,949,521	1.6
2) 철도 (Railroad)	8,082,651	2.1
3) 해운 · 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1,828,237	0.5
4) 항공 · 공항 (Aviation & Airport)	24,591	0.0
5) 물류 등 기타 (Distribution & Others)	2,136,647	0.6
13. 통신 (Communication)	584,372	0.2
1) 방송통신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232,079	0.1
2) 정보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352,293	0.1
14. 국토및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7,395,568	1.9
1) 수자원 (Water Resources)	1,651,732	0.4
2) 지역및도시 (Region & City)	5,624,451	1.5
3)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119,385	0.0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7,490,063	2.0
1) 과학기술연구지원 (Support for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3,412,625	0.9
2) 과학기술일반 (General Science & Technology)	602,017	0.2
3) 과학기술인력및문화 (Science and Technology - Human Resources and Culture)	161,453	0.0
4) 과학기술연구개발 (Science and Technology - Research Development)	3,313,968	0.9
16. 예비비 (Reserve Fund)	8,600,000	2.3
1) 예비비 (Reserve Fund)	8,600,000	2.3
합계 (Total)	380,850,870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5,108,372	3.6	1,277,778	9.2
—	—	△36,500	순감
872,707	0.2	△242,613	△21.8
2,325	0.0	2,325	순증
5,366,533	1.3	2,218,698	70.5
5,568,258	1.3	△48,606	△0.9
781,347	0.2	△191,800	△19.7
2,517,202	0.6	△423,726	△14.4
17,068,371	4.1	△953,276	△5.3
3,885,118	0.9	△2,064,403	△34.7
8,715,557	2.1	632,906	7.8
1,914,097	0.5	85,860	4.7
362,155	0.1	337,564	1,372.7
2,191,444	0.5	54,797	2.6
1,036,720	0.2	452,348	77.4
234,624	0.1	2,545	1.1
802,096	0.2	449,803	127.7
7,291,985	1.7	△103,583	△1.4
1,605,480	0.4	△46,252	△2.8
5,570,568	1.3	△53,883	△1.0
115,937	0.0	△3,448	△2.9
7,801,588	1.9	311,525	4.2
3,392,229	0.8	△20,396	△0.6
632,962	0.2	30,945	5.1
194,895	0.0	33,442	20.7
3,581,502	0.8	267,534	8.1
3,900,000	0.9	△4,700,000	△54.7
3,900,000	0.9	△4,700,000	△54.7
421,416,034	100.0	40,565,164	10.7

## 라. 성질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s)

구 분 Classification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9,510,935
11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9,510,935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22,953,353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7,596,531
220 여비 (Travel Expenses)	585,590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237,888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170,326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1,019,660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2,597,357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746,000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219,177,309
310 보전금 (Compensation)	16,658,318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 Sector)	13,467,027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156,706,628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1,761,000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s)	12,839,798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17,744,538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24,535,411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211,872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7,415,185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14,658,960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66,232
460 출자금 (Investment)	2,162,653
490 지분취득비 (Share of Assets)	20,509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10,962,656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10,962,656
600 전출금등 (Transfers)	55,109,052
610 전출금등 (Transfers and Others)	55,109,052
70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8,602,154
710 예비비및기타 (Reserve Fund and Others)	8,602,154
합계 (Total)	380,850,87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2년도 예산 FY 202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40,877,987	1,367,052	3.5
40,877,987	1,367,052	3.5
27,700,285	4,746,933	20.7
22,265,898	4,669,367	26.5
575,154	△10,436	△1.8
239,159	1,271	0.5
168,054	△2,272	△1.3
1,040,523	20,863	2.0
2,580,297	△17,060	△0.7
831,200	85,200	11.4
254,983,697	35,806,387	16.3
21,745,921	5,087,603	30.5
12,850,102	△616,925	△4.6
185,001,088	28,294,459	18.1
1,778,939	17,939	1.0
14,095,931	1,256,133	9.8
19,511,716	1,767,178	10.0
22,735,372	△1,800,039	△7.3
233,221	21,349	10.1
7,876,429	461,244	6.2
12,985,104	△1,673,857	△11.4
37,881	△28,350	△42.8
1,558,500	△604,153	△27.9
44,237	23,728	115.7
12,274,082	1,311,426	12.0
12,274,082	1,311,426	12.0
58,942,456	3,833,404	7.0
58,942,456	3,833,404	7.0
3,902,156	△4,699,999	△54.6
3,902,156	△4,699,999	△54.6
421,416,034	40,565,164	10.7

## 마. 2022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					
	계 Total	보수(110-01) Wages	기타직보수(110-02)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상용임금(110-03) Wages for Fixed-Term Contract Employees	일용임금(110-04) Wage for Daily Employees	연가보상비(110-05)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s
1. 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3,669,686	3,243,141	73,200	238,424	85,436	29,486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4,371,841	13,740,393	157,094	350,932	5,312	118,110
3. 통일 · 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630,395	421,860	2,896	201,024	3,183	1,432
4. 국방 (National Defense)	16,187,626	15,676,206	20,416	298,258	4,396	188,350
5. 교육 (Education)	2,134,444	1,955,066	1,353	171,211	995	5,819
6.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506,922	288,078	13,959	198,225	4,175	2,485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165	—	—	165	—	—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947,037	674,360	119,319	129,979	16,786	6,592
9. 보건 (Health)	366,158	235,389	5,386	78,440	44,708	2,235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921,486	649,893	66,123	151,993	47,559	5,918
11.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251,128	224,974	12,799	11,434	65	1,855
12.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526,669	451,048	55,894	15,351	336	4,040
13. 통신 (Communication)	102,426	91,698	7,186	2,538	103	901
14. 국토및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41,343	32,914	296	7,814	4	315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220,660	187,143	7,082	24,663	70	1,702
16. 예비비 (Reserve Fund)	—	—	—	—	—	—
합계 (Total)	40,877,987	37,872,162	543,003	1,880,454	213,127	369,24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물건비(200) Goods Service	이전지출(300) Current Transfer	자산취득(400) Asset Acquisition	상환지출(500) Repayment of Loans	전출금등(600) Transfers	예비비및기타(700) Contingency & Others	합 계 Total
3,175,609	68,572,053	1,145,577	12,273,385	4,458,286	1,750	93,296,346
3,567,546	1,989,011	1,201,097	—	130,298	305	21,260,098
577,327	1,847,348	84,601	—	100,000	—	3,239,671
13,345,919	5,960,992	16,154,966	—	3,234,654	—	54,884,158
454,776	75,311,313	909,883	697	4,640,828	—	83,451,942
615,412	2,454,653	520,179	—	180,257	13	4,277,435
20,289	134,858	72,096	—	5,755,718	—	5,983,127
557,647	62,786,116	119,621	—	9,808,464	80	74,218,964
3,632,464	14,794,118	152,437	—	318,684	—	19,263,861
674,554	1,400,360	598,642	—	5,738,347	7	9,333,396
151,844	7,177,435	33,413	—	7,494,552	1	15,108,372
346,019	3,717,462	261,276	—	12,216,945	—	17,068,371
66,216	652,273	7,751	—	208,055	—	1,036,720
281,551	979,363	1,389,996	—	4,599,732	—	7,291,985
233,113	7,206,341	83,838	—	57,636	—	7,801,588
—	—	—	—	—	3,900,000	3,900,000
27,700,285	254,983,697	22,735,372	12,274,082	58,942,456	3,902,156	421,416,034

## 바. 2022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669,686	14,371,841	630,395	16,187,626	2,134,444	506,922
110 보수 (Wages)	3,243,141	13,740,393	421,860	15,676,206	1,955,066	288,078
110 기타직보수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73,200	157,094	2,896	20,416	1,353	13,959
110 상용임금 (Wages for fixed-term employees)	238,424	350,932	201,024	298,258	171,211	198,225
110 일용임금 (Daily wages)	85,436	5,312	3,183	4,396	995	4,175
110 연가보상비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	29,486	118,110	1,432	188,350	5,819	2,485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3,175,609	3,567,546	577,327	13,345,919	454,776	615,412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763,663	2,401,689	479,789	11,536,280	402,030	524,598
220 여비 (Travel Expenses)	168,114	100,123	50,429	154,151	5,909	14,641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22,302	97,256	2,461	113,417	—	—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48,008	32,763	17,759	47,630	1,216	2,866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128,706	813,239	2,203	43,829	21,788	2,613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213,615	122,475	24,686	1,450,612	23,834	70,693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831,200	—	—	—	—	—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68,572,053	1,989,011	1,847,348	5,960,992	75,311,313	2,454,653
310 보전금 (Compensation)	383,976	209,735	40,821	778,440	95,149	16,918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 Sector)	424,043	432,013	276,878	547,414	377,928	1,512,306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환 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 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 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 계 Total
165	947,037	366,158	921,486	251,128	526,669	102,426	41,343	220,660	—	40,877,987
—	674,360	235,389	649,893	224,974	451,048	91,698	32,914	187,143	—	37,872,162
—	119,319	5,386	66,123	12,799	55,894	7,186	296	7,082	—	543,003
165	129,979	78,440	151,993	11,434	15,351	2,538	7,814	24,663	—	1,880,454
—	16,786	44,708	47,559	65	336	103	4	70	—	213,127
—	6,592	2,235	5,918	1,855	4,040	901	315	1,702	—	369,240
20,289	557,647	3,632,464	674,554	151,844	346,019	66,216	281,551	233,113	—	27,700,285
5,655	450,261	3,461,602	573,931	113,218	193,798	54,142	121,338	183,905	—	22,265,898
239	16,630	11,243	20,598	11,949	11,813	2,808	1,882	4,624	—	575,154
—	—	—	—	—	—	3,281	—	442	—	239,159
25	5,752	1,239	2,396	3,270	2,299	631	545	1,654	—	168,054
476	13,296	2,041	3,824	2,345	2,999	885	364	1,917	—	1,040,523
13,895	71,708	156,338	73,805	21,063	135,110	4,469	157,423	40,570	—	2,580,297
—	—	—	—	—	—	—	—	—	—	831,200
134,858	62,786,116	14,794,118	1,400,360	7,177,435	3,717,462	652,273	979,363	7,206,341	—	254,983,697
1,910	9,922,545	10,287,335	7,830	883	197	31	5	146	—	21,745,921
71,950	3,132,946	2,278,198	419,148	2,041,305	817,813	20,371	453,406	44,382	—	12,850,102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65,279,505	999,671	19,553	105,267	66,534,254	702,725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244,287	8,016	537,184	656,192	85,184	8,038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s)	1,698,466	144,739	972,912	—	5,991,093	30,000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541,775	194,837	—	3,873,679	2,227,705	184,666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1,145,577	1,201,097	84,601	16,154,966	909,883	520,179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2,411	11,525	1,948	75,710	5,130	10,943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155,104	444,346	40,996	4,696,155	757,873	245,961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291,959	734,446	40,462	11,381,827	136,410	123,171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6,695	10,780	1,195	1,273	470	1,304
460 출자금 (Investment)	675,000	—	—	—	10,000	138,800
490 지분취득비 (Share of Assets)	14,408	—	—	—	—	—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12,273,385	—	—	—	697	—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12,273,385	—	—	—	697	—
600 전출금등 (Transfers)	4,458,286	130,298	100,000	3,234,654	4,640,828	180,257
610 전출금등 (Transfers and Others)	4,458,286	130,298	100,000	3,234,654	4,640,828	180,257
70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1,750	305	—	—	—	13
710 예비비및기타 (Reserve Fund and Others)	1,750	305	—	—	—	13
합계 (Total)	93,296,346	21,260,098	3,239,671	54,884,158	83,451,942	4,277,435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 계 Total
28,706	48,754,740	1,372,836	529,964	56,835	133,645	—	470,186	13,201	—	185,001,088
2,075	41,758	28,032	135,819	3,491	7,415	4,381	5,850	11,217	—	1,778,939
30,217	928,980	92,423	36,174	1,741,736	2,074,698	221,387	34,576	98,529	—	14,095,931
—	5,147	735,295	271,425	3,333,185	683,694	406,102	15,340	7,038,866	—	19,511,716
72,096	119,621	152,437	598,642	33,413	261,276	7,751	1,389,996	83,838	—	22,735,372
—	867	8,839	46,929	—	—	—	68,849	70	—	233,221
55,944	85,712	36,272	446,898	24,301	85,147	1,794	748,768	51,159	—	7,876,429
16,152	28,598	54,353	82,703	7,012	45,245	5,654	5,350	31,761	—	12,985,104
—	4,444	2,974	2,112	2,100	3,384	302	—	848	—	37,881
—	—	50,000	20,000	—	127,500	—	537,200	—	—	1,558,500
—	—	—	—	—	—	—	29,829	—	—	44,237
—	—	—	—	—	—	—	—	—	—	12,274,082
—	—	—	—	—	—	—	—	—	—	12,274,082
5,755,718	9,808,464	318,684	5,738,347	7,494,552	12,216,945	208,055	4,599,732	57,636	—	58,942,456
5,755,718	9,808,464	318,684	5,738,347	7,494,552	12,216,945	208,055	4,599,732	57,636	—	58,942,456
—	80	—	7	1	—	—	—	—	3,900,000	3,902,156
—	80	—	7	1	—	—	—	—	3,900,000	3,902,156
5,983,127	74,218,964	19,263,861	9,333,396	15,108,372	17,068,371	1,036,720	7,291,985	7,801,588	3,900,000	421,416,034

# 0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 Special Accounts



회 계 별 Account	2021년도 본예산 FY 2021 Main Budget
(15) 농어촌구조개선 (Agriculture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A)	12,122,279
(17) 교통시설 (Transportation Facilities S/A)	21,343,003
(18) 등기 (Registration S/A)	358,792
(20) 교도작업 (Prison Labor S/A)	138,372
(24) 에너지및자원사업 (Energy & Resources Project Management S/A)	5,530,827
(25) 환경개선 (Environment Improvement S/A)	7,443,535
(26)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S/A)	2,554,124
(29) 우체국보험 (Postal Insurance Service S/A)	1,007,268
(34) 주한미군기지이전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of U.S. Armed Forces in Korea S/A)	739,754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Construction of Administrative City S/A)	436,102
(36) 국방 · 군사시설이전(Reloc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 S/A)	1,005,714
(37) 혁신도시건설 (Construction of Innovative City S/A)	371,248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Construction of Cultural Hub City of Asia S/A)	144,273
(39) 국가균형발전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A)	10,623,021
(40) 유아교육지원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S/A)	3,916,771
(51) 양곡관리 (Grain Management S/A)	2,057,333
(52) 책임운영기관 (Agency)	1,068,589
(56) 조달 (Public Procurement S/A)	464,271
(57) 우편사업 (Postal Business S/A)	4,537,203
(58) 우체국예금 (Postal Office deposit S/A)	3,166,733
총계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79,029,212
순계(회계간,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72,663,212
순계(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76,797,366
순계(일반지출)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60,198,116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2021년도 추경예산 FY 2021 Supplementary	2022년도 예산 FY 2022Budget	본예산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대비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율(%) Rate	금액 Amount	증감율(%) Rate
15,371,111	13,350,276	1,227,997	10.1	△2,020,835	△13.1
21,115,602	17,345,798	△3,997,205	△18.7	△3,769,804	△17.9
358,792	305,403	△53,389	△14.9	△53,389	△14.9
138,372	121,571	△16,801	△12.1	△16,801	△12.1
5,625,422	5,337,769	△193,058	△3.5	△287,653	△5.1
7,548,495	6,906,170	△537,365	△7.2	△642,325	△8.5
2,554,124	2,482,985	△71,139	△2.8	△71,139	△2.8
1,007,268	1,028,411	21,143	2.1	21,143	2.1
739,754	771,635	31,881	4.3	31,881	4.3
436,102	405,410	△30,692	△7.0	△30,692	△7.0
1,005,714	766,543	△239,171	△23.8	△239,171	△23.8
371,248	43,675	△327,573	△88.2	△327,573	△88.2
144,273	142,876	△1,397	△1.0	△1,397	△1.0
10,653,021	11,408,656	785,635	7.4	755,635	7.1
3,916,771	3,829,046	△87,725	△2.2	△87,725	△2.2
2,057,333	2,242,820	185,487	9.0	185,487	9.0
1,068,589	1,225,907	157,318	14.7	157,318	14.7
464,271	492,962	28,691	6.2	28,691	6.2
4,537,203	4,644,795	107,592	2.4	107,592	2.4
3,166,733	3,408,148	241,415	7.6	241,415	7.6
82,280,198	76,260,856	△2,768,357	△3.5	△6,019,343	△7.3
72,812,667	69,010,401	△3,652,811	△5.0	△3,802,266	△5.2
76,946,821	73,001,777	△3,795,589	△4.9	△3,945,044	△5.1
60,892,314	62,798,277	2,600,161	4.3	1,905,963	3.1

# 04 계속비

## Multiyear Expenses



회 계 (소 관)	사 업 별	계속비총액	계 속 비 연 부 액			
			2013	2014	2015	2016
	2021 예 산	2,483,266,000	37,369,000	229,956,000	540,943,000	508,411,000
	2022 예 산	-	-	-	-	-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1.지역간선국도8차건설					
	2021 예 산	1,579,152,000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23,011,000
	2022 예 산	-	-	-	-	-
	2.익산-대야복선전철					
	2021 예 산	400,476,000	-	-	93,000,000	79,000,000
	2022 예 산	-	-	-	-	-
	3.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2021 예 산	503,638,000	-	-	145,400,000	106,400,000
	2022 예 산	-	-	-	-	-

(단위 :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05,852,000	243,651,000	215,752,000	96,540,000	104,792,000	-
-	-	-	-	-	-
320,852,000	221,351,000	100,752,000	21,940,000	21,378,000	-
-	-	-	-	-	-
80,000,000	14,500,000	68,400,000	36,000,000	29,576,000	-
-	-	-	-	-	-
105,000,000	7,800,000	46,600,000	38,600,000	53,838,000	-
-	-	-	-	-	-

# 05 명시이월비

##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단위 :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	-	-



## 06

## 국고채무 부담행위

##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단위 :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	-	-

#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제2장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01. 기금요약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03. 기금수입
04. 기금지출



# 2022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01 기금요약

## Summary of Funds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li> <li>-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li> <li>-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li> <li>-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li> <li>-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li> </ul>
계정성기금 Account Fund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li> <li>-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li> <li>- 복권기금 (Lottery Fund)</li> <li>-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li> <li>-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li> </ul>
금융성기금 Financial Fund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li> <li>-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li> <li>-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amp; Fishing Houses)</li> <li>-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li> <li>-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li> <li>-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li> <li>-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li> <li>-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li> </ul>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li> <li>-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li> <li>-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li> <li>-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li> <li>-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li> <li>-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li> <li>-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li> <li>-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li> <li>-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li> <li>-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li> </ul>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대응기금(Korea Climate Action Fund)</li> <li>- 낙동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li> <li>-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li> <li>- 농산물가격안정기금(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amp; Price Stabilization)</li> <li>-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li> <li>-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li> <li>- 농지관리기금(Farmland Management Fund)</li> <li>-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li> <li>- 문화예술진흥기금(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li> <li>- 문화재보호기금(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li> <li>-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li> <li>- 방송통신발전기금(Broadcasting &amp;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li> <li>- 범죄피해자보호기금(Crime Victim Protection Fund)</li> <li>- 보훈기금(Patriots and Veterans Fund)</li> <li>- 사법서비스진흥기금(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li> <li>- 사학진흥기금(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li> <li>-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li> <li>- 석면피해구제기금(Asbestos Damage Relief Fund)</li> <li>-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Micro Enterprise &amp; Market Promotion Fund)</li> <li>- 수산발전기금(Fisheries Development Fund)</li> <li>-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li> <li>- 언론진흥기금(Korea Press Fund)</li> <li>- 양성평등기금(Gender Equality Fund)</li> <li>-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li> <li>- 영화발전기금(Korean Film Development Fund)</li> <li>- 원자력기금(Atomic Energy Fund)</li> <li>- 응급의료기금(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li> <li>- 임금채권보장기금(Wage Claim Guarantee Fund)</li> <li>-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li> <li>-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li> <li>-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li> <li>- 전력산업기반기금(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li> <li>- 정보통신진흥기금(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li> <li>- 주택도시기금(National Housing &amp; Urban Fund)</li> <li>-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Small &amp;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li> <li>- 지역신문발전기금(Local Press Development Fund)</li> <li>- 청소년육성기금&gt;Youth Fostering Fund)</li> <li>- 축산발전기금(Livestock Development Fund)</li> <li>- 한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li> </ul>
합 계	총 68개 기금

##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 Size of Fund Management



(단위 : 조원, In Trillion KRW)

구 분 Classification		운용규모 Fund Operation		
		2021년도 FY 2021	2022년도 FY 2022	증감률(%) Rate
운용규모(Total)		773.7	756.3	△2.2
수입	■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182.2	195.9	7.5
	■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184.6	173.2	△6.2
	■ 차입금 (Borrowings)	198.9	189.4	△4.8
	■ 여유자금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208.0	197.9	△4.9
지출	■ 사업비 (Project Cost)	169.8	181.1	6.7
	• 사회보험성 (Social Security Fund)	85.8	89.5	4.3
	• 사업성 (Project Fund)	72.0	80.7	12.1
	• 금융성 · 계정성 (Financial/Account Fund)	12.0	10.9	△8.8
	■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2.6	2.7	3.3
	■ 정부내부지출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371.7	347.1	△6.6
	■ 여유자금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229.5	225.4	△1.8

## 03 기금수입

### Fund Revenues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총계(Total)	1,959,077	1,731,594	1,893,624	1,979,042	7,563,337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60,586	26,000	—	40,462	227,049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6,864	760,732	1,660,016	5,812	2,433,424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91,829	47,906	—	28,216	267,951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24,284	27,086	—	—	51,370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99	1,305	—	499	1,903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10,524	8,110	—	100	18,734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29,308	12,753	—	2,510	44,572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737,131	103	—	570,188	1,307,422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7,439	7,350	—	3,314	28,102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13,452	3,197	—	2,726	19,375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741	795	—	670	2,205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370	487	—	64	921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4,511	902	—	4,791	10,203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7,493	29,220	—	500	37,212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561	1,785	—	988	4,334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1,320	—	—	419	1,738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	12,776	3,779	—	16,926	33,481
기후대응기금 (Korea Climate Action Fund)	7,306	17,288	—	—	24,59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525	—	—	10	2,535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349	14,175	—	1,048	15,57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4,430	1,300	—	16,299	22,02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4,293	—	—	1,548	25,8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266	266	—	25	55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430	750	—	270	1,45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45	23,938	—	239	24,222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6,118	12,573	—	4,093	32,784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657	11,396	—	449	14,502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	9,829	912	—	33,486	44,227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611	3,009	—	1,621	5,240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113	1,406	—	31	1,55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8,486	25,442	—	38,189	72,118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6,835	5,270	—	1,805	13,91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40	942	—	19	1,001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보호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2,113	2,319	—	2,391	6,823
복권기금 (Lottery Fund)	64,981	2,389	—	10,194	77,56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59,840	9,877	—	63,223	132,94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1,016	312	—	498	1,826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1,647	1,524	—	510	3,68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468	154	—	6,295	6,917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966	343	—	461	1,77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90,558	29,878	—	60,971	181,407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149	7	—	165	32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28,368	68,278	—	1,003	97,649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5,737	530	—	3,001	9,26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	76	888	—	414	1,378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6,805	2,120	—	91,956	120,881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3	6,915	—	352	7,271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324	5,956	—	402	6,682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53	—	—	129	38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951	—	—	471	1,421
영화발전기금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487	800	—	718	2,004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31,836	—	—	134	31,970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18,528	326,815	11,310	509,120	865,773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3,361	—	—	1,632	4,994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1,850	2,619	—	171	4,639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5,809	1,018	—	2,819	9,64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540	12	—	2,090	2,64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4,259	130	—	332	4,7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64,7834	5,580	—	5,331	18,746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22,843	32,142	—	7,338	62,324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6,440	10,850	—	2,060	19,35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13,201	55	—	28,844	42,100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200,458	151,019	180,000	396,965	928,443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41,754	12,566	42,298	—	96,618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2	83	—	11	95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26	1,462	—	263	1,751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5,672	4,773	—	—	10,445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5,304	—	—	1,460	6,763

## 04 기금지출

### Fund Expenditures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총 계(Total)	1,811,405	26,998	3,470,716	2,254,218	7,563,337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87,228	1,177	1,767	36,876	227,049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114	1	2,426,582	6,728	2,433,424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221,805	753	775	44,618	267,951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1	1	51,085	283	51,370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1,036	7	244	617	1,903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13,653	6	3,710	1,364	18,734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34,629	1	6,950	2,992	44,572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309,190	5,459	—	992,773	1,307,422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7,415	311	6,701	3,675	28,102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10,343	28	5,800	3,204	19,375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539	142	760	764	2,205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616	8	6	290	921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6,099	—	3	4,101	10,203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36,557	13	—	643	37,212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2,585	221	198	1,330	4,334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1,242	27	—	469	1,738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	14,652	2,084	1,950	14,794	33,481
기후대응기금 (Korea Climate Action Fund)	23,540	22	20	1,013	24,59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402	42	—	92	2,535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2,690	24	1,955	902	15,57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3,540	548	—	17,941	22,02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3,735	560	47	1,500	25,8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546	0	—	11	55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1,000	6	—	444	1,45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23,941	2	12	267	24,222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7,106	837	11,673	3,168	32,784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3,630	214	229	429	14,502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	7,012	1,281	—	35,933	44,227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3,656	224	30	1,330	5,240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1,476	1	41	33	1,55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423	14	25,000	45,681	72,118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12,497	43	144	1,226	13,910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826	0	26	148	1,001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1,244	10	1,808	3,761	6,823
복권기금 [Lottery Fund]	46,549	11	25,096	5,908	77,56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55,508	538	486	76,408	132,94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753	0	300	773	1,826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1,971	85	1,220	406	3,68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153	109	—	6,655	6,917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412	12	406	941	1,77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84,658	4,186	17,000	75,563	181,407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218	19	—	85	32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79,660	632	17,358	—	97,649
수산물전기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5,216	20	1,000	3,032	9,26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	952	1	—	425	1,378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31,899	3,696	—	85,287	120,881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6,789	482	7,271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5,956	0	112	614	6,682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11	2	—	169	38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873	18	—	530	1,421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영화발전기금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978	122	10	894	2,00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808	36	24,000	7,126	31,970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	9	323,789	541,975	865,773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3,251	13	—	1,729	4,994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2,756	3	1,781	100	4,639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6,848	160	1,000	1,638	9,64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594	4	1,000	1,044	2,64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3,852	46	—	823	4,7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6,874	789	5,003	6,080	18,746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28,999	80	25,074	8,171	62,324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17,322	210	423	1,395	19,35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3,967	688	2,320	35,124	42,100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338,062	4	431,353	159,024	928,44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57,748	1,323	37,546	—	96,618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83	6	—	7	95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493	0	31	226	1,751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9,604	18	104	720	10,445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5,206	93	—	1,464	6,763

#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별첨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 2022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2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강병중	예산관리과 과장	종합 편집
이국희	예산관리과 사무관	"
구본녕	예산관리과 사무관	"
김경연	예산관리과 주무관	"
홍현아	예산관리과 주무관	"
박상우	예산총괄과 서기관	제2부 제1장 2022년도 나라살림 종합
유동훈	예산총괄과 사무관	"
권혁순	예산총괄과 사무관	"
김정수	예산총괄과 사무관	"
이성민	예산총괄과 사무관	제3부 중 예산통계
신형진	예산총괄과 사무관	"
김재영	예산총괄과 주무관	"
천혜린	예산총괄과 주무관	"
김태곤	예산정책과 과장	제2부 제1장 2022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부 제2장 2022년도 재원배분 방향,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최상구	예산정책과 서기관	"
하치승	예산정책과 사무관	"
장준희	예산정책과 사무관	"
윤홍기	예산정책과 사무관	"
안준영	예산정책과 사무관	"
문근기	예산정책과 주무관	"
전광호	예산정책과 주무관	"
계강훈	예산기준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정민철	예산기준과 사무관	"
이재철	예산기준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서혜경	예산기준과 사무관	"
박경훈	인력예산팀 팀장	"
곽인수	인력예산팀 사무관	"
차경은	인력예산팀 주무관	"
고정삼	기금운용계획과 과장	제3부 제2장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통계
이은숙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최창선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강민기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김정도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정민기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조성현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장보영	고용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보건고용분야
원선재	고용예산과 사무관	"
김지수	고용예산과 사무관	"
안재영	고용예산과 사무관	"
황현	고용예산과 사무관	"
곽정환	고용예산과 주무관	"
권종각	교육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교육 분야
김형은	교육예산과 사무관	"
송기선	교육예산과 사무관	"
김이현	교육예산과 사무관	"
송준식	교육예산과 사무관	"
한연지	교육예산과 주무관	"
정사랑	교육예산과 주무관	"
남동오	문화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신경아	문화예산과 사무관	"
정효상	문화예산과 사무관	"
원봉희	문화예산과 사무관	"
이동휘	문화예산과 사무관	"
권동한	문화예산과 주무관	"
박수현	문화예산과 주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이선호	기후환경예산과 사무관	제2부 제3장 환경 분야
남기범	기후환경예산과 주무관	"
허승철	국토교통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SOC 분야
김남희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김재오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김형욱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박성준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임상균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오미화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김위정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윤지원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이상희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이상협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김정아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신지호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김동훈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주무관	"
진선홍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주무관	"
이성원	농림해양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김민석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신동호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홍광표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곽민욱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안광선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최항	농림해양예산과 주무관	"
유승우	농림해양예산과 주무관	"
정유리	연구개발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R&D 분야
구정대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임주현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이상후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유이슬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최경남	연구개발예산과 주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연영민	연구개발예산과 주무관	"
박정현	정보통신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김병철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김기동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이상현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이숙경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이성국	정보통신예산과 주무관	"
장윤정	복지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보건·복지·고용 분야
류재현	복지예산과 사무관	"
이동석	복지예산과 사무관	"
이미숙	복지예산과 사무관	"
김다현	복지예산과 사무관	"
김희태	복지예산과 주무관	"
문강기	복지예산과 주무관	"
박재형	연금보건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제2부 제3장 보건·복지·고용 분야
김낙현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박해강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전유석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조강훈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양경모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오상식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강준모	지역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성인영	지역예산과 사무관	"
박성현	지역예산과 사무관	"
문성호	지역예산과 사무관	"
조기문	지역예산과 사무관	"
윤동형	지역예산과 주무관	"
강혜숙	지역예산과 주무관	"
김유정	안전예산과 과장	"
정윤홍	안전예산과 사무관	"
최대선	안전예산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김민정	안전예산과 사무관	"
김민주	안전예산과 주무관	"
박호성	법사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공공질서·안전 분야
조병규	법사예산과 사무관	"
정주현	법사예산과 사무관	"
최동호	법사예산과 사무관	"
강민서	법사예산과 사무관	"
홍단기	법사예산과 주무관	"
천민지	법사예산과 주무관	"
한재용	행정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외교·통일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성기웅	행정예산과 사무관	"
박주선	행정예산과 사무관	"
김진수	행정예산과 사무관	"
고상덕	행정예산과 사무관	"
박형민	행정예산과 주무관	"
박선영	행정예산과 주무관	"
서영환	지방재정팀 팀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박용환	지방재정팀 사무관	"
조승호	지방재정팀 사무관	"
장승대	국방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국방 분야
이만구	국방예산과 사무관	"
강보형	국방예산과 사무관	"
최지애	국방예산과 사무관	"
김진수	국방예산과 사무관	"
송유민	국방예산과 주무관	"
정동영	방위사업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정록환	방위사업예산과 서기관	"
박영식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노영래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김기호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이용호	방위사업예산과 주무관	"

- 예산개요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개요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http://www.moef.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

-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20-10
- 발 행 처 기획재정부
- 발 행 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 발 행 일 2022년 1월
- 연 락 처 Tel. 044-215-7191  
Fax. 044-215-8041



